

1편 실전문제집 수정

25페이지 3. 행정국가하에서 행정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환경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신속적 조직형태가 강조된다.
- ② 행정기구가 확대되면서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공기업도 증가하였다.
- ③ 정치와 행정의 연속성과 순환성이 강조된다.
- ④ 광역행정과 신중앙집권화 현상으로 행정조직도 집권화가 촉진되었다.
- ⑤ 행정이 자원배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 행정국가하에서 행정은 행정적으로는 광역행정이, 정치적으로는 신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진 반면, 조직 내부적으로는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분권화가 촉진되었다.

13. 정부기능이 확대되었다는 근거논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투표담합(log-rolling)
- ② 초과수요로 인한 공채발행
- ③ 정책정보에 대한 높은 수집비용
- ④ 국고보조금과 재정착각
- ⑤ 노동집약적 성격에 따른 Baumol의 병(病)

[] 투표담합은 비효율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므로 과다공급설에 해당된다. ② 공채발행은 선심성 사업의 확대를 통한 공공재의 과다공급이 이루어진다. ③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비용이 수집에 따른 편익보다 크면 정보수집노력을 하지 않게 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확대에 저항하게 된다. 따라서 과소공급설의 근거에 해당된다(합리적 무지). ④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자치단체에게 용도를 지정하여 특정재원으로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자치단체와 주민의 입장에서는 세입과 세출 괴리현상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재정착각을 하게 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 따라서 과다공급설의 근거에 해당된다. 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비용체감이 곤란하여 생산성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건비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를 Baumol의 병이라 하며 과다공급설의 근거이다.

24. 주인-대리인이론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위임자를 움직이는 유인을 강조
- ② 이기적 존재로서의 행위자와 행위자 간 이해상충을 가정
- ③ 일상화된 업무, 업무수행결과의 측정곤란 등인 경우 시간급이 적합
- ④ 조직 구성원의 병리현상을 설명하는 데 기여
- ⑤ 공무원은 국민의 수탁자(trustee)로서 그의 권한은 공익추구라는 상호작용 속의 책임감에 근거한다.

[] 위임자(truster, 주인)을 움직이는 유인이 아니라, 수탁자(trustee,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을 강조한다. ③의 경우 시간급이 적합하며 위임자와 대리인 간 목표의 차이가 크고 직무행태를 감시하기 어려운 반면, 업무수행성과를 측정하고 용이할 때는 성과급을 사용하도록 처방한다. ④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병리현상이 발생한다.

49. 정부규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합행위와 부당내부거래금지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규제이다.

1. ① 2. ② 3. ④

- ② 분양가상한제는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경쟁적 규제이다.
- ③ 환경오염부담금 부과 등의 간접규제의 경우 민간재량성은 큰 반면, 규제효과성은 떨어진다.
- ④ 경쟁적 규제는 지대추구와 포획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 ⑤ 경쟁적 규제는 다수의 경쟁자 중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는 규제로서 이 경우의 재화는 희소성으로 인하여 정부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표준건축비에 택지원가를 더해 결정하는 제도로서 가격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이다. 경쟁적 규제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규제를 가하는 규제(□□ 유선방송인허가 등)로서 독점적 이익을 계속 향유하고자 하는 지대추구가 발생하기 쉽고 이에 따라 공무원 포획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⑤에서 재화는 항공노선, 주파수대 등이다.

51. 지대추구이론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여기서 지대란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을 말한다.
- ② 지대추구행위는 기술개발을 통한 독점적 이익의 획득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③ 독점적 이익을 영속화하기 위하여 비생산적 지출을 하는 행위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며 이러한 후생손실 영역을 Tullock의 사각형이라 한다.
- ④ 지대추구는 주로 독점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의미하므로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52. 포획(capture)현상의 발생원인이 아닌 것은?

- ① 공무원은 경쟁의 압력이 없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개념이 약하다.
- ② 공무원은 규제기업에 비해서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다.
- ③ 공무원은 피규제기업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 ④ 공무원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있다.
- ⑤ 공무원은 상급자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

①은 X-비효율성(관리상·기술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59. 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규제개혁의 목표는 부패방지, 경쟁촉진, 삶의 질 향상에 맞추어야 한다.
- ② 규제의 전체 총량을 줄이는 차원에서 사회적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여야 한다.
- ③ 규제예산제(regulatory budget)는 정부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경제적 부담을 인식시켜주는 예산제도이다.
- ④ 국내 현실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국제적 기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Negative System에서 Positive System으로의 사고 전환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 규제는 줄여 나가되,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 규제의 효과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규제에 비하여 포획·지대추구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고 사회적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③ 규제예산은 규제기관이 수행한 규제행위의 결과로 초래될 수 있는 비용을 화폐단위로 표시하여 각 규제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규제예산의 상한액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규제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규제예산이 비용으로 상한선을 설정한다면, 총량규제는 건수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⑤ Positive System(허용사항명시 ⇨ 나머지는 다 금지, 기업이 입증책임)에서 Negative System(금지사항 명시 ⇨ 나머지는 다 허용, 정부가 입증책임)으로 전환되는 것이 규제개혁의 방향이다.

답 : ⑤

67.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조직외부목표를 소홀히 하는 내부효과가 존재한다
- ② 비용부담과 편익향유의 절연으로 비용가치에 둔감하다.
- ③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발생한다.
- ④ 공공재의 정부 독점공급적 성격으로 인하여 기술적 비효율성 측면의 낭비요소가 강하다.
- ⑤ 번문옥례, 할거주의 등 관료제의 역기능이 존재한다.

①은 내부성(내부효과≠외부효과 ∴ 내부효과 중시, 외부효과 소홀)에 대한 내용이다. 내부효과는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는 현상으로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거래현상이며 정부실패와 무관하다.

47페이지

72.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공공서비스의 과잉공급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사회가 다원화되고 민권이 신장함에 따라 정책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② 투표거래(log rolling) 등 왜곡된 정치과정으로 정책수요가 증가한다.
- ③ 정치인들의 왜곡된 보상체계가 공공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야기시킨다.
- ④ 편익을 보는 비조직화된 다수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조직화된 소수가 압도되는 "거시적 절연" 현상은 Wilson의 고객정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 ⑤ 민선 자치단체장의 의욕적인 경영마인드는 공공서비스의 과잉공급을 초래할 수 있다.

[[]] 거시적 절연현상(편익향유하는 다수가 비용부담하는 소수를 압도)은 재분배정책이나 Wilson의 기업가적 정치(비용을 부담하는 소수에게 포획되지 않고 다수입장에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서 나타난다. 반면 미시적 절연(편익향유하는 소수가 비용부담하는 다수를 압도)은 Wilson의 고객정치에서 나타난다.

73.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행정 성과평가의 곤란성은 내부목표와 외부목표를 괴리시킨다.
- ②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X-비효율성은 Schick의 3가지 예산규범 중 총량적 재정규율 위반에 해당된다.
- ③ 비용과 편익의 절연현상으로 인하여 비용의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과소공급이 발생한다.
- ④ 의회, 정당, 이익집단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생산기술이 명확해진다.
- ⑤ 정치인들이나 잦은 순환보직을 하는 공무원들은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낮게 평가하므로 사회의 시간적 할인율이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 ①은 내부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최신기술에 집착하는 것은 내부성이며 X-비효율성(관리상·기술상 비효율성)은 최신기술의 미사용이다. X-비효율성은 Schick의 3가지 예산규범 중 운영상 비효율성에 해당된다. 총량적 재정규율은 지출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③ 비용과 편익의 절연현상은 비용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과다공급을 야기한다. ④ 행정과정에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므로 생산기술이 불명확하다. ⑤ 임기가 짧은 정치인이나 순환보직하는 공무원들은 현재를 중시하므로 장기보다는 단기의 이익과 손해의 현재가치를 높게 평가하므로 할인율이 높게 나타난다.

75. 정부실패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파생적 외부효과 : 대가지불없이 타 경제주체에게 손실을 부과
- ② 내부성 : 조직외부의 목표를 편익계산에 반영
- ③ 도덕적 해이 : 시민의 정보부족을 악용하여 사적 이해를 추구
- ④ X-비효율성 : 관리상기술적 비효율성으로서 배분적 비효율성과 인과관계
- ⑤ 관료의 지대추구 : 규제에 의한 독점적 이익 형성과 비생산적 지출

①은 외부불경제로서 시장실패 현상이다. 파생적 외부효과(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가 정부실패현상이다. ② 내부성은 조직내부(관료조직)의 사적 목표를 편익계산에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내부목표와 외부목표의 괴리현상으로 공익이 저해된다. ④ X-비효율성은 배분적 비효율성과 무관하다. ⑤ 민간의 지대추구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98번 대체

98.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 ③ 구입중서 방식은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④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해설 : ④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은 인허가(면허, Franchises)에 해당된다. 계약방식은 위탁계약으로서 정부가 민간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생산케 하는 방식이다. 답 : ④

56페이지 102번 대체

102. 중간조직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형성배경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소비자통제이론은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가 생겨난다고 본다.
- ② 계약실패모형은 소비자들이 제품정보에 대한 인식적 한계 때문에 민간기업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기 원하므로 비영리단체가 생겨난다고 본다.
- ③ 다원화이론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의 생산은 사회의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 ④ 관청형성모형(P. Dunleavy)은 외부분봉형의 정부조직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예산팽창의 이론적 기초가 되며 관료예산극대화설과 맥을 같이 한다.
- ⑤ 상호의존이론은 정부와 비영리섹터 부문 간의 상호의존성 증가를 민간비영리단체의 생성요인으로 본다.

관청형성모형은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설을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이다. 관료예산극대화설은 관료가 예산이라는 금전적 효용을 중시한다는 이론인 반면, 관청형성모형은 관료가 금전적 효용보다는 업무적 효용(계선기능보다는 참모기능을 선호)을 중시하므로 계선기능 중 집행 업무를 분봉하면서 중간조직이 생성된다는 이론이다.

106. 비정부조직(NGO)의 특성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율적 운영을 위한 내부장치를 가지고 있다.
- ② 일회적 또는 일시적 모임이 아닌, 지속적 모임이다.
- ③ 공익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직의 경계는 경직적이다.
- ④ 정부와 시장사이의 제3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민간의 조직으로서 공적 조직이나 공·사(公·私) 혼합조직은 NGO가 아니다.

[] 비정부조직은 자발성 즉,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형성·운영되는 조직으로서 참여자의 자격 제한은 별로 없으며 조직의 경계는 느슨하다.

107. NGO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 ① 권위주의적 정부는 자율형 NGO와 협력관계를 갖는다.
- ② NGO는 자연발생적으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UN과는 관계가 없다.
- ③ NGO는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
- ④ NPO는 비영리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NGO와 다르다.
- ⑤ NGO는 책임성과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 때문에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

① 권위주의적 정부와 자율형 NGO는 갈등관계를 갖는다. ② NGO는 UN을 모태로 설립되었으며 UN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③ NGO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 ④ NPO와 NGO는 오늘날 거의 동일시되며 공익적 활동을 하는 제3섹터 조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⑤ NGO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책임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으며 열악한 재정상태로 전문가를 고용하기 곤란(박애적 아마추어리즘)하므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다.

114번

NGO에 대한 내용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Coston은 제도적 다원주의에 대한 정부의 수용과 거부라는 관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억압형, 대항형, 경쟁형을 거부형태로 분류하였다.
- ② 시민운동으로서 NGO의 시작은 1863년 스위스의 국제적십자운동이며, 1945년 유엔헌장에 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NGO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 ③ 1970년대 말 복지국가의 위기를 맞아 공공재 생산을 위한 분권화와 외연화 전략이 선호됨에 따라 NGO가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④ Gidron의 중첩형은 정부와 NGO가 각각 독자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형으로서 Coston의 용역형 및 제3자정부형과 유사하다.
- ⑤ 시민사회가 식민화(colonization)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적 가치를 현장에서 실행하는 단체가 NGO이다.

[] Coston의 용역형 및 제3자정부형과 유사한 것은 Gidron의 협동형(정부 - 재원, NGO - 공급)이다.

118. 수익자부담원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공익은 여러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 ② 공익은 한 나라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이다.
- ③ 공익은 규범적·도덕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 ④ 대개 현실주의적·개인주의적 입장의 학자들이 주장한다.
- ⑤ 공익을 공동된 다수의 이익으로 보므로 소수의 이익이 희생될 수 있다.

[] ①②④는 과정설이다. ⑤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37. 공익의 과정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기능이 활발하고 다원화된 선진국에 적용된다.
- ② 비조직화된 국민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다.
- ③ 민주사회의 자유와 평등이념과 상충된다.
- ④ 이기적인 사익이 조정되고 타협된 결과가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 ⑤ 극심한 집단이기주의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대립되는 사익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47. 가외성의 효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창의성을 유발하여 준다.
- ② 타협과 협상의 사회를 유도해 준다.
- ③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 준다.
- ④ 여유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수용범위의 한계를 넓혀 준다.
- ⑤ 기능의 중첩성으로 인하여 목표전환현상을 야기한다.

[] 가외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목표전환현상을 완화시켜 준다.

53.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① 사회자본은 경제자본에 비하여 비가시적으로 축적되고 형성과정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며 가치하락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 ② 사회자본이 결여될 경우 사회적 행위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③ 사회자본은 정보확산의 능률성을 증가시켜 준다.
- ④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치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집단적인 자본을 제공해주므로 협력적 행태를 촉진시킴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한다.
- ⑤ 사회자본이 창출된 사회공동체에서는 규범정립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규제와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 ① 사회자본의 거래는 구체화되지 않은 의무, 불확실한 시간의 경계, 호혜성의 기대 등과 같은 조건이 작용하므로 경제자본에 비하여 형성과정이 불투명하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수록 가치가 하락되는 반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가치가 증가되므로 물질 자본에 비하여 가치하락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⑤ 사회자본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공동체는 계약과 법적 규제가 불필요하며 거래비용이 감소된다.

60. 행정이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 ④ 50. ④ 51. ③ 52. ② 53. ⑤

- ① 자유는 정치권력과 맞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와 정부의 간섭주의를 지향하는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 ② 선형적 공익을 강조하는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경험적 공익을 강조하는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을 인정한다.
- ③ Simon의 내용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수단으로서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주의에 입각하여 개인행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인행동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① 베를린(Berlin)은 간섭과 제약의 없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였다. 소극적 자유는 정부의 간섭을 배척하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두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옹호하는 진보주의에 바탕을 둔다. ④ 사회자본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시키므로 사회구조와 사회네트워크 내에서 개인행동의 효율성을 촉진시켜주고 개인적인 시민행태를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 행정이념으로서의 자유

- 1. 의의 : 자유는 정치권력과 맞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와 정부의 간섭주의를 지향하는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베를린(Berlin)은 간섭과 제약의 없는 상태를 '소극적 자유',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였다.
- 2. 소극적 자유관 - 개인주의 : 철학적 개인주의는 인간은 정치체제로부터 독립된 실재라는 관점에 입각하므로 개인주의적 철학에 기초한 정치이론은 필연적으로 제약의 결여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과 상통한다.
- 3. 적극적 자유관 - 진보주의 : 적극적으로 자유를 정의하게 되면 소극적 자유로 인하여 자유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 활동 및 간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난한 환경 때문에 대학에 진학할 수 없을 때 진학의 자유는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므로 가난한 환경하의 학생들의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정부활동의 결과로서 필요하다.

63. 행정철학과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타당성이 적은 것은?

- ① 국민의 요구에 잘 대응하는 것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은 민주성과 관련된다.
- ② 공익의 과정설은 여러 사회집단이 투쟁, 협상, 타협 등의 과정을 통하여 다수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도출된다고 인식한다.
- ③ 롤스(J. Rawls)는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④ 효과성은 조직 내의 조건과 관련된 반면, 능률성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조선시대 모범적 선비관을 나타내는 청백리사상은 '부패하지 않은 관리'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라, '맑고 깨끗한 관리'하는 적극적 의미가 담겨 있다.

[[]] 능률성이 조직 내 조건과 관련된 반면, 효과성(목표달성도)은 조직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66. 행정이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명확한 경계구분
- ② 신뢰관계와 파트너십의 강조
- ③ 공공정책과정의 시민사회 개방과 정부기능의 민간화 촉진
- ④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환경보호에 대한 합의와 실천
- ⑤ 협의와 동의에 의한 상호작용 강조

[] ① 거버넌스는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정부만이 아니라 비정부부문 활동자를 포함하므로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경계구분이 모호해진다. ③ 거버넌스도 정부개혁에 있어서는 신공공관 리론과 유사하다. ④는 그린 거버넌스(Green Governance)에 대한 내용이다.

153. 포스트모더니즘(탈현대주의)에서의 행정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주체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진리의 기준들을 맥락 의존적(context-dependent)이라고 주장한다.
- ② 혼돈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문제의 설정과 해결에 있어서 주관적 해석은 배제된다.
- ③ 정책과정 내에서 다양한 가치이념을 인정하며 비이성과 비합리성을 포용한다.
- ④ 행정성과의 창출을 위해서 경직성을 완화하는 동시에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한다.
- ⑤ 기존 질서에 반대하며 국가와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 혼돈상황이 일상화되므로 상대주의적·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주관적 해석이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157. 담론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 ② 담론의 보증조건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논쟁적 긴장개념을 사용한다.
- ③ 선호의 외생성과 선호의 집합성을 전제로 하는 심의민주주의가 기반이 된다.
- ④ 관료영역에서 에너지 영역으로의 대체를 주장한다.
- ⑤ 소수담론의 경우 독단적 조작가능성과 비진실성을 이유로 반대한다.

[] 담론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심의민주주의는 선호의 내생성과 심의를 통한 올바른 선호의 발견 가능성 및 합리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선호의 외생성과 집합성은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62번 해설

① 체제이론은 내부 전환과정을 고려하지 않는다(전환과정=black box). ② 생태론은 구조기능주의로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므로 목표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 ③ 비판이론은 정치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인간해방을 추구하므로 주의주의, 반실증주의 입장이며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다. ④ 행태론적 접근은 외면적 행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외면적 행태가 모두 표출되기 곤란하므로 태도, 의견, 개성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태를 연구하게 된다.

143페이지 문제추가

169. 레짐이론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레짐이론은 엘리트론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자의 상대적 자율성을 부인하고 정부기구가 사적 투자에 종속된 경제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음을 강조한다.

- ② 레짐이론은 도시정치에 있어서 인과관계와 행태적 측면의 연구에 이론성을 강화해 줌으로써 정책 결정 구조 내부에 대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다.
- ③ 레짐이론은 특정 도시정권의 특색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간 역학관계를 분석하고 정부와 비정부조직의 지도자 간에 형성되는 동반자적 관계의 성격을 탐구한다.
- ④ 레짐이론은 도시정책 결정구조 속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좀 더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정책공동체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률성과 민주성의 최적선택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 ⑤ Stone의 레짐유형 중 도시의 성장추구와 쇠퇴방지를 위하여 토지이용을 변화시키는데 주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개발레짐이다.

해설 : 레짐이론은 정부기구가 사적 투자에 종속된 경제에 의하여 제약받고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경제결정론을 수용하지 않고 의사결정자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한다. 답 ; ①

*** Stoker와 Mossberger의 레짐유형**

구분	유기적 레짐	도구적 레짐	상징적 레짐
변화에 대한 인식	현상 유지	단기성과, 실용적 동기	변화지향
구성원간의 관계	높은 결속력과 합의	정치적 파트너십	경쟁적 동의
존속	안정적	단기적	과도적
대상	소규모 도시지역	국제적 행사 유치를 위한 레짐	발전·변화지향적 도시

*** Stone의 레짐유형**

구분	현상유지 레짐	개발 레짐	중산계층진보 레짐	하층기회확장 레짐
추구하는 가치	현상유지	지역개발·성장·발전	환경보호, 삶의 질 등	저소득층보호, 직업교육
구성원간 관계	친밀성이 강한 소규모 지역사회, 갈등없음	갈등심함	시민참여와 감시 강조	대중동원이 과제
생존능력	강함	비교적 강함	보통	약함

2편 정책

160페이지

16번 해설

정책전문가의 분석능력은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 과정에서 중요하며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사회 문제를 검토하여 정책문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하다.

161페이지 문제 추가

1. 아래 사례를 읽고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시오.

등록금넷 등 학생단체들은 후불제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업 후 상환제’ 시행시기를 2학기로 연기한다는 정부여당 입장을 비판했다. 각 대학 학생회장들도 이날 교육부 앞에서 이와 관련한 모임을 가졌다.

학생들은 “정부여당, 청와대와 교과부까지 나서서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한다고 수십 번 약속해놓고 어떻게 갑자기 2학기로 연기할 수 있단 말이나”고 반문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의 ‘1학기 무산 논리’에 대해 “국회, 특히 야당 때문에 1학기 도입이 무산됐다고 야당을 공격하고 ‘옛 먹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표현을 하기도 했다.

등록금넷은 “정부 추산으로도 100만명에 이르는 이 제도를 기다리던 대학생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며 “비록 2009년 안에 관련 법이 통과돼지는 않았지만, 여야 교과의 협의대로 1월말~2월초에 관련 법안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까지 조속히 확정해 2010년 1학기 안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안과 시행방안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2학기로 시행을 미룬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여당이 7월 달에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도, 2009년 국회 막바지에서야 관련 법안을 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여 빠르게 수정보완하여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 커녕 수수방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중략)

학생들은 “지금 전국의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피눈물나는 호소를 정부여당이 외면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불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도 이날 오전에 교육과학부 청사 앞에서 모임을 갖고 등록금인하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를 즉시 실시할 것을 호소했다.

<출처 : 경향신문 2010. 1. 7>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환제’ 관련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제도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이 5.8% 복리로 계산되는 고금리여서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애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이날 이들 법안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올해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 또 학생까지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하 생략)

<출처 : 한겨레신문 2010. 1. 18>

- ① 내부비용은 높은 반면, 외부비용은 낮다.
- ② 등록금 상환제는 재분배정책에 해당되며 등록금 상한제는 직접 규제이면서 보호적 규제에 해당된다.
- ③ 사회문제가 공중의제화를 통하여 정부의제화한 결과이다.
- ④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므로 정책내용은 상호 충돌되고 모순적이다.
- ⑤ 외부주도형의 경우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집단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구성원의 수는 많으나 재정력이 빈약한 집단이 사용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 등록금 상환제는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에 해당된다. 등록금 상환제는 채권 발행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그 편익을 대학생에게 나누어주는 분배정책에 해당된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이므로 맞지 않는다. 답 : ②

166페이지

6.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이익집단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Salisbury의 교환이론에 의하면, 조직기업가가 잠재적 집단 구성원에게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참여동기를 부여하면서 이익집단이 형성된다.
- ② 다윈론에서는 이익집단의 자기수정메커니즘 때문에 특수한 이익이 지배하지 않는다고 본다.
- ③ 잠재이익집단론은 소속구성원이 다른 이익집단에 중복소속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 ④ 이익집단 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갈등관계가 깊을수록 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은 약화된다.
- ⑤ 이익집단은 직능대표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대표제를 보완해준다.

[] ③은 중복회원론에 대한 내용이다. 잠재집단론은 정책결정자들이 잠재집단을 의식하기 때문에 특수이익이 정책결정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잠재집단론과 중복회원론은 특정이익집단의 전횡이 방지하는 자기수정기제 근거로서 Bentley와 Truman이 제시한 이익집단론의 주요내용이다. ⑤ 지역대표제를 보완하는 비례대표제는 직능대표적 성격을 띠므로 결국 이익집단은 지역대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79페이지 문제추가

1. 정책딜레마이론에 대한 서술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딜레마상황이란 주어진 맥락 하에서 선택을 전제로 하고 상충되는 가치가 선택상황 속에 동시에 나타나고 대안들과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그 중요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 ② 대립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요구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 경우 딜레마의 강도는 커진다.
- ③ 특정의 고객집단에 큰 영향을 줄 때, 그 고객집단이 조직화되어 있을 때, 결

정자가 고객집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딜레마의 강도가 커지고 내려진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기가 곤란하므로 집행이 형식화되기 쉽다.

④ 대안 간 표현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나 그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등 현실적 판단기준은 있으나, 상황적 변수로 인하여 선택이 불가능한 상태를 딜레마라 한다.

⑤ 딜레마의 유형으로는 주어진 딜레마를 주관적으로도 딜레마로 설정하는 일치된 딜레마, 반대로 주어진 딜레마를 주관적으로 딜레마로 파악하지 않는 무시된 딜레마, 딜레마가 아닌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하는 의사딜레마, 딜레마를 정확히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일치된 비딜레마가 있다.

해설 : 딜레마란 대안 간 표현된 가치들 간의 우선순위나 그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할 수 없는 등 현실적 판단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한 가치의 상태를 다른 가치의 상태로 치환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답 : ④

184페이지 10번 해설

⑤는 시네틱스 중 가상적 유추에 해당되는 지문이다. 가정분석은 상충되는 가정들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명확히 설정하는 기법이다(□□ 노숙자문제).

189페이지

26.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화폐단위로 측정하는 문제를 피하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보다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다.
- ②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요약해서 나타낸다.
- ③ 비용효과분석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효과에 고정시키고 적정성(최소비용기준, 최대효과기준)이 정책대안의 추천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비용편익분석과 다르다.
- ④ 비용편익분석은 비용과 편익이 함께 변동되는 반면, 비용효과분석은 어느 한쪽이 고정되어야 가능하다.
- ⑤ 최대효과기준은 비용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대안들을 제외한 다음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을 선정하는 방법으로서 불변비용분석이라고도 한다.

[[]] 비용효과분석은 측정이 용이한 비용에 대해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측정이 곤란한 효과에 대해서는 산출물 그대로 분석한다.

191페이지 추가

1. 다음의 분석기법을 차례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 |
|---|
| (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법 |
| (나) 비교대상이 되는 둘 이상의 집단들의 평균값을 비교하고 이 집단들의 평균값의 차이가 단순한 숫자상 차이인지 통계적 의미가 있는 차이인지를 분석하는 기법 |
| (다)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보고 문제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눈 다음,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 계층의 요소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들을 얼마나 |

만족시키는가를 들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이 평가기준에 따른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 또는 중요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각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요인분석 | 회귀분석 | 계층화분석 |
| ② | 요인분석 | 분산분석 | 계층화분석 |
| ③ | 상관분석 | 분산분석 | 계층분석 |
| ④ | 상관분석 | 요인분석 | 계층분석 |

해설 : (가)는 요인분석, (나)는 분산분석, (다)는 계층화분석의 내용이다. 보통 요인분석-회귀분석-분산분석의 기법 순서대로 활용한다. 계층분석은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의 일종으로서 정책문제의 원인을 계층적으로 발견해 나가는 기법이다. 답 : ②

192페이지 추가

1. 경기도는 관내 군별로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1개씩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낙관적인 견해(minimin)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A1 : 현재 직영 쓰레기소각장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A2 : 쓰레기소각장을 통폐합하는 방안
 A3 :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는 방안
 A4 : 직영 쓰레기소각장을 추가설치하는 방안

그런데 쓰레기소각 수요에 대한 미래의 상황은 S₁:수요감소, S₂:현상유지, S₃:수요증가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손실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S ₁	S ₂	S ₃
A1	20	30	40
A2	10	50	60
A3	40	10	100
A4	50	40	40

- ① A1 ② A2 ③ A3 ④ A4

해설 : minimin기준은 비용이 가장 작은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낙관적 행태이므로 비용이 가장 작은 상황은 S₁이며 이중 비용이 가장 작은 A₂(10) 대안을 선택한다. 답 : ②

194페이지

38.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모든 델파이 참여자들에게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문서로 의견 개진할 것이 요구되며 문서 역시 익명으로 회람되고 처리된다.
- ② 델파이기법은 정책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고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국한된다.
- ③ 비교적 먼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기법으로서 주관성을 띠게 되므로 설명방식에 따른 응

답의 조작가능성이 있다.

- ④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는 직관적 미래예측방법의 하나로서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를 촉진시킨다.
- ⑤ 대면접촉에서 오는 부작용을 피할 수 있지만, 익명성으로 무책임한 대답이 나올 수 있다.

☐ 델파이기법은 대안의 모색과 결과예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다. 즉, 의제설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은 물론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나 그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답 : ②

41. 정책델파이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 ① 처음에는 익명성을 유지하다가 상반된 주장이 나온 다음에는 직접 대면해서 토론한다.
- ② 각자의 의견을 통합집계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방법 이외에 상호 차이가 많이 나온 논점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므로 전문가나 결정자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③ 고의로 갈등을 조성하고 그로 인한 창의적인 대안과 결과의 산출을 기대한다.
- ④ 이해관계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집단은 이해관계자들을 배제하고 그 분야의 동질적인 전문가들로만 구성한다.
- ⑤ 컴퓨터를 통한 회의방식을 이용하여 익명상태의 의견교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직접대면의 필요성을 줄인다.

☐ 전통적인 일반델파이가 동질적인 전문가집단만 참여시키는 것인 반면, 정책델파이는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

197페이지 문제추가

1.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관료제 전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와 같이 행정조직은 하나의 비선형체제 또는 복잡적응체제라고 볼 수 있으며 환경의 복잡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연구한 복잡성이론은 더욱 중시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을 의미하는 복잡적응체제의 특질은?

(가) 체제 내의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게 미치는 영향이 순환고리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순환적인 특성인 자기인과성 또는 상호인과성은 요소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요소환원주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 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준다.

(나) 질서는 외생적 혹은 내생적 외부로부터 강한 무엇인가를 조직에 적용시켜서 조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자기의 특질을 파악하고 그 특질을 활용하여 조직을 성장시킨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지시보다는 상호조정과 자기규제로부터 질서가 창출될 수 있다.

- | | |
|----------|-------|
| (가) | (나) |
| ① 자기조직화 | 공진화 |
| ② 공진화 | 자기조직화 |
| ③ 초기치민감성 | 비선형성 |
| ④ 초기치민감성 | 경로의존성 |

해설 : (가)는 함께 진화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적응하는 "공진화"를, (나)는 자기 스스로 구

통제에 무력한 방법이다. ② 선발요인은 실험적 처리와 무관하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발생하는 요인으로서 외재적 요인에 해당된다. 내재적 요인은 실험적 처리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요인이다. ③ 통계적 비실험은 아무리 고도의 통계적 분석기법을 사용하더라도, 허위변수나 혼란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거할 수가 없으므로 내적 타당성이 저해된다. ⑤ 진실험은 양 집단의 동질성을 엄격히 확보하기 때문에 외재변수를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준실험이나 비실험에 비하여 내적 타당성이 높은 편이다. 반면, 진실험은 양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외적 타당성과 실험의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18. 다음 사례에 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A : 정부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30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 보험금 인하 등 다양한 “자녀 더 낳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B : 정책시행 1년 후 대상여성의 임신율이 15% 증가하였다.
- C : 이 기간 중에 A, B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 ① C를 제거했을 때 A가 B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 A와 B는 허위관계이며 C를 허위변수라 한다.
- ② B가 A와 C 양자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A와 B는 혼란관계이며 C는 혼란변수이다.
- ③ A를 실시한 대상집단과 A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다같이 특별시 및 광역시 거주 주민이라면 이 실험결과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며 이를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 ④ C라는 갑작스러운 상황발생으로 “자녀 더 낳기” 프로그램의 타당성이 왜곡되었다면 C는 역사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역사요인은 경쟁가설에 해당된다.
- [] ③의 경우는 양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각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므로 일반화가 곤란한 상황으로서 표본의 대표성 부족(추출과 시도의 상호작용)에 해당된다.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은 사전측정(pretest)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나온 결과를 사전측정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모집단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곤란한 것을 의미한다.

17. Schein의 복잡한 인간관과 그에 따른 관리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권한보다는 임무 중심의 조직설계
- ② 고도의 변전성을 가진 욕구체계
- ③ 개인차의 존중과 개별적 대우 등 진단가로서의 관리자 역할
- ④ 조직의 유동성과 적응성의 제고
- ⑤ 다원적인 조직화

[] ①은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따른 관리전략이다. 복잡한 인간관에 따른 관리전략은 상황적응적 관리에 입각하고 있다.

18. 복잡한 인간관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상황적응적 관리 및 융통성 제고
- ② 구성원에 대한 균질화세력의 작용
- ③ 개인차의 감지(感知)와 개인차에 맞는 관리
- ④ 집단적 유인의 강조와 집단자율관리체제의 도입
- ⑤ 역할과 조직상황의 변화에 따라 욕구도 변화

[] 복잡한 인간관은 인간의 욕구가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나며 고도의 변이성을 띠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관리자는 부하의 상태를 진단하고 개인차이를 존중하여 융통성 있는 관리전략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④는 사회적 인간관에 적용되는 관리전략이다. ② 복잡한 인간모형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실제 조직생활에서 인간행태의 일관성이 다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을 균질화시키는 여러 가지 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면밀히 관찰하면 제한된 범위 내의 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전제와 한정을 붙인 일반화를 시도할 수 있으며 상황적응적인 관리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오석홍).

35. 동기이론의 하나인 Skinner의 강화이론(조작적 조건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인간을 실험용 쥐처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불만족스럽거나 불쾌한 상태를 제거하여 기대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소극적 강화라고 한다.
- ③ 강화물은 사람에게 따라서 차이가 있다.
- ④ 행태주의자들의 동기이론이다.
- ⑤ 인간의 행동이 인간의 인지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 ⑤는 조작적 조건화이론(선행자극-행태적 반응-행태적 반응의 결과)과 인식론적 학습이론(의식적·적극적인 행동과 참여를 통한 학습)을 결합한 사회적 학습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사회적 학습이론은 외적 선행자극이나 결과로서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적 욕구, 만족, 기대 등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간과 그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본다.

1.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학습에 의한 공유
- ② 역사적 산물

- ③ 집합체적 · 공유적 특성
- ④ 통합성
- ⑤ 변동지향성

해설 : ① 조직문화는 본능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배워서 익힌 것이다. ② 조직문화는 역사적 산물로서 현재를 과거와 미래에 연결하며 신참자와 후속세대에 전수된다. ⑤ 조직문화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인위적인 변동에의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크든 작든 변동하지 않을 수 없다. 답 : ⑤

245페이지

14. 조직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네트워크구조는 모호한 조직경계로 구성원의 충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 ② 매트릭스구조는 수직적 계층이 없다는 점에서 수평구조와 유사하나 시간적으로 더 영속적이다.
- ③ 기능구조는 부서 간 조정이 곤란하고 집권적 구조를 강화시킨다.
- ④ 유기적 구조는 직무범위가 불명확하며 책임이 모호해진다.

[[]] 매트릭스구조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가 결합된 형태로서 수직적 계층도 존재하지만 이원적 권한체계로서 수평적 · 대각적 업무협조도 중요하므로 명평통일원칙에 위배되고 계층제워리가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

17. Matrix조직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비일상적 기술에 적합하며 사업관리의 구심점이 강화된다
- ② 인적 · 물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
- ③ 참여의 촉진으로 자아실현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용이하다.
- ④ 전통적 조직에 비하여 지속기간이 한정적이다.
- ⑤ 기술적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고 산출의 변동도 빈번한 경우에 적합하다.

[[]] ① 사업별로 관리자가 지정되므로 개별적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장할 구심점이 확실해진다. ② Matrix조직구조는 이원적 권한체계로서 명령계통의 이원화와 이중보고 때문에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결정이 지연되며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확한 책임한계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22.. 다음 중 탈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지위와 업무 간의 분명한 책임을 중시한다.
- ② 행정의 정당성과 권위를 회복하고자 한다.
- ③ 팀워크 중심의 참여와 성과를 중시한다.
- ④ 공식구조의 전문화를 지향한다.
- ⑤ 개별적 문제해결을 선호한다.

[[]] ③⑤ 탈관료제는 집단적 · 협동적 노력을 강조하므로 팀워크 중심의 참여와 집단적 문제해결을 중시하며 조직의 내부활동보다는 고객이 얻는 결과 및 행정성적을 중시한다. ②는 탈관료제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행정재정립운동의 내용이다. ①④는 전통적 조직의 특성이다.

30. 2008년 정부조직의 변화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국무총리의 보좌기능 및 사회갈등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조세심판원이 설치되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
- ② 정보통신부가 폐지되고 통신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우정사업과 정보통신산업정책은 지식경제부로, 디지털콘텐츠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
- ③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었다.
- ④ 기상청이 환경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었다.
- 기상청은 기존 과학기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다.

32.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이다.
- ② 준시장형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50% 이상 85% 미만인 공공기관이다.
- ③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 ④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지정·해제·변경을 하지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수시로 지정·해제·변경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 기획재정부차관이 부위원장이다.

33. 공공기관운영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기관통폐합, 기능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한다.
- ② 공기업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2월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3월말까지 그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며 2010년부터 공기업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결산일정 단축하였다.
- ③ 경영실적의 평가와 경영지침의 통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되, 정관인가와 기관장 계약 체결은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 ④ 공기업의 장은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준정부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 ⑤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2조원 이상의 대규모 준시장형 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반면, 준시장형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39.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관장은 다음연도를 포함한 3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사회 의결

- ② 황금주방식 - 테마섹(Temasek)방식
- ③ 계약방식 - 테마섹(Temasek)방식
- ④ 테마섹(Temasek)방식 - 계약방식

해설 : 각각 테마섹(Temasek)방식과 계약방식이다. 황금주방식은 황금주에 지정된 특정사항(ex. 국가이익에 반하는 결정시, 경영권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조정자가 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소수의 주식으로도 정부가 주요결정을 할 수 있다. 답 : ④

255페이지

46.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행정형 기관의 경우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되 예산상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 ②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다.
-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계약직 공무원이며 국무총리가 부여한 목표를 성실히 이행한다.
-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에는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⑤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인 반면, 통계청은 책임운영기관이 아니지만 한편 지방통계청은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다.

□ □ □ 중앙책임운영기관(특허청)은 청(廳) 중에서 설치하므로 청장인 기관장은 정무직이다.

□ □ □ 주의 : 2009년 4월 1일부터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와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264페이지

23번 해설 : 1998년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개별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행정심판전치주의가 폐지되었다. 따라서 청구인 또는 제3자는 해당기관에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청 또는 직근 상급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행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69페이지

7. 학습조직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전체 구성원의 참여와 강력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 ② 협력적 네트워크와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 ③ 직무의 합리적 분석과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 ④ 일선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하에 조직전략이 도출된다.
- ⑤ 공동체정신과 구성원 상호 간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

□ □ □ ③은 전통적 조직에 해당된다. ④ 학습조직은 전통적 관료제모형이 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문제해결이 최우선적 가치로 등장하게 된다.

17.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기부여와 참여정신이 고취되는 Y이론적 관리철학을 갖고 있다.

- ② 객관적 업무기준을 제시하므로 목표관리의 환류과정에서 조직구성원의 개인별 훈련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목표관리는 조직구조, 조직 내의 과정, 조직구성원들의 행태 등에서 많은 변화를 유도한다.
 - ④ 목표들 간에 일관성과 연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개인목표를 고려하기보다는 조직의 과업 목표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⑤ 내부 산출 목표를 중시하므로 비가시적 목표와 효과나 영향 등은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 [] 조직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과업목표와 구성원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처에 배치된 타부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속장관이 인사관리한다.
- ② 행정안전부소속의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 ③ 가·나 2개의 직무등급으로 성과관리 및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 ④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매 5년이 되는 때에 정기적격심사를 받는다.
- ⑤ 직업공무원제도는 존치되지만, 적격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신분보장 및 정년제도는 폐지되었다.

☐ ②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가 폐지되고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실시한다. ⑤ 적격심사 제도의 도입으로 직업공무원제도와 신분보장 및 정년제도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약화된 것이다. 답 : ⑤

15.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대상자를 성과계약 등 평가로 평정하고 절대평가의 방법에 따라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 ② 신분적 지위가 아닌, 직무의 난이도와 근무성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된다.
- ③ 장관은 부처에 관계없이 임용제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와 직접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 ④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거치는 역량평가는 수행하게 될 직무에 대한 지식을 필기시험으로 치르는 평가방법이다.

☐ ①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다. 최상위등급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상위 20%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 수의 하위 10%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급이라는 신분적 지위 대신 직무의 중요도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된다(직무성과급적 연봉제). ③ 대상자는 장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목표 평가기준 등을 직상급자와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④ 역량평가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 하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역할연기, 서류합기법,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평가자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제시된 직무상황에서 나타나는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사전에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답 : ②
* 서류합기법 : 다양한 형태의 모의 업무상황을 미리 준비해놓고 하나의 업무상황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이를 실제 수행하게 하는 방법.

16. 최근에 시행된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전문가 지향적이고 수평적 이동이 곤란한 인사관리가 폭넓은 시각이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다.
- ② 이익집단이나 의회 구성원들가 전략적 제휴를 맺는 관료정치 등 단일기관에서 근무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시정할 수 있고 목표달성을 위한 탄력적 인사가 가능하다.
- ③ 행정안전부의 승진심사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최고관리자인 대통령과 각 부처장관의 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과 통제기능은 강화되었다.
- ④ 연속하여 2년 이상 또는 총 3년 이상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은 때에는 수시적격심사대상이 되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된다.

☐ ①은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이며 우리나라는 부처간 할거주의를 혁파하기 위하여 도입된 측면도 있지만, 주로 계급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개방성과 성과관리 및 성과책임을 강조한다. 답 : ①

추가문제. 우리나라 개방형직위제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최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이다.
- ② 중앙부처와 달리, 광역자치단체는 5급 이상 직위의 10% 범위 내에서, 기초자치단체는 6급 이하의 직위에서 시행하고 있다.
- ③ 궁극적으로 정부의 대응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④ 개방형직위의 지정기준은 직무공동성, 정책통합성, 변화필요성이다.
- ⑤ 지정기준과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지만,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과 직위의 지정·변경 및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해설 : ④는 공모직위의 지정기준이며 개방형직위의 지정기준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필요성(혁신성), 조정성이다. 이중 조정성의 경우 조정성이 높게 요구되는 직위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답 : ④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지정 등**

구분	주체
지정기준과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	소속장관이 정하되,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한다.
직위의 지정·변경	소속장관이 정한다.(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폐지, but 개방형·공모직위 운영심의회의 심의는 거쳐야 함)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의 지정기준**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필요성, 조정성	직무공동성, 정책통합성, 변화필요성

21.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안전부 소속이 아닌 것은?

- 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 ②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③ 중앙징계위원회
- ④ 소청심사위원회
- ⑤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 ③ 공무원 복무 및 징계제도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중앙징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⑤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다.

25.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
-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 ③ 대법원장
-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 ⑤ 감사원 사무차장

☐ 특수경력직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정무직·별정직·계약직·고용직 공무원이 해당된다.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령이 정하는 정무직이며,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법령이 정하는 정무직이며, ③ 대법원장은 국회임명동의를 받지만 법원조직법에 법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정직이며,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1급상당 별정직이며, ⑤ 감사원 사무차장은 1급상당 별정직이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무직이지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 감사원 사무총장, 감사위원 : 정무직(차관급)
- 국회수석전문위원 : 별정직(1급상당)
-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임명동의를 받지만, 법관이 우선하므로 특정직(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

36. 직위분류제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 ① 요소비교법은 상대평가이면서 계량적 분석방법이다.
 - ② 점수법은 직무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직무요소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절대평가방법이다.
 - ③ 전문행정가 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 ④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 경력, 지식, 기술 등은 그 직무를 담당하는 구성원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서 파생된 보수체계이다.
- ④ 직위분류제는 인간(구성원)이 아닌, 직무를 중시하므로 직무수행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제도이다(爲官擇人). 따라서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경력·지식·기술 등은 사람이 아닌,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39.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 연방정부가 1923년 Classification Act를 제정하여 먼저 채택하였지만, 이전에 지방정부에서도 채택한 바 있다.
 - ② 사회적 출신배경이나 학력 등에 관계없이 직무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이에 적합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갖춘 직원을 충원하는 제도이다.
 - ③ 각 직위가 갖고 있는 직무수행의 복잡성과 책임성에 따라 직급별·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함으로써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
 - ④ 직급은 수직적 분류와 수평적 분류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직위로 구성된다.
 - ⑤ 공무원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에 몰입하므로 조직의 목표나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 ① 미국의 직위분류제는 1912년 시카고 시정부를 필두로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먼저 시행하고 연방정부에는 1923년 직위분류법(Classification Act)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④ 직급(□□ 행정9급)은 수직적 분류인 직렬과 수평적 분류인 등급이 교차하는 공통부분에 속하는 직위들로서 종류, 곤란도, 책임도가 모두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추가문제 :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수행의 결과인 산출을 중시하고 투입을 소홀히 여긴다.
- ② 직무를 분석단위로 삼고 거기에 주의를 국한하는 편협한 안목으로 인적자원관리를 일반 관리기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다.
- ③ 조직개편으로 직무가 없어지면 담당자도 퇴직하게 되므로 계급제에 비하여 신분보장이 약화된다.
- ④ 중신고용제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신규채용도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시점에서 실시하는 입구채용에 한정하지 않고 전직에 의한 중도채용도 드물지 않다.
- ⑤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능력을 제고한다.

해설 : 직위분류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투입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적인 산출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품목별예산제도와 같은 유사한 결함을 지닌다. 답 : ①

292페이지

12번 해설 수정

① 4급 이상이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5급 이하는 근무성적평가제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 ②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당해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대상 공무원과 평가자가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지 모든 공무원과 직접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③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는 확인자에게 신청하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4급 이상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으며 4급은 상대평가가 규정되지 않았으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추가문제 : 우리나라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5급 이하 평정의 경우 6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이 평가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 ② 평가자가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평정대상 공무원과 상호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 ③ 평가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무원에 대한 평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소속장관은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교육훈련·보직관리·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0. 1 시행)하여 평정결과의 공개를 원칙화하고 공개방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공무원 본인에게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기존에는 본인이 “요청 시 공개” 하였으나 “원칙적 공개” 하되 공개방법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답 : ③

18. 우리나라의 다면평가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해당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임의사항이다.
 - ② 평가자집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투명하게 선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 ③ 평가방법, 절차, 반영 등은 소속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결과는 반영하지 않는다.
 - ④ 평가단은 대부분 상사, 동료, 하급자로 구성되어 있다.
 - 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는 다면평가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 [] ①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한 공개는 의무사항인 반면, 다면평가 결과는 임의사항이다. ② 평가자집단은 업무유관자로 구성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 공무원임용규칙을 개정(2010. 1)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 결과를 제외시킴으로써

다면평가 결과는 더 이상 승진기준이 아니다.

295페이지

추가문제 : 구성원은 어느 하나의 고정된 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상호배타성을 전제로 한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된 근무성적평정 기법은?

- ① 주요사건기록법
- ② 목표관리제
- ③ 체크리스트 평정법
- ④ 행태관찰척도법 (Behavioral Observation Scales)

해설 : 행태관찰척도법은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것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과업행태까지 나열하되, 등급에서는 점수가 아닌 각 행동의 빈도수를 표시한다, (ex. 1등급은 거의 관찰하지 못한다. 5등급은 매우 자주 관찰한다.)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행태기준 척도척도법이다. 답 : ④

294페이지

23. 근무성적평정결과의 착오에 대하여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은?

- ① 총계적 착오는 평정결과가 언제나 과대 또는 과소하게 평정됨으로써 항상 관대화의 경향 또는 항상 엄격화의 경향을 보이는 현상이다.
- ② 엄격화 경향은 평정분포가 열등한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다.
- ③ 중요사건기록법은 시간적 착오를 방지할 수 있다.
- ④ 방어적 지각의 착오는 평정자가 자신의 고정관념에 부합되도록 왜곡시키는 현상이다.
- ⑤ 유형화의 착오(상동적 오차, stereo-typing error)는 피평정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부정확하게 평정하는 현상이다.

①은 체계적(규칙적) 착오에 대한 내용이다. 총계적 착오는 평정자의 평점기준이 불규칙하게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오이다.

추가문제 : 업무량이 많은 경우 속력도가 높다고 평가하거나 IQ가 높은 경우 업무지식도 많다고 속단하여 평가한 평정상 착오는?

- ① 연쇄적 착오
- ② 논리적 착오
- ③ 체계적 착오
- ④ 상동적 착오
- ⑤ 시간적 착오

해설 : 논리적 상관관계로 영향을 받은 경우로서 논리적 착오에 해당된다. 논리적 착오는 다른 평정요소로부터 객관적 영향을, 연쇄적 착오는 다른 평정요소로부터 주관적 영향을 받는 착오이다. 답 : ②

299페이지

4. 징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강등은 공무원신분은 유지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2/3를 감한다.
 - ② 감봉은 직무수행은 가능하나, 보수가 줄어들고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 ③ 정직은 1~3개월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되고 보수의 2/3가 줄어들며, 경력평정에서도 제외된다.
 - ④ 해임은 3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고 어떠한 사유에도 퇴직금의 전부를 지급받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반면, 파면은 5년간 공직취임이 제한되고 퇴직금의 1/2만 지급받는 등 연금법상 불이익을 받는다.
 - ⑤ 실적주의 인사행정 체제에서는 징계와 신분보장의 요청을 적당한 수준에서 조정하고 그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 [] ④ 금전적 비리로 인한 해임 시 재직연수에 따라 퇴직금의 1/4~1/8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2005. 7. 공무원연금법 개정). ⑤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업관주의의 폐해로 대두된 실적주의는 신분보장을 강조하므로 징계에 대한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이 관행이다.

301페이지

추가문제 : 보수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대외적 비교성을 보수조정의 기준으로 삼지만, 민간부문처럼 시장에서의 교환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 ② 대내적 상대성은 상하위 직급간 보수격차를 통하여 능력발전과 근무의욕의 유도를 가능하게 한다.
- ③ 보수이론 중 기대이론은 자신들에게 제공된 보상이 타인과 비교할 때 공평하다고 인지되도록 보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민간기업에 비하여 낮은 보수에 대한 불만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④ 직무급은 직위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며 직능급은 능력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로서 양자 모두 사전적 성격의 보수인 반면,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사후적 성격의 보수이다.
- 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강조하는 표준생계비 등도 고려하는 종합결정급적 성격이다.

해설 : ③은 동기부여이론 중 Adams의 공평성이론에 근거한 보수이론이다. 보수이론 중 기대이론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행위는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보수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답 : ③

추가문제 : 다음에 해당되는 보수체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직무를 기준으로 한 속직급과 사람을 중심으로 한 속인급의 혼합형태로서 일본에서 연공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수체계이다.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

하여 그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수를 우대하게 된다.

나. 숙인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의 객관적 가치만을 보수에 반영하며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충실하므로 개인별 보수 차등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보수 체계이다.

- | 가 | 나 |
|-------|-----|
| ① 직능급 | 직무급 |
| ② 직무급 | 직능급 |
| ③ 자격급 | 직무급 |
| ④ 직무급 | 자격급 |

해설 : 가는 직능급, 나는 직무급에 해당된다. 능력급에서 능력의 범위를 더욱 한정해서 직무별 능력을 기초로 하는 보수를 직능급이라 한다. 답 : ①

310페이지

11.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시행기관은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을 자율항목의 수당신설이나 성과급 추가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인력증원에는 활용할 수 없다.
 - ② 총정원의 3%범위 내에서 직제시행규칙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제상의 기준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적용한 운영정원을 분리하여 작성한다.
 - ③ 행정안전부는 기구 및 정원과 보수, 기획재정부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관부처이다.
 - ④ 봉급과 기본연봉은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 ⑤ 자율성을 부여한 사전적 통제제도 이지만, 성과급과 맞춤형 복지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 ①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하여 확보된 재원을 자율항목의 수당 신설 및 조정, 성과상여급과 성과 연봉 등 성과급의 추가지급, 맞춤형 복지에산증액 또는 인력증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봉급, 기본연봉 등 인건비 중 기본항목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02페이지

14.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 ② 기금제이면서 기여제이다.
 - ③ 선거직 공무원은 장기간 근속의 담보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 ④ 거치보수설이 통설이며 이 경우 연금은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된다.
 - 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한다.
- 기금으로 운영한다.

추가문제 : 2010년 공무원연금법의 개정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근 수당을 축소하고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기본급에 비례하는 연 급수령액과 상여금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므로 새연금법에 따르면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② 급여산정기준이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의 65%)에서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으로 변경되고 기

준소득월액의 7%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됨으로써 종전보다 더 많은 기여금을 납부한다.

- ③ 연금급여 지급개시 연령이 2010년 신규임용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다.
- ④ 급여산정 방식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직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됨으로써 연금소득이 감소된다.
- ⑤ 유족연금액을 2010년 신규임용자부터 종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었다.

해설 : 기존 연금법은 연금산정시 기본급과 정근수당을 합친 ‘월보수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급이 커지면 연금수령액과 기타 수당이 같이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컸다. 하지만 새 공무원 연금법 아래에서는 월보수액이 아닌,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연금지급액 산정 기준이 ‘최종 3년간 월보수액(기본급+정근수당)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평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당이 통폐합되어 기본급 비중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연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개정법에 따른 ‘전 재직기간 평균’은 개정이후 재직기간(2010년 1월 이후)만을 대상으로 하며, 개정 이전(2009년 12월 이전) 재직기간의 소득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니다. 답 : ①

307페이지 27번문제 해설

분권화의 경우 일선공무원의 재량권 확대로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집권화와 권력집중이 이루어질수록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분권화는 바람직한 관리방안으로서 공직윤리가 강조되는 배경으로 볼 수 없으며 공직윤리의 확보방안이다.

추가문제 : 재정의 운영과 규범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산적(離散的) 범주에 대한 결정은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결정(optimum choice)인 반면 연속적 범주에 대한 결정은 적정 수준의 금액을 선택하는 결정(optimum level)이다.
- ② 회소성은 주관적인 것이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인지된 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 가용재원이 점증적 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예산기획은 거의 없으며 관리상 효율성이 강조되는 경우를 만성적 회소성이라 한다.
- ④ Schick의 배분적 효율성이란 정부의 전략적 목표 및 우선순위와 해당 공공사업의 효과성 평가결과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⑤ 최근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은 유량 중심에서 유량 및 저량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해설 : ③은 급성회소성에 대한 내용이다. 만성적 회소성은 신규사업에 대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⑤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은 현금주의<유량(1회계연도 간 수입과 지출)>에서 발생주의<유량(손익계산서-1회계연도간 수익과 비용) 및 저량(대차대조표-특정시점에서의 자산, 부채, 자본)>로 옮겨가고 있다. 답 : ③

□ 공공부문에서의 회소성(Schick, 운영진)

구분	상태	예산운영
완화된 회소성	자원이 충분한 상태 (계속사업자금 + 증가분 + 신규사업자금)	-잉여예산으로 사업개발에 초점 -통제기능에서 계획기능으로 초점 -사업분석과 다년도예산편성에 대한 관심 (1960년대 계획예산의 도입배경)
만성적 회소성	일상적 예산부족 상태 (계속사업자금 + 증가분)	-지출통제보다 관리개선 초점 -사업의 분석과 평가는 소홀 -영기준 예산결정에 관심 (1970년대말 영기준예산이 이에 해당)
급성 회소성	가용재원이 점증적 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 (계속사업자금)	-예산관련 기획은 거의 없음 -관리상 효율성을 재강조 -최소한의 평가활동이 증가
총체적 회소성	계속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	-통제와 관리기능은 무의미 -회피형 예산편성(비현실적이고 부정확) -개도국의 반복적 예산편성

□ 재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기존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투입(input)과 통제 중심	성과(performance)와 평가중심
유량(flow) 중심	유량(flow)과 저량(stock) 중심
아날로그 정보시스템	디지털 정보시스템
관리자 중심	납세자 중심
몰성인지적 관점	성인지적 관점

추가문제 : 불황인 경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부족한 총수요를 보전하는 반면, 인플레이션기에는 재정지출을 줄여 과도한 총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Musgrave의 재정기능은?

- ① 경제성장 기능
- ② 경제안정 기능
- ③ 자원배분 기능

④ 소득재분배 기능

해설 : 문제는 Keynes이론에 바탕을 둔 재량적 재정정책으로서 경제안정 기능을 의미한다.

답 : ②

추가문제 : 예산의 형식과 효력에 대한 내용을 옳게 기술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산과 법률은 형식과 내용이 다르므로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법률을 가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은 법률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 ③ 예산주의가 법률주의보다 의회의 재정통제권이 크게 인정되며 영구세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 ④ 법률은 정부와 국회 모두가 제출할 수 있지만, 예산은 정부만이 제출할 수 있다.
- ⑤ 미국의 경우 특별예산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인정하고 개별항목 및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 예산이 세출법과 세입법과 같이 법률의 행태를 띠는 법률주의가 의회의 재정통제권이 크다. 법률주의는 일년세주의(매년 제정되는 세입법에 따라 징수), 예산주의는 영구세주의(세입예산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 효력을 가지는 별도 조세법에 따라 징수)를 기반으로 한다. 답 : ③

5. 국가재정법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예산안 제출일은 전년도 10월 2일까지이며 결산안 제출일은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이다.
- ② 예비비 계상한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한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경우 타당성을 재조사한다.
- ④ 추가정정예산의 편성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중대한 여건의 변화 발생, 법령에 의한 지출 발생 또는 증가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⑤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은 국가회계법에, 결산보고서 작성 제출에 관한 내용은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 예비비 계상한도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상한규정을 두었다.

16.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정보화함으로써 모든 계정의 변동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 ② 회계유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증기능으로 내부통제에 용이하다.
- ③ 발생한 거래시점을 기준으로 운용하므로 출납폐쇄기한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 ④ IMF가 설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을 운영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준다.
- ⑤ 자동이월(rolling-over)기능과 자동산출기능이 있어 매일의 종합적 재정상태를 즉시 알 수 있다.

[] ③ 출납정리기한은 결산을 하기 위하여 세입(1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세출(1회계연도 동안의 지출)의 출납사무를 완결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한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 시 기록하는 현금주의와 달리 거래발생사실을 기준으로 기록하게 되므로 출납폐쇄기한이 상대적으로 불필

요하다.

319페이지

추가문제 : 자치단체가 만기도래한 채권에 대해서 원금 10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상환한 경우 재정상태보고서에 옳게 표기한 것은?

차변		대변	
① 지방채상환	100억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0억원
이자비용	30억원		
②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0억원	지방채상환	100억원
		이자비용	30억원
③ 지방채상환	100억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0억원
④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0억원	지방채상환	100억원

해설 : ① 총 130억이라는 현금자산이 감소(자산감소)하였으므로 대변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30억원을 기입하고 지방채 100억원을 상환하였으므로(부채감소) 차변에 지방채상환 100억원을 기입함과 동시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였으므로(비용발생) 차변에 이자비용 30억원을 기입한다. 답 : ①

326페이지

45. 예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추가경정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만 편성이 가능하며 제출시기와 편성횟수는 제한이 없다.
- ② 준예산은 국회의 의결이 불필요하며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 ③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계에 있어서 의존형이 일반적이다.
- ④ 성과책임이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특별회계의 비중이 일반회계의 비중보다 낮아진다.
- ⑤ 수정예산은 실제로 4회 제출된 적이 있다.

☐ 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의결 직후부터 편성할 수 있으며 제출시기와 편성횟수는 제한이 없다. ⑤ 수정예산은 1970년예산안, 1981년예산안, 2009년예산안, 2010년예산안에 대하여 4차례 제출되었다. 이 중 2010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은 정부가 아닌, 의회 여당에서 제출하였다. 답 : ①

327페이지

24번 해설 추가 : 영기준예산은 의사결정단위(조직관리자가 독자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단위 또는 조직단위)를 확인하고 의사결정패키지(사업대안패키지와 증액대안패키지)를 작성하고 증액대안패키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구성원의 참여하에 상향적으로 작성해 나가고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순으로 작성된다.

26. 조세지출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세감면조치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효한 정책수단의 유형에 해당한다.
- ② 조세지출은 조세특혜, 합법적 탈세, 숨은 보조금이라고 하며 조세지출예산은 만성화된 조세지출에 대한 재정적 통제수단이다.

- ③ 조세지출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직성이 크다.
 - ④ 조세지출에 대한 정책적 신축성이 제고될 가능성이 크다.
 - ⑤ 조세감면이 국가수입에 차지하는 비율을 쉽게 알 수 있고, 과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을 파악할 수 있다.
- 조세지출예산은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조세지출에 의한 정책적 신축성이 저하된다.

28. 조세지출예산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가 곤란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 ② 조세지출에 대한 정책적 신축성의 저하로 상황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곤란해진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전 회계연도 실적, 당해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 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 ④ 2010년 1월부터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장이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⑤ 조세지출예산과 별도로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당해연도 직전 3년간 국세감면을 평균에 1천분의 5를 더한 것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29번 해설 수정 : ① 조세지출은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하여 특정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보조금 지급과 동일한 효과를 준다. ② 조세지출예산(TEB)은 1967년 서독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미국은 1974년에 도입되었다. ③ 조세지출은 직접지출이 아니라 간접지출이다. ④ 조세지출(간접지출)은 예산지출(직접지출)과 같이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으므로 신설이 용이한 반면, 법률에 규정되고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므로 예산지출에 비하여 지속성과 경직성이 더 크다. 답 : ①

31.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를 포괄하여 운영하고 있다.
- ② 산출지표는 1차적 산출물을 통하여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나 정책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③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제출시 성과계획서를, 결산안 제출시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성과목표관리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평가와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②는 결과지표에 대한 내용이다(ex. 직업훈련 수료자의 소득증가율). 산출지표는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ex.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 수). ⑤ 우리나라 성과관리는 성과목표관리제(FY-1 : 성과계획서 작성 - FY : 집행 - FY+1 : 성과보고서 제출)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평가(재정사업에 대하여 부처별 1/3씩 3년주기 평가)와 심층평가(자율평가 결과, 문제가 있을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심층적 분석)를 실시한다.

32.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기 전형적 모습은 성과주의예산과 계획예산에서 찾을 수 있다.
- ② 회계를 먼저 구분한 후 부처를 구분하므로 회계별로 각 부처가 시행하는 예산사업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세부사업 - 목의 순서로 편성한다.
- ④ 사업별 총액 범위 내에서 지출품목의 자율변경이 가능하다.
- ⑤ 단위사업별 예산규모의 파악과 사업별 예산대비 성과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와 결과의 환류를 통하여 성과책임이 강화된다.

프로그램예산은 부처별로 구분한 뒤 부처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한다.

342페이지

추가문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정보시스템, 통계분석시스템, 재정업무지원시스템,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작성되므로 재정출납의 실시간 관리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 ③ 재정정보의 정확한 통합관리로 공공부문 재정활동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④ 국채 및 국민부담 이자 증가 등의 위험지표를 통하여 국가재정의 위험관리가 가능하다.
- ⑤ 사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재정통계 및 분석자료가 공개된다.

해설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로 자동회계처리가 되더라도 전자고지·납부체제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수납하고 금융권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재정자금 출납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답 : ②

345페이지

6.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반면, 결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부처에 시달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정기국회가 개최 후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 ④ 전년도 결산안은 익년도 예산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편성지침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7. 예산심의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치성이 매우 강하다.
- ② 점증주의 체제하에서는 관련기관이 선형적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강제적 특별위원회로서 2000년부터 상설화되었다.
- ④ 상임위원회가 증액한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증액지향적인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는 삭감지향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

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을 삭감할 경우에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18번 해설 추가

③ 계속비 사업은 준예산에 포함시켜 편성할 수 있다.

* 준예산 해당경비 : ㉠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22번 해설 추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더라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거나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와 국회의결 요구 및 감사원장 요구시에는 타당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

28.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계순잉여금은 초과 세입액과 불용액을 포함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시킨 것이다.
 - ②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③ 교부금 정산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세계잉여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전의결이 불필요하다.
 - ⑤ 국채 또는 차입금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 [] 국채 또는 차입금원리금의 상환을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

33. BTL 방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 ① 정부는 민간의 유희 자금을 공공투자로 유치하여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고 자금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② BTO나 BOT 방식에 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에게 부담이 없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이 배제된다.
 - ③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점에서 BOO 방식과 구별된다.
 - ④ 민간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보장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정부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 ④ 정부가 적정 수익률을 반영한 임대료를 민간조직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34. 구매행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표적인 낙찰제인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으로 최저가낙찰제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② 조달청은 2005년 1월부터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를 도입하였다.
- ③ 최근 OECD 선진국은 다시 각 부처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부개혁으로 분산구매로 전환하고 있다.
- ④ 조달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조달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 ⑤ 2009년부터 공급자 중심의 역경매제도를 도입하였다.

28. ⑤ 29. ① 30. ④ 31. ③ 32. ④ 33. ④

① 적격심사낙찰제는 변별력 부족으로 경쟁력 있는 우량업체를 선별하지 못하고 운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는 등 부작용이 있는데다가 최저가낙찰제에 비하여 높은 낙찰률을 보임으로써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2001년부터 1,000억 이상의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병행한 최저가낙찰제를 다시 도입한 데 이어 2003년에는 500억 이상, 2006년에는 3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② 조달청이 2005년 1월부터 도입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는 품질이나 성능이 비슷한 물품들을 다수의 공급자들과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고객)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이다. ④ 1994년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되었다. ⑤ 역경매제도는 수요자보다 공급자가 많은 입찰에서 공급자가 가격을 낮춰나가면 수요자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공급자를 선택하는 제도로서 수요자 중심이다. 답 : ⑤

354페이지

추가문제 : 2009년 지방계약법에 규정한 제도로서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는?

- ① 적격심사낙찰제
- ② 일괄입찰
- ③ 대안입찰
- ④ 최적가치낙찰제(Best Value)
- ⑤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해설 : ④ 최적가치낙찰제에 대한 내용이다. 자치단체의 경우 2009년 8월 지방계약법을 개정하여 최적가치낙찰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었다. 적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순이지만, 최적가치낙찰제는 최저가일 필요는 없다. 답 : ④

1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무의 전문성이나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는 예외적 기관이다.
- ② 역사적으로 각 부처의 할거주의 내지 직할주의로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 말 지방자치 재도입 직전에 극심하였다.
- ③ 자치적 분권이 아닌, 행정적 분권에 해당된다.
- ④ 소방서는 자치단체의 일선기관인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국가의 일선기관이며 1차 일선기관에 해당된다.
- ⑤ 중앙정부의 눈과 귀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전달 통로 또는 정책의 현장기능과 결정기능을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③ 자치적 분권은 행정기능과 통치권력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지방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의사·책임·권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분권인 반면, 행정적 분권은 지방에서 처리를 요하는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 행정기능과 통치권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특별행정기관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서울지방국세청은 2차 일선기관이며, 주민과 가까운 세무서가 1차 일선기관이다.

15.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 ② 자치단체에 비하여 한정적, 개별적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설립 및 해산은 법률에 의한다.
- ④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다.
- ⑤ 시·도의 광역적 조합만 인정된다.

☐ ①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② 자치단체는 일반적·종합적·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자치단체조합은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로 구성된 법인이므로 특정적·한정적·개별적 기능을 수행한다. ③ 법률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결과 감독기관(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에 의한다. ④ 주민이 아니라, 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한다. ⑤ 시·도 조합 뿐만 아니라 시·군·구 조합도 인정된다. 답: ②

16.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치단체 합의로 설치되며 설치된 후에는 지방정부들과는 별개의 독립적 법인격을 지닌다.
- ②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급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급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 ③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 ④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거나 헌법이나 법령에 의하여 가해진 법적·재정적 제약이나 채무한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현행법상 전부사무조합도 인정된다.

해설 : 현행법상 전부사무조합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답 : ⑤

19. 우리나라 광역행정방식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협의회는 공동처리방식으로서 법인격이 없으며 집행권이 없다.
-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면 규약으로 정한 공동사무처리권은 각 자치단체가 그대로 보유하고 각자 행사한다.
- ③ 자치단체장 등 협의체를 설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시·군 통합과 상급자치단체의 하급자치단체의 흡수도 광역행정방식에 해당된다.
- ⑤ 자치단체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되면 규약으로 정한 공동사무처리권은 자치단체로부터 조합으로 이관되며 조합에 이관된 사무에 관한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효력은 정지상태에 처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365페이지

추가문제 : 중앙의 지방통제에 대한 서술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자치단체장이 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해태하고 있는 경우 감독기관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할 수 있다.
- ② 이행명령에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독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④ 자치단체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 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시·도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고 시·군·구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답 : ⑤

367페이지

5번 해설 : 자치조직권은 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분담하기 위한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인 반면, 자치행정권은 자치단체가 배분된 기능을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무부장관은 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권, 위임사무불이행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권,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 등을 가지고 있어 자치행정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1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광역시는 자치구 외에 군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는 동 외에 읍과 면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설치되는 일반구는 임명직 구청장이 기관장이며 독자적 세원을 갖지 않는다.
- ③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한다.
- ④ 광역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및 명칭개편은 법률에 의한다.

[] 자치단체 간 법인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계변경은 대통령령, 법인격의 변경을 수반하는 구역변경과 명칭변경·폐치분합은 법률, 일반구·읍면동은 조례에 의한다.

*** 우리나라의 구역개편**

구 분	관할구역 경계변경	구역변경	명칭변경	폐치·분합
광역자치단체	대통령령	법률	법률	법률
기초자치단체	대통령령	법률	법률	법률
구 분	구역변경		명칭변경	폐치분합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조례		조례	조례
일반구 및 읍·면·동	조례 (시·도지사에게 보고)		조례 (시·도지사에게 보고)	조례 (행안부 장관의 사전승인요)
리	조례		조례	조례

- 자치단체의 구역 또는 명칭변경, 폐치분합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주민투표 사항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중 한자명칭은 대통령령으로 변경

15. 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변경과 명칭변경은 대통령령으로써 하나, 폐치분합은 법률로써 한다.
- ② 우리나라는 중층제로서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하기 용이하다.
- ③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우리나라의 기관구성형태는 기관분리형, 집행기관 직선형, 의회-수장형, 강수장형에 속한다.
- ⑤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모두 경계변경은 대통령령, 구역변경·명칭변경·폐치분합은 법률에 의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16. 자치단체의 구역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법률에 의한다.
- ② 기초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은 대통령령에 의한다.
- ③ 일반지방행정기관의 구역변경, 명칭변경, 폐치·분합은 조례에 의하지만, 폐치분합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요한다.
- ④ 기초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법률에 의한다.

[] 광역 기초 자치단체 모두 경계변경은 대통령령, 구역변경·명칭변경·폐치분합은 법률에 의한다.

18. 200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족되어 지방자치의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제주특별자

치도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며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 ② 도의회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주민직접선거
- ③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만 허용
- ④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은 행정부처 고위공무원단과 동일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⑤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행정시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은 도 조례로 정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감사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 기관통합형 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① 결정과 집행의 연계성이 저하된다.
- ②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한다.
- ③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대립과 마찰의 소지가 적다.
- ④ 대도시에 적합하다.
- ⑤ 행정권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므로 분파주의가 예방될 수 있다.

☐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된 형태로서 ① 결정과 집행이 연계되며 ②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장이 자치단체를 대표하거나(영국형) 위원회 위원 중 1명이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담당한다(미국형). ③ 따라서 양기관이 대립하고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고 ④ 보통 소수의 위원이 행정의 결정과 집행을 맡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기에 부적합하다. ⑤ 집행기관의 장인 단체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권 미통합에 따른 분파주의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4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의결기관 우위 기관대립형에 속한다.
- ②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의 유형상 주민자치이면서 계층구조상 단층제에 해당된다.
- ③ 자치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포괄적 삼사가 가능하며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우리나라는 단체자치의 영향을 받아 집행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집행기관 우위 기관대립형이다. ② 단체자치이자 중층제에 해당된다. ③ 법령위반사항에만 국한된다. 헌법재판소의 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위헌판결(2009. 5)로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한 법령위반 사항이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이어야 하며 그 감사대상을 특정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다.

42. 자주재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 ㉠ 종합부동산세 ㉡ 주행세 ㉢ 지방소비세
 ㉣ 지방채 ㉤ 조정교부금 ㉥ 보통교부세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의미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자주재원이 아니다. ㉡ 주행세는 지방세로서 자주재원이다(주세는 국세). ㉢ 지방소비세는 2010년에 신설된 지방세로서 자주재원이다. ㉣ 지방채는 견해가 갈리나 의존재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조정교부금은 상급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다. ㉥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서 국가가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다.

46. 특별시·광역시세가 아닌 것은?

- ① 주민세 ② 지방소득세 ③ 담배소비세
 ④ 주행세 ⑤ 재산세

재산세는 구세에 해당된다.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모두 특별시·광역시에 해당된다. 다만, 지방소득세 중 종업원분은 특례에 의하여 구세의 재원으로 인정된다.

구 분	도 세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지방세 (16종)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특례 :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국세(13종)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재평가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기 준	변경 (2001. 1)			
주민세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주민세 균등분	기존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재산분	기존 사업소세 재산할
사업소세	사업소세 재산할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기존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기존 사업소세 종업원할
농업소득세	폐지			
부가가치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방소비세 (지방세: 부가가치세의 5%)			

47.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중 일반보통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주행세 ② 도시계획세 ③ 공공시설세
 ④ 지역개발세 ⑤ 지방교육세

주행세는 보통세(일반목적 사용)인 반면, 나머지는 목적세(특정목적 사용 - 통일성원칙의 예외)이다.

주의 :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자 목적세임.

381페이지

추가문제 : 2010년에 신설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재정자립도는 변함이 없다.
- ②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기존 주민세 소득할이 전환된 것이다.
- ③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기존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전환된 것이다.
- ④ 지방소득세의 신설로 지방재정이 확충된 효과가 있다.
- ⑤ 목적세의 비중이 낮아지고 보통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해설 : 지방소득세는 기존 지방세인 주민세의 소득할과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이 전환된 것이므로 지방재정이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는 없다. 다만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사업소세의 종업원할이 보통세인 지방소득세에 편입되었으므로 목적세 비중은 낮아진 반면 보통세 비중은 높아졌다. 답 : ④

* 지방소득세 :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2010년에 신설한 지방세로서 기존 주민세(소득할)와 사업소세(종업원할)를 통합하여 기존대로 특별시·광역시, 시·군세로 지정하였다. 소득분(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각 10%)과 종업원분(종업원 급여 총액의 0.5%)으로 구분된다. 이 중 종업원분은 기존 구세인 사업소세(종업원할)가 폐지되면서 지방소득세에 통합된 것이므로 지방세법에서는 구세로 적용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추가문제 :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지방재정이 확충된다.
- ② 지방재정자립도가 향상된다.
- ③ 일종의 공동세이다.
- ④ 지방교부세가 증액된다.

해설 : 국세의 지방세화로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는 반면, 내국세의 19.25%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감액된다. 답 : ④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재화의 수입자에게 부과)의 5%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지역별 소비지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배분하는 지방세이다(공동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각 지역간 지방소비세액은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 것이므로 납세자 추가부담은 없다.

49. 서울특별시의 경우 각 자치구의 재산세를 걷어서 서울특별시가 각 자치구에게 균등배분하는 재산세 공동세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가 줄어든다.
- ② 열악한 재정의 자치구의 경우 재정력이 향상된다.
- ③ 독일의 역교부금제에 해당된다.
- ④ 국가와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은 해소하지 못한다.
- ⑤ 실질적으로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다.

[] 서울시의 재원을 자치구에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재산세를 서울시가 징수해서 재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수직적 불균형을 시정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만 자치구 간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자치구 간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킨다.(부유한 자치구 재원을 뺏아서 가난한 자치구에게 추가 교부하므로)

59. 지방교부세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분권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의 사무를 이양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서 일반재원으로서는 2014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된다.
- ② 보통교부세는 지방재정수요액과 지방재정수입액의 차이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되, 교부세 총액이 재정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률을 계산하여 보통교부세액이 산정된다.
- ③ 특별교부세는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하여 교부한다.
-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하여 수입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예산에 매년 계상하여 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되, 재정여건과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수입이 낮은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시·군의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모두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삭제(지방교부세법 개정, 2010. 1.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 보유세 규모의 기준 및 비중을 따라 산정하도록 함(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2010. 1. 시행).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를 교부

66번해설 추가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기준재정미달액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간 수평적 불균형을 시정해주는 재정조정제도이다.

*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광역·도·시·군)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에게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액이 감소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광역·도 지방소비세의 27%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시·군에게 인구비례 교부(지방재정법 개정, 2010. 1. 시행)

389페이지

추가문제 :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3차원적 국토개발전략을 수립하였다.
- ② 광역경제권은 남해안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내륙특화벨트 등으로 권역을 설정하였다.
- ③ 기초생활권은 시·군 단위의 지역개발로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두며 시·군 스스로가 공간적·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해주는 상향식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④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 성격으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패키지형으로 지원한다.
- 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고 지역발전 계정, 광역발전 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한다.

해설 : ②는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내용이다. 광역경제권은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5+2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였다. 답 : ②

*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범 위	선도 산업
5대 광역경제권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식정보산업
	충청권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의약바이오, New IT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광소재
	대경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IT융복합, 그린에너지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
2대 특별 광역경제권	강원권	강원도	의료융합, 의료관광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관광 레저

* 기초생활권

유 형	여 건	중점 개발 방향
도시형	대도시와 연계·통합 개발이 가능하거나,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	광역도시권 개발과 구도심 재생
도농연계형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발전이 가능한 시·군 지역	중심도시와 농촌지역 간 도농통합적 개발
농산어촌형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	인접 군 지역 간 통합연계 개발

1편 기출문제

1.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 네트워크,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해설 : 행정은 정치적 환경에서 수행되고 가치판단적 정책결정도 하므로 정치성을 떨 수밖에 없으며 정치과정과는 분리될 수 없다. 정책결정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를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행정과 정치의 관계를 연속과정이자 통합과정으로 보는 정치행정일원론이 지배적이다. 즉, 행정은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의사가 투입되어야 하고 감시 통제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치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고 그림으로 강조한 바 있다.(2010 비타민행정학 28, 36페이지) 답 : ④

1. 행정관리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대표적인 학자로는 굴릭(Gulick), 어윅(Urwick), 페이올(Fayol) 등이 있다.
- ② 비공식 집단의 생성이나 조직 내의 갈등 등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해준다.
- ③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
- ④ 조직과 구성원 간의 관계를 합리적 존재로만 봄으로써 조직을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설계하려 하였다.

해설 : 비공식집단 또는 비공식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은 연구는 혼손실험을 통하여 대두된 인간관계론에서 시작되었다. 인간관계론에 의하면 근로자의 작업량은 개인별 육체적 능력이 아니라, 비공식적 집단이 합의한 사회적 규범에 의하여 결정되며 집단규범의 설정과 수행에 있어서도 비공식적 조직 특히 비공식적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은 행정관리론은 비공식집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식적 요인을 통한 관리의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과학적 관리론 역시 최적의 공식구조가 최적의 업무수행을 보장한다고 보았으므로 조직 내의 비공식집단과 사회적 규범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009 비타민행정학 178, 181페이지) 답 : ②

2. 정치행정이원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한국과 같이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행정제도의 역사를 가진 국가에서는 행정은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임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 ② 특히 미국에서는 1880년대의 공무원제도 개혁의 중심이론으로 작용했다.
- ③ 이원론의 대표학자인 윌슨(W. Wilson)은 당시 미국의 진보주의와 유럽식 중앙집권국가의 관리이론에 영향을 받았다.
- ④ 행정은 원리에 충실하면서 국가의사를 과학적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⑤ 행정은 전통적인 당파정치에서 분리되어 전문적·과학적 관리 중심이어야 한다.

해설 : 정치행정이원론은 1829년에 도입된 엽관제의 비능률, 낭비, 부패 등 각종 폐해가 1860년대부터 심화되면서 이를 개혁하고자 1880년대부터 나타난 공직개혁운동 때문에 대두되었으며 대표적인 이론이 Wilson에서 출발한 행정관리론이다. 행정관리론은 공직개혁운동과 과학적 관리론의 영향으로 '정치적 정책결정을, 행정은 정책집행을 각각 담당해야 하며 행정을 관리(management)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국가의사를 결정한다는 ④번 지문이 틀렸다. ①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 권력체계라는 전통과 박정희정권의 독재체제로 행정이 정치적 기능을 광범하게 대행하면서 정치가 행정에 종속되는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행정통치' 또는 '관료적 지배'현상(administrative)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정치행정이원론은 '정치에 종속된 행정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국식 의미보다는 국가의사를 전문적 능력과 법령에 따라 집행하는 일선행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③ 진보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던 Wilson은 영국의 대의제와 독일의 관료제 등 선진유럽의 정치행정체제를 연구하고,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라는 논문을 통해서 행정은 경영(business)의 분야로서 정치의 분야에서 형성된 법과 정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답 : ④

3. 사바스(E.S.Savas)의 기준에 따른 공공서비스 유형과 특성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집합재(collective goods)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은 민간투자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 ② 경합성은 있지만 배제가 가능하면 공유재(common-pool goods)라고 볼 수 있다.
- ③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면 그 재화나 서비스는 시장재(private goods)이다.
- ④ 무임승차의 문제는 요금재(toll goods)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해설 : ① 집합재(collective goods)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띠므로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② 공유재는 비배제성(배제가 불가능)과 경합성의 특성을 지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시장재는 배제성, 경합성의 특성을 지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요금재는 배제성을 지니므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임승차의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비배제성을 띠는 공공재와 공유재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답 : ①

* 재화의 종류

구 분	사적재	준공공재		공공재
		요금재	공유재	
예 시	전자제품, 신발 등	전기, 가스, 교통 등	바다의 물고기 등	등대, 국방, 치안 등
배제성 여부	배제성	배제성	비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여부	경합성	비경합성	경합성	비경합성
분할성 여부	분할성	비분할성	분할성	비분할성
방치시 문제점	수요와 공급 ⇨ 응익주의 ∴ 문제없음	초기비용 막대 ⇨ 규모의 경제 (비용 체감수익 체중) ⇨ 자연독점 (시장실패)	과잉소비, 자원고갈 ⇨ 공유지 비극 (시장실패)	• 소비자⇨무임승차, 집단행동 딜레마 • 공급자⇨과소생산(시장실패)
대 책		공기업 설립, 공급	정부개입(규제)필요	정부가 직접 공급

4.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며 기획, 조직화, 통제방법, 관리기법, 사무자동화 등 제반 관리기술을 활용한다.
- ②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으므로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대응능력이나 인력의 충원과정에서 탄력성이 떨어진다.
- ③ 관료제의 순기능적 측면과 아울러 역기능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 ④ 조직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결정하고자 하는 협동 행위가 나타난다.

해설 : 행정은 공공적 성격 때문에 엄격한 법적 적용을 받는 반면, 경영은 자율성이 강하므로 ②는 차이점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유사점에 해당된다. 답 : ②

(2)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⑤ 합법성(통제성, 책임성, 자율성): 행정은 공공성과 과급성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규제와 통제를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포괄적으로 지는 반면, 경영은 자율성이 강하다.

5. 다음 중 행정의 적극적 기능 수행과 행정입법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은? <2009 서울7급>

- ① 행정의 관리적 성격을 강조한다.
- ② 기업의 능률정신이 행정에서도 강조된다.
- ③ 정치와 행정을 엄격히 분리한다.
- ④ 행정의 정치성, 공공성을 강조한다.
- ⑤ 행정에서 가치판단 및 정책결정은 배제된다.

해설 : 행정의 적극적 기능과 행정입법(위임입법)의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은 행정국가 현상에서 대두된 정치행정일원론이다. 여기서는 행정의 정책결정기능이 강조되고 가치지향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의 정치성 및 공공성(공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④번이 정답이다. ①②③⑤는 정치행정일원론(공사행정일원론)의 내용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22~23, 38, 57~58페이지) 답 : ④

6.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 ②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 ③ 행정의 팽창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④ 다양한 위기 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전을 자극한다.
- ⑤ 행정국가는 삼권분립을 전제하지 않은 국가구성 원리이다.

해설 : ① 관성이란 현상유지성향이다.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이란 어떤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서 파생적 외부효과나 풍선효과, 규제의 악순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② 행정의 과부하(overload)는 행정수요를 증가시키므로 틀린 지문이다. 하지만 출제교수는 인과관계상 논리적 오류를 범했다.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기인하므로 '행정수요의 감소는 행정의 과부하를 가져 온다' 라고 문제를 구성했어야

했다. ③ 행정의 팽창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과다지출로 인한 정부실패를 야기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다양한 위기는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키고 중앙집권화 현상을 초래하므로 적극국가로의 발전을 자극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최소국가는 입법국가관이다. ⑤ 행정국가 역시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77페이지) 답 : ①

7. 다음에 제시된 역사적 사실들이 갖는 공통적 의미는? <2009 국가7급>

- Johnson 대통령의 Great Society Program
-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

- ① 시장기능의 강화
- ②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의 강조
- ③ 작지만 강한 행정부
- ④ 규제 완화와 행정의 민주화

해설 : Roosevelt 대통령의 New Deal 정책은 경제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된 정부개입정책으로서 본격적인 행정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Johnson 대통령의 Great Society Program은 흑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행정국가의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다. 따라서 행정국가현상과 관련된 ②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의 강조가 정답이다. (2010비타민행정학 24, 510페이지) 답 : ②

8. 행정문화 중 형식주의(red-tape)의 폐단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국회8급>

- ① 행정의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과 절차를 더 중시하는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 ② 변동저항적 행태를 조장한다.
- ③ 지위상징 등에 과다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낭비와 행정효율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 ④ 결과 속이 다른 행태의 이원화구조를 조장함으로써 공식적 규범의 위반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 ⑤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과잉동조, 과잉충성과 같은 행태를 조장한다.

해설 : 형식주의는 실제적인 내용보다는 형식, 규칙, 절차 등에 집착하는 태도로서 ① 목표와 수단이 바뀌는 목표전환 현상을 야기하며 ② 변화에 저항적이며 ③ 겉치레나 외양을 중시하기 때문에 전시행정이 나타날 수 있으며 ④ 공식적 규범과 실제 운영과의 불일치 현상 및 결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⑤는 권위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권위주의는 수직적 지배복종의 관계를 강조하는 태도로서 하향식 의사결정과 집권화를 초래하므로 상급자에게 맹종하는 현상과 관련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32, 189페이지) 답 : ⑤

9. 정부규모팽창에 대한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09 국가7급>

- ㄱ. 전위효과 - 사회혼란기에 공공지출이 상향 조정되며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현상
- 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
- ㄷ. 예산극대화 가설 - 관료들이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자기부서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현상
- ㄹ. 파킨슨 법칙 - 공무원의 수가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현상
- 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 -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하락하여 정부 지출이 감소하는 현상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ㅁ
- ③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해설 : ㄱ. Peacock와 Wiseman의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는 조세대체효과로서 전쟁이라는 위기에 조세가 증가하게 되는데 전쟁 후에도 조세가 전쟁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에 대체(전위)되므로 정부지출은 계속 팽창된다는 이론이다(김동건). 따라서 민간지출이 공공지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지출이 민간지출을 대체하는 현상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ㅁ. 보몰 효과(Baumol's effect)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비용체감이 곤란하므로 생산성은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ㄴ. 와그너 법칙(Wagner's law)의 지문내용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와그너법칙의 핵심을 서술한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정부지출이 팽창하는 경향을 최초로 실증적으로 연구한 와그너(1890)에 의하면 사회경제발전에 따라 국가의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경비의 팽창은 물가의 상승이라든가 인구증가 및 국민소득의 성장에 따라 당연히 증가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정부지출의 팽창은 국민의 공공적 욕망과 그것으로 인한 국가와 민간경제 간의 결합관계가 변화한 결과이다(김동건).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의 발달로 자동차가 증가하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국민의 공공적 욕구가 증대되고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60페이지) 답 : ③

10. 보통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재화를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즉 시장실패에 있다. 다음 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생산
- ②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자연독점 상태의 서비스 제공
-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
-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 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해설 : ① 공공재를 시장에 방치하게 되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과소생산을 초래하므로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②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요금제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이 발생되므로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은 소비자나 기업 간의 정보격차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시장실패를 의미한다. ④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가없이 손해 또는 이익을 주는 현상으로서 시장실패를 야기한다. ⑤ 계약에 의한 민

간위탁은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대안으로 정부실패를 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실패와는 관련이 없다. (2010 비타민행정학 66~68페이지) 답 : ⑤

11. 행정규제의 일반적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 경남9급>

- ① 경쟁의 촉진
- ② 공정성의 확보
- ③ 다수결 원리의 보호
- ④ 외부효과의 해소

8번해설 : 행정규제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서 ① 불완전 경쟁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시키고 ② 소득분배의 불공평(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입하며 ④ 외부효과라는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재(외부불경제)나 유인(외부경제)을 가하는 개입을 하게 된다. ③ 다수결원리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소수인 사회적 약자가 희생될 수 있으므로 다수결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결원리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입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59~60, 64페이지)답 : ③

12. J.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를 때 공공정책의 비용이 다수 국민들에게 널리 분산되어 부과되고, 또한 그 편익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고루 부여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대중정치 ② 기업가정치
- ③ 고객정치 ④ 이익집단정치 ⑤ 인지정치

해설 : 비용과 편익이 모두 다수에게 분산되는 것은 대중정치에 해당된다. 대중적 정치는 이익집단 정치와 반대의 경우로서,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이 특정집단에 집중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고 개별적으로 볼 때 그 크기도 작은 경우이다. 쌍방 모두 집단행동의 딜레마에 빠진다. ex)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등 (2010 비타민행정학 78페이지) 답 : ①

규제비용 분산 ↑	② 고객 정치	④ 대중적 정치
규제비용 집중 ↓	① 이익집단 정치	③ 기업가적 정치
	규제편익 집중 ←	⇒ 규제편익 분산

13. 다음은 윌슨의 규제정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각 유형별 사례를 옳게 짝지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ㄱ. 정부규제로 인해 발생하게 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담되고, 편익은 대단히 크지만 동질적인 소수인에게 귀속되는 상황
- ㄴ. 정부규제에 대한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나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 ㄷ.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인 집단에 국한되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 참여하게 대립하는 상황
- ㄹ. 피규제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익이 넓게 분포되는 상황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환경오염규제 | 수입규제 | 한·약규제 | 음란물규제 |
| ② 수입규제 | 음란물규제 | 한·약규제 | 환경오염규제 |
| ③ 한·약규제 | 환경오염규제 | 수입규제 | 음란물규제 |
| ④ 수입규제 | 한·약규제 | 음란물규제 | 환경오염규제 |

해설 : ㄱ은 고객정치모형으로서 수입규제나 직업면허규제가 이에 해당되고, ㄴ은 대중정치모형으로서 음란물규제나 낙태규제가 이에 해당되고. ㄷ은 이익집단정치모형으로서 한약규제가 이에 해당되며 ㄹ은 기업가적 정치모형으로서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된다.(2010비타민행정학 78페이지) 답 : ②

14.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만 묶인 것은? <2008 국가9급>

- | |
|--|
| ㄱ. 행정조직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불일치
ㄴ. 행정관료의 도덕적 해이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ㄹ. 정부부문의 공공서비스 공급독점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해설 : ㄱ. 내부성을 의미한다. 내부성은 행정의 경우 성과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기들만의 목표를 추구함으로써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괴리되는 현상으로서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ㄴ.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행정관료의 도덕적 해이는 정부부문에서 대리손실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ㄷ.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은 사회적 시장실패(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발생하는 실패현상)에 해당된다. 가격메커니즘에 의하여 작동되는 시장은 가슴이 차갑기 때문에 빈부격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성 등을 야기하게 되며 이를 시장의 근본적 한계라 한다. ㄹ.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경쟁압력의 부재로 정부실패가 발생한다(2009 비타민행정학 71~74페이지). 답 : ②

15. 정부과 시장의 상호 대체적 역할분담 관계를 설명하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 7급>

- ① 시장은 완전경쟁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 ② 완전경쟁시장은 그 전제조건이 비현실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외부효과의 발생,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 ③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계층제적 관리방법을 통해 자원의 흐름을 통제하게 되는데 정부의 능력은 인적, 물적, 제도적 제한으로 실패할 수 있고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는 내부성의 존재, 편익향유와 비용 부담의 분리, 예측하지 못한 파생적 외부효과 등이 제시되고 있다.
- ④ 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 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해설 : ④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식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61페이지) 정부실패의 대응방식은 민영화, 민간위탁, 감축관리, 방향잡기 집중, 성과중시 등이다. 답 : ④

- | |
|---|
| (1) 시장실패의 치유방법(2009 비타민행정학 61페이지)
①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적 공급(公的 供給) |
|---|

②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하여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公的 誘導)
 ③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2) 시장실패의 원인별 치유방법(이중수외)

구 분	공적 공급(조직)	공적 유도(보조금)	정부규제(법적 권위)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의 발생		○	○
자연독점	○		○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16. 정부실패의 요인으로만 묶은 것은? <2009 국가7급>

ㄱ. 공공재의 존재	ㄴ. 사적 목표의 설정
ㄷ. 외부효과의 발생	ㄹ. 파생적 외부효과
ㄴ. 불완전 경쟁	ㅂ. 정보의 비대칭성
ㅅ. 권력의 편재	ㅇ. X 비효율
ㅈ. 자연독점	

- ① ㄱ, ㄴ, ㄷ, ㅈ
- ② ㄴ, ㄷ, ㄹ, ㅈ
- ③ ㄴ, ㄷ, ㅅ, ㄹ
- ④ ㄷ, ㄷ, ㅂ, ㅅ

해설 : ㄱ.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 ㄴ. 사적 목표의 설정은 내부성(내부목표와 외부목표의 괴리)으로서 정부실패, ㄷ. 외부효과는 대가없이 손해나 이익을 주는 현상으로서 시장실패, ㄹ. 파생적 외부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서 정부실패, ㅂ. 불완전 경쟁은 독과점현상으로서 시장실패, ㅂ. 정보의 비대칭성(정보격차)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모두 해당되며 ㅅ. 권력의 편재는 권력과 특혜에 따른 불공평으로서 정부실패, ㅇ. X 비효율은 관리상, 기술적 비효율성으로서 정부실패, ㅈ. 자연독점은 요금재를 시장에 방치할 때 규모의 경제와 비용체감현상으로 발생하는 시장실패에 해당된다.(2010 비타민행정학 84~86페이지) 답 : ③

17. 정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7급>

- ① 사적 목표의 설정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가 있다.
- ②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 ③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 ④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 ⑤ 최근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함께 교정할 수 있는 제도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제시되고 있다.

해설 : 권력편재(권력과 특혜에 따른 분배적 불공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정부 보조 삭감이 아니라,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을 들 수 있다. 답 : ④

* 정부실패의 원인별 대응방안(이종수 외)

구 분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설정	○		
X-비효율·비용체증(낭비)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18. 생산은 정부에서 하되 수단은 민간의 시장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2008 경남9급>

- ① 일반행정
- ② 책임경영(책임운영기관)
- ③ 민간위탁
- ④ 민영화

해설 : 생산은 정부에서 하되 생산을 위한 수단에 있어서 민간시장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책임경영형 중에서 책임운영기관이 이에 해당된다. 민간위탁형은 생산을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90페이지) 답 : ②

19. 일정한 구역 내에서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민간조직에 인정하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2008 국회8급>

- ① 면허(Franchises)
- ② 외부계약(Contracting-out)
- ③ 자조활동(Self-help)
- ④ 자원봉사(Volunteers)
- ⑤ 보조금 지급(Granting)

해설 : 면허 또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다. 외부계약은 정부가 민간조직에게 업무를 부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면허방식과 다르다. (2009 비타민행정학 80페이지) 답 : ①

<p>⑥ 면허방식(인허가, franchise agreements) - 2009 비타민행정학 80페이지</p> <p>i) 의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민간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민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수준과 질은 정부가 규제한다. • 위탁계약과 면허방식 : 양자 모두 정부가 공급자이고 민간이 생산자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위탁계약(협회의 민간위탁)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면허방식(인허가)은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며 전기, 가스, 유선 TV 등 요금제(toll goods) 성격의 재화를 공급하는데 적합하다.

20.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서울9급>

- ① 자조활동(self-help) 방식은 레크리에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된다.
- ② 면허 방식에서는 시민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정부는 서비스의 수급과 질을 규제한다.
- ③ 보조금 방식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기

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 ④ 구입증서(voucher) 방식은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 ⑤ 계약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설 : ① 자조활동(self service)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와 제공자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서로 돕는 형식으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ex. 전과자의 소년범죄 예방활동, 노인의 노인보조서비스 등)으로서 지문의 내용은 자원봉사자 방식이다. 자원봉사자방식은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실비)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정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81페이지) 답 : ①

21.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자원봉사자 방식은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현금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방식이다.
- ② 보조금 방식은 민간조직 또는 개인의 서비스 제공활동에 대하여 재정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 ③ 구입증서 방식은 시민들의 서비스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 ④ 계약방식은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이다.

해설 : ④는 인허가(면허, Franchises)에 해당된다. 계약방식은 위탁계약으로서 정부가 민간부문과 위탁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생산케 하는 방식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94페이지) 답 : ④

2. 비정부조직(NG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크다.
- ② 정부나 시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한다.
- ③ 이상주의에 치우쳐 결과에 무책임하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 ④ 재정상의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율성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해설 : 비정부조직(NGO)은 무경험과 비전문성 등 아마추어적 운영으로 인하여 효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NGO는 도덕적·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므로 충분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실패되는 경우가 있는데 Salamon교수는 이를 박애적 아마추어리즘(philanthropic amateurism)이라 하였다. (2009 비타민행정학 86, 92페이지)

답 : ①

22.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009 서울9급>

- ①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 ②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를 요구한다.
- ③ 효과성과 능률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 ④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 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해설 : ① 민주성과 합법성은 기본적으로 보완관계에 있지만, 지나친 합법성의 추구는 목표수단의 전환을 야기함으로써 양자는 충돌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를 표방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참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정치적 욕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능률성·효과성은 조화관계에 있지만,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효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능률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가외성은 구조와 기능을 중복·중첩시키는 것으로서 오류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어느 한 요소가 결함발생시 이에 대처하게 해줌으로써 행정체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므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은 맞는 지문이다. ⑤ 사회정의는 궁극적 가치로서 절차적 공평 즉, 절차적 민주주의만을 강조하게 되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사회정의나 형평성은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자들의 입장을 특별히 고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57, 164~165페이지) 답 : ④

3. 행정서비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능률성 - 투입과 산출의 비율
- ② 생산성 - 목표달성도
- ③ 형평성 - 서비스의 공평한 배분정도
- ④ 대응성 - 시민의 수요에의 부응정도

해설 : 생산성(효율성)은 효과/투입 즉,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개념으로서 최소의 비용 또는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음(능률성)과 동시에 그 산출물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효과성)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목표달성도는 효과성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경영에서는 능률성과 생산성을 동일개념으로 파악하지만, 행정의 경우 산출과 효과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능률성과 생산성 역시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8, 133페이지) 답 : ②

23. 합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서울9급>

- ① Weber는 관료제를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합리성은 본질적 행정가치보다는 수단적 행정가치에 포함된다.
- ④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⑤ Diesing의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해설 : ④ Simon의 절차적 합리성은 의사결정에서 중시한 심리학적 주관적 개념으로서 결정과정의 이성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즉, 대안을 선택하기 위하여 밝은 절차가 적합한 것이라면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지문의 내용은 내용적 합리성에 해당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7페이지) 답 : ④

24. 형평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대표관료제는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②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태 하에서 합리적 인간은 최대극소화 원리에 따른다고 한다.
- ③ 정부의 환경보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하여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한다.

④ 형평성은 총체적 효용 개념을 강조한다.

해설 : ① 대표관료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소외계층에 대한 임용을 확대하는 제도로서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차등조정은 극빈층의 이익이 극대화하게 조정하는 것이므로 최소극대화(Maximin)의 원리에 입각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③ 공채발행을 통하여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④ 형평성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것이지만 총체적 효용을 중시하지 않는다. 총체적 효용을 중시하는 것은 공리주의이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2009 비타민행정학 130~133페이지) 답 : ③

* 2009 비타민행정학 131페이지

① 수직적 형평성 :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형평성을 말한다. 즉, 잘사는 사람에게는 적게 배분하고 못사는 사람에게는 많이 배분함으로써 수직적 계층 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평등이론(사회주의자)의 입장이다. ex) 누진세, 대표관료제(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역교부세제, 종합부동산세, **공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 영세농가와 골프장의 오염을 다르게 취급 등

4. 롤스(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타고난 차이 때문에 사회적 가치의 획득에서 불평등이 생겨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
- ② 형평성이 확보되려면 우선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③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규칙 또는 원칙이 공정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 ④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해설 : 롤스(J.Rawls)는 원초적 상황(original state)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라는 가설적 상황을 전제하고 합리적 계약자들 간의 합의를 통하여 정의가 도출된다는 <정의론(1971)>을 발표하였다. 롤스는 결과의 공평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고 제1원리인 동등한 자유의 원리를 통하여 전체적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한 자유가 보장되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내세웠으며 그 다음으로 제2원리인 불평등조정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불평등조정의 원리 중 기회균등의 원리는 기회의 공평과 관련되며 차등조정의 원리는 결과의 공평과 관련된다. 즉, 결과의 공평은 불평등조정의 원리중 마지막 단계에서 추구되는 차등조정의 원리인 Maximin(최소극대화, 불평등 조정시 극빈층의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조정)에 해당된다. 제1원리는 자유, 제2원리는 평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롤스의 정의론은 양자를 조화시킨 중도적 관점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32페이지) 답 : ②

* 바람직한 정책기준 : 전체적 자유 > 동등한 자유 > 기회균등 > 차등조정

③ 롤스의 정의론(1971)-2009 비타민행정학 132페이지

㉠ 의 의

- ㉡ 롤스(J.Rawls)는 정의(Justice)란 공정한 배경 속에서 합리적 계약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는 것이며 그렇게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될 때만 허용할 수 있다고 천명한다.
- ㉢ Rawls는 공리주의가 다수효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소수자 이익의 침해를 묵인하는 것을 비판하며 자유주의적 이론체계에서 사회주의적 요구를 결합함으로써 자유주의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 ㉣ 계약자들의 합의를 위한 가정 : 롤스는 공정한 배경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원초적 상황(original position)’ 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이라는 가설적 상황을 전제하였다. 이는 어느 누구도 장래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함으로써 위험회피적 성향을 유도하여 누구에게라도 공정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게 한다.

- * 원초적 상황 :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합리적 사고능력을 지닌 합의 당사자의 상태
- * 무지의 베일 : 자신의 능력, 가치관 및 심리성향,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모름

- ㉔ 롤스의 제1원리<동등한 자유의 원리(Equal Liberty Principle)> :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가질 자유 등
- ㉕ 롤스의 제2원리<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원리>
 - ㉖ 기회균등의 원리(Equal Opportunity Principle) : 모든 직위와 직무는 공개되어야 하는 등 능력발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 ㉗ 차등조정 원리(Difference Principle) : 정의에 맞는 저축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불공정에 대한 시정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의 이득이 가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최소극대화의 원리, Maximin).
 - * 저축의 원리 : 사회협동의 산물 중 어느 정도를 후세대의 복지를 위하여 현재 사회구성원에게 모두 배분하지 않고 유보 내지 저축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규정하는 원리(장래를 위하여 설비 등 생산수단 및 교육에 투자)
- ㉘ 시사점
 - ㉙ 불평등을 시정하는 차등조정은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가장 큰 이익이 가도록 하되, 전체의 기회균등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또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 자유의 평등한 권리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
 - ㉚ 바람직한 정책기준 : 전체적 자유 > 자유의 평등한 보장(제1원리) > 제2원리 중 기회의 균등 > 제2원리 중 차등의 원리
- ㉙ 한 계
 - ㉚ 미래의 불확실성에 있는 원초적 상황의 당사자들이 반드시 최소극대화 원칙에 따르리라는 보장이 없다.
 - ㉛ 우파로부터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좌파로부터는 완전한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5. 롤스(Rawls)가 말하는 정의(just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개인의 기본적 자유권이 평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② 가장 불우한 사람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 ③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
- ④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 ⑤ 차등 조정의 원리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리에 우선해야 한다.

해설 : ⑤ 전체적 자유 > 동등한 자유 > 기회균등 > 차등조정(maximin)의 순으로 강조된다. ① 전체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등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원리로서 자유의 사회성을 의미한다. ② 극빈층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마지막 원리인 차등조정(maximin)원리에 해당된다. ③ 기회균등원리에 해당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51~152페이지) 답 : ⑤

26.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다양성은 갈등의 원천이 된다.
- ② 사회적 자본의 영향은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나타난다.
- ③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 ④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은 상향적 속성을 지닌다.

해설 : 사회자본은 협동과 조정을 촉진하는 사회적 관계의 품질로서 구체적으로는 신뢰, 자발적 참여, 상호호혜, 협동, 진실성, 개방성, 공동체주의 등을 의미하므로(2009 비타민행정학 139~141페이지)

사회자본이 형성된 지역사회에서 다양성은 사회 구성원 간 상호호혜 및 개방성과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긍정적 효과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갈등의 원천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자본이 취약할 때 폐쇄성과 배타성을 띠게 되고 저신뢰로 인한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답 :

①

27.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행정학의 성격은? <2009 지방수탁7급>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저개발국가에 경제 원조와 함께 미국의 행정이론에 바탕을 둔 제도나 기술을 지원했다. 그러나 저개발국가의 정치제도나 사회문화적 환경이 미국과 달라 새로 도입한 각종 행정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진국의 행정이론이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행정이론을 도입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 ①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
- ②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③ 행정학의 가치판단과 가치중립성
- ④ 행정학의 전문성과 일반성

해설 : 위 지문은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의 행정이론을 도입한 것은 행정학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인 반면, 미국의 행정이론이 저개발국가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행정학의 특수성에 대한 내용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85~186페이지) 답 : ②

28. 다음은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하나를 설명하고 있다. 아래설명에 가장 가까운 접근방법은? <2008 서울9급>

- 각종 정치·행정 제도의 진정한 성격과 그 제도가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가 된다.
- 소위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nation)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 ①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
- ② 관리기능적 접근방법
-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 ④ 역사적 접근방법
-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

해설 : 역사적 접근법은 행정사 연구에서와 같이 사건, 정책, 제도 등의 발생과 전개를 시간 및 시대순으로 정리하는 접근법으로서 과거를 잘 이해하면 현재의 문제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지문은 역사적 접근법에 해당된다. 역사적 접근은 정치·행정적 사건들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므로 그 결과 이들 연구는 사례연구가 되며 각종 정치, 행정 제도의 성격과 그것이 형성되어온 특수한 방법을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을 제공하면서 기원과 발전과정을 파악·설명하므로 발생론적 설명(genetic explanation)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2009 비타민행정학 166, 223페이지) 답 : ④

29. 사이먼(H. A. Simon)이 주장한 행태과학의 내용이 아닌 것은? <2008 경북9급>

- ① 조직 및 소속 구성원의 행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한다.
- ② 의사결정의 측면을 중시한다.
- ③ 논리실증주의 연구방법을 따른다.

두는 이론이다. 따라서 개방체제는 엔트로피(entropy : 해체·소멸)가 아니라 부정적 엔트로피(negative entropy : 해체·소멸되지 않음)를 특성으로 하며 폐쇄체제에서 엔트로피 현상이 발생한다. 강의때 칠판에서 폐쇄체제와 개방체제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각각 entropy, 부정적 entropy임을 강조한 바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191~192페이지) 답 : ②

32. 1960년대 신행정학 운동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2008 국회8급>

- ① 미노부르크(Minnowbrook) 회의
- ② 현실적합성
- ③ 고객지향주의
- ④ 논리실증주의
- ⑤ 탈관료제

해설 : 논리실증주의는 사회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분석철학으로서 과학적 계량적 분석을 통한 검증을 중시한다. 행정행태론의 Simon에 의하여 도입되어 가치를 배제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 되었다. 가치를 지향하는 신행정학은 논리실증주의를 배격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01~203페이지) 답 : ④

33.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중시했던 가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8 지방수탁 9급>

- ① 정치적 중립성
- ② 조직의 인간화
- ③ 행정의 대응성
- ④ 사회적 형평성

해설 : 1960년대 미국사회의 격동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치를 배제한 고전적 행정학과 행태주의(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1970년대에 등장한 신행정학은 형평성, 민주성, 대응성, 책임성, 고객지향 등 가치를 중시한 정치행정일원론 입장이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중립성은 고전적 행정학(행정관리론)에서 중시하였다. ②는 인간을 기계시했던 전통적 관료제에 반대하여 조직의 인간화를 강조한 도덕적 조직론(Golembiewsky)의 내용으로서 신행정학에 속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01~203페이지) 답 : ①

1.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 ②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 ④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해설 : 현상학적 접근론(phenomenological approach)은 인간을 주체적 행위자로 보는 비결정론적 관점에서 외면적인 인간행태의 인과적 설명보다 행위자의 내면적인 동기나 의도를 행정현상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철학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며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인과적 설명에 초점을 두는 행태론적 접근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205페이지) 답 : ③

34.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행정현실을 이해하는 데 과학적 방법보다 해석학적 방법을 선호한다.
- ② 조직을 인간의 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가치함축적인 행위의 집합물로 이해한다.
- ③ 인간행위의 가치는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산출한 결과에 있다.
- ④ 조직 내외의 인간들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을 설계한다.

해설 : 현상학적 접근론(phenomenological approach)은 인간을 주체적 행위자로 보는 비결정론적 관점에서 외면적인 인간행태의 인과적 설명보다 행위자의 내면적인 동기나 의도를 행정현상에 적용하여 연구하는 철학적 연구방법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두며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지 않는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것은 인과적 설명에 초점을 두는 행태론적 접근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237페이지) 답 : ③

35.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간주한다.
- ② 신제도주의에서는 규범과 규칙 등을 제도로 보고 있다.
- ③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의 개념을 법률로 규정된 공식적 정부로 한정한다.
- ④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중심개념으로 정책현상 등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분석도 추구한다.

해설 : 신제도주의는 인간을 배제한 채, 공식적 제도(법령, 통치체제, 행정기구 등)를 정태적으로 연구하던 구제도주의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제도와 인간 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초점을 두는 접근론이다. ①, ②, ③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규칙(인간행위를 규율), 규범(공통된 판단 기준), 균형점(행동에 있어서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제도의 범위가 확장된다. ④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의 내용과 효과가 달라지는 것도 설명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220~221). 답 : ③

36. 다음 중 rational choice theory와 거리가 먼 것은? <2008 서울7급>

- ① collective action problem
- ② Tiebout hypothesis
- ③ prisoner's dilemma game
- ④ new institutionalism
- ⑤ relative autonomy

해설 : ④ 신제도론(new institutionalism)의 유형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역사적 신제도론(historical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신제도론(sociological institutionalism)이다. rational choice theory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의 내용을 물어 본 문제이다.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은 인간의 선호가 고정되었다고 보고(선호의 외생성) 이러한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도를 형성한다는 이론이다. ①, ③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은 각 개인들이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ex.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이러한 집단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를 의도적으로 형성한다고 본다. ② 티보가설(tiebout hypothesis : voting with feet)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지방정부를 선택한다는 이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이며 공공선택이론도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공유재이론과 함께 합리적 선택의 신

제도론의 내용을 구성한다. ⑤ 상대적 자율성은 역사적 신제도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역사적 신제도론은 다원주의와 달리 정부를 사회적 선호의 단순한 반영물 이상으로 이해하며 정치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222~224페이지) 답 : ⑤

37.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공공선택론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방법론적 개체주의 ㄴ. 국가의지의 강조 ㄷ. 부서목표의 극대화 ㄹ. 합리적 경제인 ㅁ. 교환으로서의 정치 ㅂ. 예산극대화 |
|---|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ㄷ, ㅁ
- ④ ㄷ, ㅂ

해설 : ㄱ. 공공선택이론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며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중시하므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해당된다. ㄴ. 따라서 공공선택이론은 국가를 유기체적 관점에서 보지 않고 개인선호의 집합체로 보므로 국가의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다. ㄷ. ㄹ. 공공선택이론에서의 행위자들은 모두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경제적 인간이므로 부서목표를 극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ㄷ은 틀린 내용이다. ㅁ. 의원 간에 서로 지지하는 투표담합(log-rolling) 또는 정치적 교환을 의미한다. ㅂ. Niskanen의 관료예산극대화가설을 의미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246페이지) 답 : ②

38. 다음 중 정부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공공선택이론
- ② 신행정학
- ③ 행태론
- ④ 신제도주의
- ⑤ 뉴거버넌스

해설 : 정부실패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대두된 이론이 공공선택이론이다. 강의때 칠판에서 강조한 바 있다. ⑤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도 정부실패와 관련이 있지만,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모두를 극복하는 제3의 대안이라는 점과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에 반발하면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공공선택이론이 더욱 정답에 가깝다. (2009 비타민행정학 211페이지) 답 : ①

39.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이란 그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 생각, 언어, 개념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 관념, 의식 및 동기 등의 의미를 더 적절하게 다루고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 ②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하려 한다.
-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을 자연적 · 사회적 · 문화적 환경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하며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④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은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 시민을 공공재의 소비자라고 규정하고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방법론적 전체주의 입장을 취한다.

해설 : 공공선택이론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며 사회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중시하는 집합적 선택이론으로서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해당되며 전체주의(유기체적 접근, 신비주의, 우주론적 접근, 총체주의)가 아니다. 수업때 그림으로 기본개념을 설명하면서 강조한 바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212페이지) 답 : ④

40. 신공공관리론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효율적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측정가능한 성과목표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중시한다.
- ② 관리자들에게 자율적 권한을 부여하여 혁신과 창의를 고취시키고 책임을 완화시킨다.
- ③ 집행적 성격의 사업기능은 전문적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리·이관시키고 정부는 조정역할 및 정책능력을 강화한다.
- ④ 납세자가 제공하는 돈(세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내 내부공급에 대하여 가격책정을 하기도 한다.

해설 : 신공공관리론은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성과 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268페이지) 답 : ②

41.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법규나 규정에 의한 관리보다는 목표와 임무 중심의 관리를 강조한다.
- ② 예산지출 위주의 정부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입 확보를 강조한다.
- ③ 정부는 촉매작용자, 촉진자, 중개자 역할보다는 공급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사후적 대책 수립보다는 사전적 문제예방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해설 :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rowing)하는 공급자보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촉매작용자, 촉진자 또는 중개자의 역할(steering)에 중점을 두면서 세세한 행정적 업무수행은 민영화하거나 위탁 또는 정부와 공동수행하게 할 것을 강조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267페이지) 답 : ③

42.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 9급>

-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 ②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④ 뷰캐넌(J.Buchanan)과 툴록(G.Tullock)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해설 :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라는 기본전제 하에 정부와 정당을 공공재의 공급자, 시민과 이익집단을 공공재의 소비자(수요자)로 파악한다. Downs에 의하면 정당은 소비자적 소비자(일반국민)보다는 생산자적 소비자(기업)를 위한 정책을 산출한다고 보므로 정당도 공공재의 공급자로 본다. (2009 비타민행정학 211~213페이지) 답 : ③

43. 주민들이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재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가 나타나며 지방공공재 공급의 적정규모가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과 거리가 먼 것은? <2008 지방수탁 7급>

-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the feet)
- ② 새뮤얼슨(Samuelson)의 적정 공공재의 공급이론
- ③ 티부(Tiebout) 가설
- ④ 유사한 선호를 가진 사람들의 공간적인 집적 현상

해설 : 본 문제는 티보가설에 대한 내용이다. 티보가설은 자원배분기능에 있어서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왜 강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논의 중 하나로서 주민들은 지방 간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선호에 가장 부합되는 재정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후생수준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은 기존 지역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을 느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발에 의한 투표’ (voting with feet)를 하므로 공공재에 대한 주민 선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지방공공재의 적정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새뮤얼슨(Samuelson)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재이론(적정 공공재의 공급이론, 1954)을 제창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람들은 공공재에 대하여 자신의 선호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적정 공공재의 공급은 국민의 선호와 관계없이 결국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으로서 티보가설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이론이다. 티보(Tiebout)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티보가설(1956)을 제기한 것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217페이지)답 : ②

44. 한국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 9급>

- ①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 ②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③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 ④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해설 : 신공공관리론은 분권화된 정부를 지향하므로 통제와 공급자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적으로도 또한 지방정부나 지역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조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31페이지) 답 : ②

45.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서 추구하는 관점이나 지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 ② 정부의 역할로 정책의 집행을 강조하는 소위 노젓기를 중시한다.
- ③ 상명하복식의 관료적 조직을 선호한다.
- ④ 정책목표의 달성기제로 개인이나 기업 및 비영리기구 등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 ①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 입장으로 공익을 개인들의 총이익으로 본다. 공익을 법률로 표현된 정치적 결정으로 보는 것은 전통적 정부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232페이지). ② 신공공관리론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므로 노젓기(서비스 제공 및 집행기능, rowing) 보다는 방향잡기(전략적 목표설정기능, steering)를 중시한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성과를 중시하므로 엄격한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참여와 팀워크를 중시하는 분권적 정부, 평탄화된 동태적 조직을 중시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의 독점적 생산보다는 개인이나 기업, 비영리기구 등의 시장적·준시장적 기제를 활용할 것(민영화, 민간위탁 등)을 강조한다(2009 비타민행정학 229~232). 답 : ④

46. 다음 중 세계화의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008 서울7급>

- ① 국가주권의 제약
- ② 정부지출의 확대
- ③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 ④ FTA의 체결확산
- ⑤ 기업규제의 약화

해설 : 세계화는 1980년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화를 모토로 하며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총체적인 개혁을 지향한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확대가 아니라 축소를 강조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29페이지) 답 : ②

* 세계화의 문제점 -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 : '바닥을 향한 경주'는 20세기 초 당시 자유주의적 사조의 '효율성 경쟁'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민중변호사로 유명한 미국의 대법원 판사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가 명명하였다.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가격 경쟁은 비용인하 경쟁을 유발하게 되면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는 명분으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누가 더 열악하나'를 놓고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한다. 노동자는 임금 하락, 고용 불안, 노동조건 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대다수 국민들은 복지 축소, 양극화 심화,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반면, 기업은 법인세 하락과 무역 확대로 이득을 누리며 노동비용이 저렴하고 노조조직이 어려운 곳으로 공장을 이전한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이전하면서 각종 편익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바닥을 향한 경주' 현상은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47. 다음 중 신공공관리 인사체제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2008 서울7급>

- ① 인사권자의 인사통제력 강화
- ② 서류에 편승하는 사람에게 불이익 부가
- ③ 부처간 인사이동을 촉진
- ④ 공직자가 공익추구에 전념하도록 유도함
- ⑤ 최고로 적합한 인력(The best qualified person)의 선발을 가능하게 함

해설 : ④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주요 요소로 하며 가격체계와 경쟁원리에 의한

능률주의에 입각한다. 따라서 공익, 사회정의, 형평성 등에 반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33페이지)
 ① 인사권자의 인사통제력 강화는 주의를 요한다. 기존 중앙인사시관이 집권적으로 수행해오던 인사 기능을 해당기관에 위임을 하게 되면서 해당기관의 인사권자의 자율성과 통제력은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인사권자란 중앙인사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관의 장(장관, 처장, 청장, 책임운영기관장 등)을 뜻한다. 최근에도 공무원임용령을 개정(2008. 6)하여 4~5급뿐만 아니라, 3급의 임용권도 소속장관에게 위임한 바 있다. ② 시류(시대의 흐름)에 편승한다는 것은 능력 또는 업적을 쌓기 보다는 정치권이나 기관장에 인사청탁을 하거나 눈치를 보는 보신주의 행위 등을 의미하며 신공공관리론은 능력과 업적을 위한 경쟁을 강조하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⑤ 신공공관리론은 경쟁과 개방을 통하여 최고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강조한다. 답 : ④

4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2008 서울7급>

최근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부만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정책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아직 대부분의 정책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업, 노동조합과 같은 전통적인 이익단체와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 ① 이에 대해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다.
- ②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신공공관리 정책은 퇴조하고 있다.
- ③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④ 시민단체들이 국정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도 필요하다.
- ⑤ 한편,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설 : 예시문은 거버넌스 또는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이다. 뉴거버넌스는 다양한 주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서비스 연계망으로 정의되며 행정의 정치화를 강조한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인하여 민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과 분석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질이 높아지고 다수참여에 의한 결정으로 집행상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뉴거버넌스의 주요형태인 정책공동체와 같은 정책네트워크모형이다.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241, 289페이지) 답 : ⑤

49. 거버넌스의 정책 이념적 측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4 국가9급>

- ① 거버넌스에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사조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 ②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의 도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③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정부혁신을 모색하는 입장에서는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④ 정책네트워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이론에서는 정부-시민 간에 협력을 통한 민주성 증진을 중요시 한다.

해설 : 정책네트워크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의 질과 효율성을 높여 줄 수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289) 답 : ③

50.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 ② 정부관료제가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있는 사

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 ④ 공조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
-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속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됨을 강조

해설 : Peters의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문제이다. ①은 절차와 같은 내부규제를 완화할 것을 강조하는 탈규제적 정부모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지문이다. ② 공무원의 자율성과 재량권 제고를 통하여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탈규제적 정부모형과 관련된 지문이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집행기관을 분리시켜 사장원리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시장적 원리를 강조하는 시장적 정부모형과 관련되는 지문이다. ④ 참여적 정부는 계층제를 최대의 해악으로 여기므로 하위계층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조직구조가 보다 평면해질 것을 요구한다. ⑤ 경직성을 비판하고 신속적 운영을 강조하는 신속적 정부모형과 관련된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278~279페이지) 답 : ④

5.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이론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ㄱ. 인식론적 기초	-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ㄴ. 관리기구	- 시장	네트워크
ㄷ. 관리가치	- 결과	신뢰
ㄹ. 관료의 역할	- 조정자	공공기업가
ㅁ. 작동원리	- 협력	경쟁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ㄹ, ㅁ

해설 : ㄹ. 신공공관리론은 관료를 공공기업가로 파악한 반면, 뉴거버넌스는 네트워크 조정자로 파악한다. ㅁ. 신공공관리론은 경쟁을 강조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협력을 강조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44페이지) 답 : ④

* 신공공관리론과 신국정관리론(뉴거버넌스)

구분	신공공관리(1980년대 ~ 현재)	신국정관리(1990년대 ~ 현재)
시대배경	1970년대, 재정위기와 정부실패	1990년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공동체주의(신좌파의 시민주의 + 신우파의 자원봉사주의)
국정관리주체	시장주의에 입각한 정부	참여네트워크
관리메커니즘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의 사후적 확보	신뢰 및 협력과 직접 참여로 서비스 품질의 사전적 확보
시민관	수동적 객체로서의 '고객' (이기적 존재)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체 주인이자 이타적 존재)
관료관	공공기업가(자율성과 재량권 강조)	네트워크의 관리자, 조정자(계약과 책임 강조)
행정이념	능률성, 생산성	민주성
서비스 생산방식	민영화(privatization), 민간위탁	공동생산(co-production)
지향가치	결과(outcome) - 효율성, 생산성	과정(procedure) - 민주성, 정치성
문제해결 방식	시장적 방법, 민간영양기법 도입	정치적 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 방법 모색
분석수준	조직내(intra-organizational), 부문내	조직간(inter-organizational), 부문간
재창조	정부재창조	시민재창조
정치·경영 관계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일원론

51.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 ② 조직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 ③ 신자유주의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 ④ 공공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강조한다.
- 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해설 : 신공공관리론이 신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다면, 뉴거버넌스는 신공공체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42, 244페이지) 답 : ③

52.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 7급>

- ①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은 서비스 전달이라는 노젓기(rowing) 보다는 정책결정이라는 방향잡기(steering)를 위한 도구와 기법의 개발을 중시한다.
- ② 신공공관리론이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신공공관리론이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하는 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조직 내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신공공관리론이 부문 간 경쟁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뉴거버넌스론은 부문 간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설 : 신공공관리론은 조직 내, 신국정관리론은 조직 간 관계를 중시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244페이지)

이지) 답 : ③

53. J.Denhardt와 R.Denhardt가 제시한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J.Denhardt와 R.Denhardt는 기업가적 신관리주의가 평등성·공정성·대표성·참여 등의 가치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② 신공공서비스론의 이론적·학문적 뿌리는 시민행정학, 인간중심 조직이론, 신행정학, 포스트모던 행정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단순한 생산성보다 사람에 대한 가치 부여를 중요하게 여긴다.
-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규범적 가치에 관한 이론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⑤ 신공공서비스론에서는 시장메커니즘보다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공공책임성의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해설 : ④ 199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시민의 객체화 등에 대한 대안적 이론으로서, 정부의 소유주인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며 기존 이론들이 강조하던 행정의 생산성·효과성 등에 밀려 소홀히 여겨왔던 시민정신, 참여의식, 공익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들을 중시하고 민주주의정신을 새롭게 부활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이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가치들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처방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2010 비타민행정학 297~301페이지) 답 : ④

54. 덴하르트(J. Denhardt & R. Denhardt)의 신공공서비스론이 추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2007 국가7급>

- ① 문제의 해결에는 대화나 중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관여를 통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 ② 행정관료는 사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steer)하기보다 시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달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본다.
- ③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에 충실한다.
- ④ 기업가적 정신보다 시민정신이 지니는 가치가 상위개념임을 강조한다.

* 해설 :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지나친 시장주의와 시민의 객체화에 반발하고 대두된 대안적 이론이다. ③ 정부규모를 축소하려는 이데올로기(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적 욕구에 충실한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다. 답 : ③

55.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담론적 접근방법을 선택할 때 기대되는 유용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7 국가7급>

- ① 지식, 지혜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② 다수의 정책참여에 의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 ③ 정책결정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및 정확한 정보의 부족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 ④ 구성원의 합의로 주관적·상대적인 정책평가기준이 활용될 수 있다.

* 해설 : 담론(談論)이란 민주적 논증으로서 담론적 접근방법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시민계층이 참여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즉, 정부는 국민들과의 담론을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의미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론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시간이 쫓기는 정책결

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고 담론과정에서 모든 정확한 정보가 표출되기가 곤란하므로 불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정책대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답 : ③

56. 행정학에 있어서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7. 대구9급>

- ① 이성과 합리성으로 요약되는 현대주의 사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 ②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상상이란, 부정적으로 보았을 때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행정의 운영이며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 ③ 포스트모더니즘은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는 설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 ④ 포스트모더니즘적 행정윤리론은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윤리기준이 달라진다는 반근원주의적 윤리론을 취한다.

* 해설 : 포스트모더니즘은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객관주의, 보편주의, 근본주의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설화(ex. 행정의 실무는 능률적이어야 한다.) 등 텍스트의 근거를 파헤치는 해체를 강조하므로 과학적 지식이나 지배적 패러다임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대안을 끊임없이 모색할 것을 강조한다. 답 : ③

구분	개념	특성
투입지표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ex) 직업훈련교육 예산 집행률	예산집행과 사업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도움
과정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ex) 직업훈련 교육별 진도율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산출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ex) 직업훈련 교육 수료자 수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결과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ex) 직업훈련 수료자 소득증가율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7. 정책의 영향 또는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유형을 분류할 때 그 성격이 가장 상이한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특수한 대상집단에게 각종 서비스, 지위, 이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정책
- ②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정책
- ③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 ④ 각종의 민간활동이 허용되는 조건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정책

해설 : ①은 편익을 나누어주는 배분정책에 해당된다. 배분정책은 정부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등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해주는 정책으로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산출제공하는 정책이다. 반면, ②③④는 민간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규제정책에 해당된다. ②는 일반적인 규제정책, ③은 경쟁적 규제정책(인허가 등 독점적 권리를 줌과 동시에 규제), ④는 보호적 규제정책(국민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활동을 규제)에 해당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302~304 페이지) 답 : ①

3. 다음 정책유형의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2008 서울9급>

- ① 구성정책은 조세, 병역, 물자수용, 노력동원 등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② 분배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이다.
- ③ 상징정책은 국민전체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포함된다.
- ④ 재분배정책은 돈이나 재산, 권력 등을 본능이 소유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이다.
- ⑤ 규제정책은 특정한 개인, 기업체, 조직에 제재나 통제 및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해설 : ①은 민간에서 자원을 뽑아내는 추출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구성정책은 정체체제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정책으로서 선거구조조정, 정부기관 신설 등이다. 답 : ①

4. 다음의 정책 중 성격이 다른 것은? <2008 국회8급>

- ① 국유지 불하
- ② 임대주택의 건설
- ③ 농민을 위한 영농정보 제공
- ④ 연구개발비 지원
- 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해설 : 임대주택건설은 저소득 빈곤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해주는 주택정책으로서 재분배정책에 해당된다. 주의할 것은 주택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리로 자금을 융자해주는 정책으로서 분배정책에 해당되므로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분배정책의 유형들이다. 답 : ②

*** 정책의 유형(2008 비타민행정학 366페이지)**

(3) 재분배정책
 ① 의의 :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 redistributive policy)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ex) 소득세의 누진세율, 특별소비세, 종합부동산세, 영세민취로사업, 임대주택건설, 저소득층 세액감면 등>.

5. Lowi의 정책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8 경남9급>

- ① 분배정책 - 단순한 개별화된 의사결정이며 세부사업의 집합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다.
- ② 재분배정책 - 비용부담자(피수혜자)와 수혜자간 이해충돌 또는 갈등이 수반된다.
- ③ 규제정책 - 강제력이 행사되며 규제정책을 구현하는데 관료의 재량권은 거의 없다.
- ④ 구성정책 -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대외적인 가치 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다.

해설 : 규제정책은 정책대상 집단이 규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의 재량권이 개입된다. ① 분배정책(ex. 주택자금대출, 공원건설 등)은 편익을 나누어주는 정책으로서 개별적 의사결정을 통한 세부사업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정책을 구성하게 된다. (ex. 각 지역의 국도건설이 국가도로연결망사업을 구성). 답 : ③

6. 규제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9 서울9급>

- ① Lowi는 정책의 한 유형으로 규제정책을 제시하였다.
- ②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한다.
- ③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 ④ 환경오염, 독과점을 방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정책이다.
- ⑤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해설 :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으로서 ①②④⑤는 맞는 지문이다. ③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재분배정책에 대한 내용이다.(2010 비타민행정학 359~360페이지) 답 : ③

7. 엘리트이론과 다원주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19세기 말의 고전적 엘리트이론가들은 엘리트들이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 ② 1950년대 Mills는 지배적인 엘리트들이 공통의 사회적 배경과 이념 및 상호 관련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③ 신엘리트이론에서는 무의사결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 ④ 다원주의론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⑤ 신다원주의론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에 정치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해설 : ④ 다원주의론은 미국의 전통적인 무국가성(無國家性)을 배경으로 하고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정부는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풍향계(조정자, 심판자, 브로커, 중개인)의 역할만을 한다는 이론이다. 즉, 다원주의론에서는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에 의하여 권력과 정책결정과정 이 독점화되어 있지 않고 분권화(분산화)되어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은 유동적이고 정치적 균형은 갈등과 타협, 협상의 결과로 본다. ⑤ 신다원주의론은 정부는 기업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불평등구조를 심화시켜 왔으며 불평등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원주의론을 비판수정하면서 나왔지만, 여전히 신다원론의 핵심은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367페이지) 답 : ④

8. 다음 중 밑줄 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은? <2008 서울7급>

R. Dahl은 미국 ① New Haven의 조사를 기초로 민주주의에서 권력이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② 독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P. Bachrach와 ③ M. Baratz는 핵심적 권력을 갖는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는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현상을 강조하면서 ④ 무(無)의사결정이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A. Gramsci가 ⑤ hegemony라는 개념을 통해 지배계급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지배를 해나간다고 지적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해설 : 달(R. Dahl)은 미국 뉴헤이븐(New Haven)시를 대상으로 170년간의 주요 정책결정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과두적 사회에서 다원주의적 사회로 변모해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엘리트가 분산되고 이렇게 분산된 엘리트들은 경쟁적으로 대중이익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선거와 같은 엘리트 간의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대중이익이 최대한 반영된다는 다원적 권력이론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문에서 권력이 특정한 사회집단에게 독점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내용이 틀렸다. 답 : ②

* 그람시(Antonio Gramsci)의 Hegemony
사전적으로 지배권, 주도권의 의미를 갖는 헤게모니(Hegemony)는 1921년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설한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옥중노트(Prison Notebooks)>에서 자본주의의 정치적 성격 즉, 부르조아계급이 노동자계급에게 행사하는 통제의 의미로서 사용한 용어이다. 한마디로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에 의한 '보이지 않는 힘'의 지배와 피지배계급의 동의(同意)와 순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배계급이 물리적 강제력(위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제도, 사회관계, 관념 등의 통합적 관계망 속에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자신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3. Bachrach & Baratz가 주장한 무의사결정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9 국가9급>

- ① 공익 및 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현재적인 도전을 억제한다.
- ② 정치과정에 진입하려는 요구를 제한하여 정책문제화되는 것을 억제한다.
- ③ 기존의 규칙이나 제도적 과정을 이용한다.
- ④ 넓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은 정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

해설 :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non-decision making)은 지배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인 도전을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즉, 기존 엘리트세력의 이익옹호나 보호를 위하여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함으로써 정치 권력이 없는 일반대중이나 약자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ex) 거대한 철강회사(US steel)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치체제가 공장의 공해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함. 따라서 공익을 고려하지 않는다. (2009 비타

9.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 <2008 경기9급>

- ①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 ②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사결정을 방치한다.
- ③ 기득권에 반하는 문제를 배제시키는 행위이다.
- ④ 특정 요구가 정책문제로 채택되는 것을 봉쇄하는 방법으로서 규칙·절차를 수정·보완하기도 한다.

해설 : 무의사결정은 지배엘리트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의 도전을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즉, 기존 엘리트세력의 이익옹호나 보호를 위하여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함으로써 정치권력이 없는 일반대중이나 약자의 이익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ex. 거대한 철강회사(US steel) 때문에 지역사회의 정치체제가 공장의 공해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함>. 따라서 ①은 무의사결정과 무관하다. ④는 가장 간접적인 무의사결정 전략이다. 답 : ①

10.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다.
-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섬 게임이다.
-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해설 : 헤클로(H. Hecl, 1978)는 참여의 증가, 이익집단의 폭발현상, 의회의 파편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하위정부가 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책이슈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한 대안적 모형으로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① 정책네트워크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이 존재하는 제도적 특성을 지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정책문제망은 이슈네트워크로서 정책공동체보다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③ 정책네트워크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수평적 협력관계이므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의 관심은 증대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은 경쟁적 특성을 지니는 negative sum 게임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협력적 특성을 지니는 positive sum 게임을 기반으로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이익집단의 폭발적 증가는 특정 이익집단만의 폐쇄적 참여를 용인하지 않으므로 하위정부모형의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역시 칠판에서 그림으로 강조한 바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370페이지)답 : ⑤

* 이슈네트워크와 정책공동체(2010 비타민행정학 373페이지)

구 분	이슈네트워크	정책공동체
정책 행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행위자, 이슈에 따라 수시로 변동 (이익집단, 전문가, 언론, 비조직화된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 ⇒ 개방적·불안정적·유동적 • 경계의 개방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식적·조직화된 행위자에 한정 (공무원, 연구원, 교수, 의원 등) ⇒ 폐쇄적·안정적·지속적 ※ 조합주의처럼 제도화된 관계에는 이르지 못함. • 경계의 개방성 낮음
상 호 관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경쟁적, 상호의존성 약함, 권력의 편차가 심함, 연합형성 전략, 갈등의 존재 • negative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협력적, 상호의존성 강함, 비교적 균등한 권력(공동의 서비스전달체계의 책임은 수직적 상호의존관계를 지님) • positive 게임
참여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이익 극대화(이해 공유도 낮음) ※ 이슈의 성격에 따라 이합집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공유와 협조 (이해 공유도 높음)
유형의 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행위자들로서 특별한 구조가 미형성 • 예측가능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번한 상호작용 ⇒ 안정된 구조적 관계로 유형화(언어, 가치관, 문화 등 공유) • 예측가능성 높음
자 원 배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보유 면에서 격차가 존재하고 기본관계는 교환관계가 아닌 자문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고 기본관계는 교환관계
정 책 결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이 많이 변경 (예측하기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의 정책내용대로 정책결정 (예측하기 용이)
정 책 집 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된 정책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정된 정책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음.

11. 정책결정의 참여자에 관한 주요 이론 중에서 '이슈연결망(Issue Network)'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의회스태프, 타 행정기관의 관료, 사회과학자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비제도권적인 통로를 통해 유동적이고 불안정하게 상호작용한다.
- ② 정책결정이 부문별 행정관료, 이익집단, 의회위원회 간의 연대에 의해 배타적으로 주도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 ③ 특정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에 기여하는 주장을 하는 집단의 의견이 정책결정에 반영된다.
- ④ 관료와 군부 그리고 기업엘리트를 권력의 세 축으로 보는 권력엘리트 모형의 견해와 흡사하다.
- ⑤ 정책결정의 참여자 중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부와 이익집단 간의 상호협력을 중시한다.

해설 : 이슈네트워크는 Hecllo가 하위정부모형의 이론적 설득력이 떨어지면서 제시한 대안적 모형으로서 정책이슈에 따라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네트워크이다. 이슈네트워크는 다양한 견해의 대규모 참여자들이 특정한 쟁점이 제기될 때 형성되는 개방적·유동적 네트워크로서, 느슨하고 일시적인 관계와 유동적인 참여자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쟁점을 통제하는 우월한 행위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슈의 진행에 따라서 새로운 연합이 형성되기도 한다. ②는 하위정부모형, ③은 다원론, ④는 Mills의 지위접근법(군산복합체), ⑤는 조합주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답 : ①

12. 'Policy Network', 'Iron Triangle', 'Non-Decision Making'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펼 수 있는 주장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2009 서울7급>

- ① 언론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 ② 정부정책은 사회 내 특정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
- ③ 정부정책은 해외상황보다는 국내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④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가용자원의 크기를 가장 먼저 고려한다.
- 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이상론자들이 현실론자들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해설 : Iron Triangle은 하위정부으로서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부처·이익집단 삼자가 은밀하게 결탁하여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Non-Decision Making은 신엘리트론의 핵심내용인 무의사결정으로서 '지배엘리트는 자신의 이익에 도전하는 이슈를 억압한다'는 내용이다. 두 이론은 정부정책이 사회 내 특정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모형이다. 다만 Policy Network(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정책네트워크는 학자에 따라서 범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가 수평적 관계를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볼 때 사회 내 특정집단의 이익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정책이 사회 내 특정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화준교수는 정책공동체 내의 하나의 하위집합으로 이해하는 Haas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정책네트워크를 정책공동체와 분리시키는 입장을 취한다. 이에 의하면 정책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지식에 대한 관심, 즉 공유된 지식의 토대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반면,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지식의 토대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정규적인 접촉을 하도록 하는 어떤 유형의 물질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묶여 있다(노화준 정책학원론). 이 견해에 의하면 정책네트워크도 특정집단의 이익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364, 370페이지) 답 : ②

13. 정책결정의 권력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신베버주의에 속하는 Krasner에 의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와의 경제관계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때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② Bentley와 Truman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론에 따르면, 정치과정의 핵심은 이익집단활동이며 정책과정에서 관료들의 소극적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 ③ 정책네트워크모형에 의하면, 국가는 자신의 정책이해관계를 가지고 이를 정책과정에서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에 따르면, 국가와 이익집단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 간에는 빈번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안정적이고 협력적이라고 본다.

해설 : ① 신베버주의는 정부 또는 국가를 스스로의 권력을 합리적으로 행사하는 하나의 실체로서 보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관계에서 정책결정시 기업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한다고 본다. ② 이익집단론은 이익집단들의 요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주도자를 이익집단으로 보며 국가는 오로지 풍향계 역할만 하는 수동적 존재라고 인식한다. ③ 정책네트워크모형은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모형으로서 정책을 둘러싼 네트워크(수평적 협력관계)가 정책과정을 주도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따라서 국가도 다른 참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된다. ④ 이슈네트워크모형은 다양한 대규모 참여자들이 특정쟁점이 제기될 때 형성되는 개방적 유동적 네트워크로서 느슨하고 일시적인 관계, 이합집산, 경쟁적 관계, negative game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안정적이고 협력적 관계는 정책공동체에 해당된다. 답 : ④

4. 정책과정에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1인1표제가 헌법의 비례대표제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사법부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이다.

- ② 헌법재판소는 주로 국가적 정책결정과 관련된 판결을 통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국민은 국가정책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때, 헌법소원을 통해 정책변경을 모색할 수 있다.
- ④ 사법부의 판결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가 정책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 법률의 해석과 판단을 통하여 사법부는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판결 자체가 새로운 정책결정에 해당된다. ex) 새만금간척 사업에 대한 법원의 중지결정(1심) 및 개시결정(2심), 헌법재판소의 수도권전 특별법의 위헌판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합헌판결(2005. 11) (2009 비타민행정학 351페이지) 답 : ④

*** 참고 : 1인1표제와 비례대표제**

-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1인1표제는 지역구 의원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인 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 1인1표제로 표출된 유권자의 의사를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의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2001, 현행 1인1표제 하에서의 비례대표제 배분방식은 유권자의 정당지지와 후보자 지지가 다를 경우 절반의 선택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도 정당의 명부작성 행위에 따라 결정돼 직접선거 원칙에도 위배)이 남에 따라 2004년 17대 총선부터 1인2표제를 도입함으로써 1표는 지역의원명부를 통해 지역구의원을 선택하도록 하고 1표는 정당명부를 통해 지지정당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14. 제3종오류(TypeIII err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수단주의적 기획관의 한계를 나타내는 오류유형이다.
- ② 문제선택 자체가 잘못된 경우의 오류를 의미한다.
- ③ 메타오류(meta error)라고도 한다.
- ④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의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다.

해설 : ①, ②, ③ 제3종오류는 정책문제 자체를 잘못 정의(인지, 설정)한 오류로서 근본적 오류 또는 메타(meta)오류라고도 한다. 제3종오류는 수단적 기획관을 비판하며 대두된 것으로서 기획을 조직내부의 능률적 관리의 수단으로 이해한 수단적 기획관은 규범적 기획관과 달리, 정책문제나 목표 등은 이미 명확히 전제되었다고 보고 재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제3종오류를 방지하기 곤란하다. ④ 제3종오류는 정책의제설정 과정에서 정책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제1종오류(틀린 정책대안을 선택)와 제2종오류(옳은 정책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이다. 답 : ④

15.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정책문제의 중요성
- ② 정책 대상 집단의 영향력
- ③ 의제설정 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 ④ 전문가의 문제 분석 능력
- ⑤ 정치체제와 정치인의 속성

해설 : 정책의제설정이란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으로서 주관에 많이 개입되고 많은 갈등이 수반된다. 정책문제의 중요도, 정책대상집단의 영향력, 의제설정주체의 성향과 가치관, 정치체제

와 정치인의 속성 등은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문가의 문제분석능력은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비교평가하는 정책분석에서 필요한 내용이다. 답 : ④

16. 정책의제설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킹던(Kingdon)은 문제, 정책, 정치라는 세 변수가 각기 다른 맥락에서 흐르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정부의제가 정책의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본다.
- ② 콕과 그 동료들(Cobb, Ross&Ross)에 따르면, 공식의제가 성립되는 단계는 외부주도 모형의 경우에는 진입단계, 동원모형과 내부접근 모형의 경우에는 주도단계이다.
- ③ 콕(Cobb)과 엘더(Elder)가 언급한 '체제의제'는 특정 쟁점에 대해 정책대안이나 수단을 모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 ④ 존스(Jones)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을 크게 문제의 인지와 정의, 문제에 대한 결집과 조직화, 대표, 의제설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해설 : 체제의제는 공중의제로서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며 제도의제가 정부의제로서 구체적이다. 수업때 칠판에서 강조한 것이 그대로 출제되었다. ①은 흐름차모형의 내용이다. ② 공식의제는 정부의제를 의미하며 외부주도형은 마지막 진입단계(entrance)에서 공식의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동원형과 내부접근형은 처음단계인 주도단계(제기단계, initiation)에서 이루어진다. 답 : ③

* 공중의제와 정부의제

구분	정정길	안해균	Cobb과 Elder	Eyestone	Anderson
채택 전	공중의제	환경의제	체제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채택 후	정부의제	정부의제	제도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

구분 \ 모형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문제전환의 방향		환경 ⇄ 정책결정자	환경 ⇄ 정책결정자	양자 간 관계없음
단계	제기 단계 (initiation)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고층의 표명	정책결정권자에 의한 새로운 정책의 공표	정책결정권자나 측근자에 의한 정책안 제시
	구체화 단계 (specification)	일반적 고층이 특정한 정책적 요구로 전환(이익집단, 정당 등이 주요 역할)	공표된 정책의 세부적 사항(세목) 결정	구체적 제안 제시
	확산 단계 (expansion)	다른 환경집단에게 이슈(논제)의 중요성 인식	공중에게 정부정책의 중요성과 유용성 인식 (대중매체와 상징이용)	
	진입 단계 (entrance)	공중의제의 정부의제화 (정부기관의 관심표명)	정부의제의 공중의제화 (정책에 대한 공중의 지지표명)	

17.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내부접근형은 행정관료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유형이다.
- ② 동원형은 정부의제화한 후 구체적인 정책결정을 하면서 공중의제화한다.

- ③ 내부접근형에서 정부의제는 정부PR을 통해 공중의제화된다.
- ④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이 발달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체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

해설 : ③ ③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부에서 정부의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고위관료에 의하여 비공개적으로 정부의제화되는 경우(ex)1980년 대입 본고사 폐지, 관료주도하의 경제개발계획, 국토건설사업, 고속도로사업, 서울시 지하철사업 등)와 ㉡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하여 주도되어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하는 경우(ex) 무기구입계약, 특혜금융, 금강산관광사업 등)가 있다. 공중의제화를 막기 때문에 음모형(陰謀型)이라고도 한다. 즉, 정부홍보활동(PR) 등을 통한 정책의 대중확산을 시도하지 않으며 이 점에서 동원형과 다르다. (2010 비타민행정학 402페이지) 답 : ③

18. 다음 중 합리성의 제약요인이 아닌 것은? <2008 경기9급>

- ① 자원(정보, 시간, 비용)의 부족
- ② 목표의 모호성
- ③ 기득권자의 저항
- ④ 선례무시 태도

해설 : 선례나 표준운영절차에 집착하기 되면 합리적 분석이나 결정을 저해하게 된다.답 : ④

19. 정책결정요인론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초기 연구에서는 정치적 요인보다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내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후기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함께 정치적 요인도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정책환경이 정책의 주요한 내용을 규정한다는 것을 규명해 주었다는 점에서 정책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 ④ 정책결정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정책유형을 도출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해설 : ④ 정책결정요인론은 정책을 둘러싼 환경요인(정치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의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이론으로서 정책유형을 도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① 초기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한 이론들을 지칭한 용어로서 행정학계에서는 1940년대 말 생태론이나 1950년대 비교행정 그리고 경제학계에서는 1950년대 기존 정치학자들(Key, Lockard)을 뒤집음으로써 논쟁을 촉발시킨 경제학자인 Fabricant와 Brazer의 연구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 경제학자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정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므로(ex. 소득수준이 재정지출에 큰 영향) 맞는 지문이다. ② 후기연구는 1960년대 후반 Cnudde와 McCrone의 절충모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사회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정치체제)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봄으로써 절충을 시도하였으므로 맞는 지문이다.답 : ④

20.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합리모형은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게 함으로써 많은 분석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② 점증모형은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며,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③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 ④ G. T. Allison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세 가지 모형의 의사결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중 정치모형(Model III)은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 ⑤ 쓰레기통모형은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 다니다가 어떤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해설 : Allison Model III(관료정치모형 또는 정치모형)은 참여자 개개인이 각자 보유한 정치적 자원에 따라 정치적 게임을 한다는 모형이다. 즉, 여기서는 정책은 상이한 목표를 지닌 개별적인 참여자들 간의 타협, 갈등, 흥정 등의 정치적 게임의 산물이라고 이해한다. 공공재의 결정이 정치적 표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은 공공선택이론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439~440페이지) 답 : ④

구분	model I(합리모형)	model II(조직모형)	model III(정치모형)
조직관	조정과 통제가 잘되는 유기체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독립적·개별적 집합체
집단의 응집력	강함.	약함.	매우 약함.
의사결정권 위치	최고결정권자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	독립적인 개별적 행위자
참여자의 목표	조직 전체의 목표	조직 전체목표 + 하위조직의 국지적 목표	조직 전체목표 + 하위조직의 국지적 목표 + 개인과 집단의 이익
의사결정방식	총체적·분석적 탐색과 결정	준해결, 순차적 대안탐색, 기존 관행과 프로그램 목록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른 협상, 타협, 흥정 등
정책일관성	강함(바뀌지 않음).	약함(자주 바뀜).	매우 약함(거의 일치하지 않음).
조직 내 적용계층	조직전반	하위계층	상위계층

21. 정책결정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회사모형은 개인의 의사결정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합리모형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 ②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들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일련의 목표들을 설정할 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
- ③ 최적모형은 '현실'과 '이상'을 통합한 것으로 메타정책결정(meta-policy making)을 중요시 한다.
- ④ 관료정치모형은 정부를 잘 조직화된 유기체로 간주하며, 정책결정과정은 본질적으로 정치게임에 참여하는 개인의 경우와 같다고 본다.

해설 : ④는 Allison 모형 중 Model III인 관료정치모형이 아니라, Model I인 합리적 행위자모형의 내용이다. Model I인 합리적 행위자모형은 조직을 '개인'과 같은 유기체'로 이해하므로 개인적 차원에서 합리적·분석적 결정을 하는 합리모형의 논리를 집단적인 국가정책결정에 적용한 것이다. 반면 관료정치모형은 참여자들이 독자적·개별적 집합체를 이루고 정치적 게임에 의하여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수업때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답 : ④

22.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점증모형 : 합리모형의 의사결정은 당위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

한 정보와 분석능력의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② 합리모형 : 정책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와 가치는 그 중요성에 따라 분명히 제시되고 서열화될 수 있다.

③ 만족모형 :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한정된 대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을 모색하는 선에서 만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혼합주사모형 :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근본적 결정의 경우 합리모형을, 세부결정의 경우 점증모형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설 :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처방으로 제시된 점증모형(Lindblom)에서는 합리모형에 입각한 의사결정이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즉, 합리모형은 엄청난 분석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답 : ①

23. 다음은 정책결정 모형 가운데 점증주의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정책결정과정의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 ③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이 초래된다.
-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강하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 ⑤ 정책의 축소, 종결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해설 : ① 점증모형은 참여자간 동의와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민주적 성격을 띠지만, 기존정책을 건드리지 않고 소폭의 변화만을 채택하므로 기존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기득권자를 옹호하게 된다. 따라서 소수 기득권자에 의하여 정책결정과정의 주도될 수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개도국과 같이 불안정한 사회는 합리모형이 적합하며 선진국과 같이 안정된 사회는 점증모형이 적합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기존정책은 불변인 점을 전제하므로 잘못된 정책이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④ 점증모형은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들로 하여금 분석적·합리적 결정노력을 회피하게 하는 이론적 무기를 제공하면서 보수주의를 심화시키며 환경변화에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쇄신적 결정을 통한 정책의 종결을 곤란하게 하고 눈덩이 굴리기식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맞는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430페이지) 답 : ④

24. 점증주의식 정책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7급>

- ①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가감식 결정
- ② 목표와 수단의 상호조절이 가능
- ③ 참여집단의 합의를 중시
- ④ 안정적 사회에 적용 가능
- ⑤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 가능

해설 : ⑤ 점증주의는 현재 정책에서 소폭적인 변화만을 가감한 것을 정책대안으로 삼기 때문에 보수성을 심화시키고 환경변화에의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안정적 사회인 선진국에 적합한 것은 점증주의인 반면 불안정적 사회인 개도국에 적합한 것은 합리모형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430페이지) 답 : ⑤

6. 정책결정 모형 중 초합리성(extra-rationality)을 강조하는 모형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최적모형
- ② 혼합탐사모형
- ③ 쓰레기통모형
- ④ 사이버네틱스모형

해설 :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을 토대로 하되, 정책결정의 성과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초합리성과 초정책결정이란 개념을 도입한 모형이다. 이중 초합리성(extra rationality)은 합리성 이외의 것 즉 직관·영감·통찰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결정자가 자원·시간·능력 등이 부족할 때, 선례가 없는 비정형적 결정을 해야 할 때, 상황이 불확실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합리적 분석방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수업때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의 천수만 간척사업, 조선사업, 경부고속도륙 건설사업 등을 예시로 하여 설명하였다.주의할 것은 최적모형은 초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합리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초합리성으로 이를 보완한다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 사례연구, 감수성 훈련 등이 초합리성에 도움을 주는 기법들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361페이지) 답 : ①

25.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모형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습관적 의사결정 ② 적응적 의사결정
- ③ 인과적 학습 강조 ④ 불확실성의 통제
- ⑤ 집단적 의사결정

해설 : 사이버네틱스 모형(cybernetics model)은 합리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서, 분석적 합리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습관적·적응적 의사결정을 다룬 모형이다. 즉, 광범위하고 복잡한 탐색을 거치지 않고 주요 변수에 대한 정보만을 미리 정해진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처리하고 미리 개발해둔 해결목록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인과적 학습은 대안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면 대안의 결과에측을 수정하는 학습방식으로서 합리모형에 해당된다. 사이버네틱스모형은 도구적 학습을 내용으로 한다. 답 : ③

26. 쓰레기통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조직의 구조는 체계적이기보다는 느슨한 형태로 구조화되어 운영된다.
- ② 조직화된 혼란의 주요 원인은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 ③ 쓰레기통은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의미한다.
- ④ 최종의사결정은 간과(oversight) 또는 탈피(flight)보다는 문제해결(problem resolu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해설 : 쓰레기통모형은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 하에서 응집력이 약한 조직(ex. 대학, 연구소, 행정부처간, 정당간)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를 연구한 이론이다. 합리모형은 문제해결이 최종의사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쓰레기통모형에 의하면 조직화된 무정부상태에서는 문제해결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탈피(flight, 관련된 문제들이 스스로 다른 의사결정의 기회를 찾아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간과(oversight,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제기되기 전에 재빨리 결정) 등 비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답 : ④

2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9 지방수탁7급>

미국에서 발간된 콜만 보고서(Coleman Report)는 학생들의 학업 열성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의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급의 학생 수, 학생 1인당 예산, 도서관이나 실험실 시설, 교사의 봉급, 교과과정의 질 등 종래 교육정책결정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인들이나 학생들의 성별 등은 학업 열성이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학생들의 가정환경과 학급동료의 가정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강제버스통학(busing) 정책이 실시되었다.

콜만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 사용된 다양한 독립변수 중에서 정책변수로 고려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① 학생들의 가정환경
- ② 학급당 학생들의 인종구성비율
- ③ 학생 1인당 예산
- ④ 교과과정의 질

해설 : 본 예시문은 가정환경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1966년 콜만보고서를 기초로 출제한 문제이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원인변수 :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변화량이 종속변수(결과변수 : 영향을 받는 변수)의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독립변수는 정책변수(policy variable)와 환경변수(environment variable)로 나눌 수 있는데 정책변수는 통제 또는 조작이 가능한 변수인 반면 환경변수는 통제 또는 조작이 불가능한 변수로서 제약조건이 된다. 이 문제에서 ①은 정부가 통제 또는 조작할 수 없는 환경변수인 반면, 나머지는 정책변수이다. 답 : ①

28. 정책문제의 구조화에 이용되는 기법들 중 연결이 옳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경계분석(boundary analysis) -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 ② 계층분석(hierarchy analysis) - 문제 상황의 원인 규명
- ③ 유추분석(analogy analysis) - 상충적 전제들의 창조적 통합
- ④ 분류분석(classification analysis) - 문제의 위치 및 범위 파악

해설 : 정책문제의 구조화란 제3종요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책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서 분류분석, 계층분석, 시네틱스, 브레인스토밍, 가정분석, 경계분석 등이 있다. ① 문제의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것은 분류분석이고 ③ 상충적 가정이나 전제를 통합해나가는 것은 가정분석이며 ④ 문제의 위치 및 범위를 파악하는 것은 경계분석이다. ② 계층분석은 문제를 유발시킨 원인을 차례차례 발견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맞는 설명이다. 수업때 그림으로 산물문제를 예시하면서 설명하였다. 답 : ②

29.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08 국가9급>

- ① 편익비용비(B/C Ratio)
- ②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③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④ 실행가능성(Feasibility)

해설 : 비용편익분석에서 대안의 평가기준은 편익비용비(B/C), 순현재가치(B-C), 내부수익률(순현재가치=0 또는 B/C=1 로 만드는 할인율, 투자수익률)이다. 실행가능성은 대안의 일반적인 평가기준에 해당되는 것이지, 비용편익분석기법의 평가기준이 아니다. 답 : ④

30.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 ②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 ③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 ④ 적절한 할인율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내부수익률 기준을 사용하며,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을 상회하면 일단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해설 : 대부분의 공공사업은 초기에 비용이 집중되고 편익은 장기에 나타나게 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일수록 편익이 더욱 많이 작아지게 되므로 순현재가치(편익의 현재가치-비용의 현재가치)도 작아진다. 따라서 미래일수록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며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 수업때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답 : ③

31. 경기도가 혁신개발 후보지를 부천시, 포천시, 성남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각 도시에 대한 비용과 편익의 흐름을 동일 시점으로 총합하여 환산한 값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고 하자. 대안들 중 경기도지사가 포천시를 선정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대안선정 기준에 근거한 의사결정인가? <2008 경기9급>

구분	비용	편익
부천시	50	60
포천시	10	18
성남시	30	45

- ① 순현재가치(NPV)
- ② 비용편익비율(B/C ratio)
- ③ 내부수익율(IRR)
- ④ 총액배분·자율편성제(Top-down)

해설 : 현재가치로 환산했으므로 별도의 환산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이 상태에서 포천시를 선정했다는 것은 B/C비율이 큰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 : ②

구분	비용(C)	편익(B)	순현재가치(B-C)	B/C 비율
부천시	50	60	10	1.2
포천시	10	18	8	1.8
성남시	30	45	15	1.5

32. 정책분석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용편익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2008 군무원>

- ① 순현재가치법
- ② 비용편익비율
- ③ 내부수익률
- ④ 투자회임기간

해설 : 순현재가치법이 오류가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답 : ①

*** 회수기간법(자본회수기간, 투자회임시간, Payback Period Method)**

1. 의의 : 회수기간법은 투자에 소요된 총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고 총비용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대안이 있을 때 회수기간이 짧은 대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하며 특정대안의 경우 산출된 회수기간이 이미 설정된 목표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2. 장단점 : 재정력이 부족하여 자금의 회수가 가장 중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법이지만, 전통적인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을 산정할 때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 이후 현금흐름을 무시하는 특성을 지닌다.

3. 예시 : 총편익은 A사업이 크지만, A사업은 회수기간이 2.5년인 반면 B사업은 2년이므로 회수기간이 짧은 B사업 선택

연도	2008(현재)	2009	2010	2011
A사업의 현금흐름	-100	30	40	60
B사업의 현금흐름	-100	50	50	20

33.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08 서울9급>

- ① 회귀모형
- ② 시계열자료분석
- ③ 투입산출분석

④ 계획의 평가검토기법(PERT)

⑤ 경로분석

해설 : 실증될 수 있는 일련의 법칙이나 명제에 기초하여 인과관계를 토대로 어떤 사건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예견 또는 예언(prediction)으로서 선형계획, 투입산출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PERT, 대기행렬이론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시계열분석은 현재와 과거의 역사적 경향을 미래로 연장시켜 예측하는 것으로서 귀납적 추론에 입각하는 것으로서 사후에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는 있어도 사전에 인과관계를 토대로 미래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②

34.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의 형태와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여 독립변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량을 알아보는 분석기법은? <2008 군무원>

① 회귀분석

② 분산분석

③ 상관분석

④ 다차원척도

해설 : 인과관계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회귀분석이다. ② 분산분석은 독립변수의 평균값 차이가 종속변수의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 ④ 다차원분석은 각 대상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평가의 기준이 되는 차원을 찾아내고 각 차원 위에서 평가대상들의 위치를 규명하는 기법이다. 답 : ①

35. 두 개 이상의 표본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는 분석 방법은? <2009 국가7급>

① 분산분석

② 부분상관분석

③ 경로분석

④ 확인적 요인분석

해설 : 분산분석에 대한 내용이다. 분산분석은 독립변수의 평균값차이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2010 비타민행정학 507페이지) 답 : ①

*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변량분석)** : 표본 평균의 분산을 요인별로 분리해 생각함으로써 어떠한 요인의 영향에 의해 변동이 야기되었는가를 검증하는 분석기법이다. 즉, 통계학에서 둘 이상의 집단(표본)을 비교하고자 할 때 집단 내의 분산,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집단 간 분산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F분포(분산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분포비율)를 이용하여 가설검정을 하게 되며 통계학자 피셔(R. A. Fisher)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 표본(sample) : 모집단(population)의 부분집합이다. 모집단의 모든 값에 대해 전수조사(census)나 전부 조사(complete enumeration)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를 한다. 표본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과정(process)을 표집(sampling)이라고 한다.

- 분산(分散, variance, 변량) : 확률변수가 기댓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지를 가늠하는 숫자로서 분산도가 클수록 자료들이 평균에서 멀리 흩어져 있고 분산도가 작을수록 평균의 주위에 모여 있다는 것이다. 즉, 분산도가 작을수록 자료의 분포는 평균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분포도가 클수록 자료들 간의 차이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 F분포 : 분산의 비교를 통해 얻어진 분포비율로서 이 비율을 이용하여 각 집단의 모집단분산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정과 모집단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 **요인분석(Factor Analysis)** :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factor)으로 자료 변동을 설명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으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지정되지 않고 변수들 간의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모형에 대한 아무런 기존의 이론적인 구성이나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요인이나 개념을 추출해내는 분석방법	기존 연구의 이론이나 경험적 연구결과로부터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이론적 결과를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을 가설형식으로 모형화하기 위해 분석하는 방법

* **경로분석(Path Analysis)** : 특정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식별하고 이들 변수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는 분석을 말한다. 경로분석에서는 단순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특정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밝혀낼 수 있다

* **상관분석**

1. 의의 : 대등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즉 상호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분석하는 기법
2. 종류
 - ① 단순상관분석 : Y와 X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 ② 다중상관분석 :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이 어느 한 변수와 갖는 관계의 정도를 파악
 - ③ 편상관분석 : 두 변수의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제3의 변수가 이 둘 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이를 통제한 후 분석
 - ④ 부분상관분석 : 제3의 변수가 어느 한 변수에만 영향 미치는 경우 이를 통제한 후 분석

36.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AH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1970년대 사티(Thomas Saaty) 교수에 의해 개발되어 광범위한 분야의 예측에 활용되어 왔다.
- ②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데 확률 대신에 우선순위를 사용한다.
- ③ 두 대상의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④ 기본적으로 시스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해설 : 계층화분석은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므로 상호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답 : ③

*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1. 의의

(1) 개념 : 1970년대초 펜실버니아 대학의 Thomas Saaty에 의하여 개발된 이래 의사결정 대안을 평가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 정부사업의 예비적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기준분석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하여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이론에 기초하여 하나의 문제를 시스템으로 보고 문제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눈 다음,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하고 각 계층의 요소들이 상위계층의 평가기준들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를 둘씩 짝을 지어 비교하고 이 평가기준에 따른 대안들의 상대적 선호도 또는 중요도를 숫자로 전환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각 대안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함께 많이 사용된다.

(2) 유용성 : 정량적인 분석이 곤란한 의사결정 분야에 전문가들의 정성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경쟁되는 요소의 가치치 또는 중요도를 구하는 데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리적인 기법만을 활용한 기타의 분석방법에 대해 강점을 가진다.

2. 내용

(1) 계층 : 최상위계층(계획문제의 경우 목표들로 구성), 몇 개의 중간계층(그 다음 계층의 요소들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평가기준들로 구성), 최하위계층(계획문제의 경우 대안들로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제1계층(목표) :	주택에 대한 만족		
제2계층(평가기준) :	주택의 크기	주택의 상태	최신설비
제3계층(대안) :	주택A	주택B	주택C

(2) 분석단계

① 1단계 - 구조화 : 문제를 몇 개의 계층 또는 네트워크의 형태로 구조화한다. 이때 동일성의 원리와 분해의 원리를 이용하게 된다.

② 2단계 - 비교 : 최하위계층에 있는 요소들은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위 계층에 있는 평가기준들에 의하여 이원비교(1대1 비교)를 하며 두 번째 계층의 요소들은 둘씩 짝을 지어 바로 위 계층의 요소(평가기준)에 비추어 평가한다. 이러한 이원비교의 가능성은 계층구조의 최상위까지 모두 존재하여야 한다.

⇨ 계층적 계속성의 법칙

③ 3단계 - 우선순위 설정 : 각 계층에 있는 요소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계층화분석법은 불확실성을 나타내는데 확률(probability) 대신에 우선순위(priority)를 사용한다. 우선순위란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다.

(3) 원리

① 동일성과 분해의 원리 : 어떤 한 문제를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누되(분해의 원리), 각 계층에는 동일한 성질의 요소들이 나열되어야 한다(동일성의 원리).

② 차별화와 비교판단의 원리 : 관찰가능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들의 강도(強度)를 차별화할 수 있고(차별화의 원리) 요소들은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비교판단의 원리).

③ 종합의 원리 : 이들 관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사 분석기법과의 비교

(1) 계층분석 : 정책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정책문제의 원인을 계층적으로 분류해 나가는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

(2) 의사결정분석 : 각 대안들이 가져오는 결과상태의 확률과 결과상태의 효용을 곱한 기대치를 계산하여 대안을 비교평가하는 분석기법

37. P광역시는 몇 개의 군소 시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시 전체를 관할하는 대형공항이 하나 있지만, 이것과는 별도로 각 군소 도시별로 공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군소 도시 중 하나인 T시는 자체공항에 대한 미래의 전략을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다.<1999 국가7급>

S_1 :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항을 개인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공항관련 보조금을 지불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
 S_2 : 현재의 관리를 유지하는 방안
 S_3 : 현재보다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S_4 : 공항을 폐쇄하는 방안
 그런데 항공수요에 대한 미래의 상황은 N_1 : 수요감소, N_2 : 현상유지, N_3 : 수요증가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이득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N_1	N_2	N_3
S_1	20	30	40
S_2	0	50	60
S_3	-50	10	100
S_4	10	0	-40

불확실한 상황에서 낙관적인 견해(maximax)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1999 국가7급>

- ① S_1 ② S_2 ③ S_3 ④ S_4

해설 : maximax기준은 편익이 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낙관적 행태이므로 편익이 가장 큰 상황은 N_3 이며 이중 편익이 가장 큰 $S_3(100)$ 대안을 선택한다. 답 : ③

38.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지식이 풍부할 때 유용한 객관적 정책분석 방법이다.
 ② 형식이 정해지지 않은 집단토론 상황에서 구성원들이 아이디어와 문제해결 대안들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③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집단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에 대해 표결하는 방법이다.
 ④ 상호 토론 없이 독자적으로 형성된 전문가들의 판단을 종합 정리하는 방법이다.
 ⑤ 전형적인 대면토론 방식의 집단적 문제해결방법으로 구성원 간 마찰이 심화될 수 있으며 다수의견의 횡포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설 : 1948년 Rand연구소에서 개발한 델파이(delphi)기법은 사이버네틱 조정이라는 과정과 절차를 활용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현상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는 기법으로서 전문가 직관에 의한 주관적 미래예측기법이다. 델파이기법은 격리와 익명성을 주요 요소로 하므로 대면접촉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②와 ⑤는 브레인스토밍의 내용이다. ③은 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의 내용이다. 이는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제한된 집단토론을 거친 후 도출된 해결방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는 방법이다. 토론이 방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좋은 의견이 고르게 개진되는 장점이 있다.(노화준) (2010 비타민행정학 488페이지) 답 : ④

39. 델파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09 국가7급>

- ㄱ.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다.
- ㄴ. 익명성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을 조합, 정리한다.
- ㄷ.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첨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 ㄹ.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의 의견을 컴퓨터를 통하여 입력하고 각 개별 의견에 대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표결한다.
- ㅁ. 구성원 간의 성격마찰, 감정대립, 지배적 성향을 가진 사람의 독주, 다수의견의 횡포 등을 피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해설 : 델파이기법은 사이버네틱 조정이라는 과정과 절차를 활용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현상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에게 서명으로 자문을 의뢰하고 이를 종합하여 합리적 안을 도출하는 기법으로서 전문가직관에 의한 주관적 미래예측기법이다. ㄷ.은 델파이기법이 아니라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내용으로서 편승기법(piggy-backing)이다. ㄹ.은 델파이기법이 아니라 명목집단기법(집단토론 후 해결방안에 대하여 표결)을 전자화한 전자회의방식이다. (2010비타민행정학 487~488페이지) 답 : ①

40.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2008 지방수탁9급>

-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
- ② 브레인스토밍
- ③ 정책 델파이 기법
- ④ 변증법적 토론기법

해설 :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것은 일반(전통적)델파이의 내용이다. 정책델파이는 일반델파이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책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의견대립을 유도하고 어느 정도 표면화되면 공개토론을 거친다는 점에서 일반델파이와 다르다. 답 : ①

*** 일반델파이와 정책델파이(2009 비타민행정학 412페이지)**

구 분	일반델파이	정책델파이
유사점	미래예측기법, 전문가 참여, 익명성, 주관적 기법	
핵심내용	합리적 다수의견 도출	의견차이와 대립 부각(구성적 갈등)
익명성	완전 익명성과 격리성	표면화시 공개적 토론(선택적 익명성)
참여자	해당 영역의 일반 전문가	정책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논의대상	일반문제	정책문제(특히, 정책수단의 영향)

41.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상호갈등적인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② 정책대안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에 발생한다.
- ③ 갈등집단들의 내부응집력이 강할 때 딜레마가 증폭된다.

④ 새로운 딜레마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정책딜레마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해설 : ① 딜레마란 두 개의 상충된 대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불가피한 선택적 상황)로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대안의 포기에서 오는 기회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대안들이 구체적이고 명료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경향은 딜레마 상황이 아니다. ④는 적극적 대응방식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442페이지) 답 : ①

42.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사업의 목표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구체적이고 대립되지 않을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 ② 소망성은 집행과정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의 내용을 바람직하게 인식하는 정도이며, 소망성이 높을수록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 ③ 규제정책의 경우 정책집행의 결과로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집행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야기된다.
- ④ 정책집행주체의 전문성 정도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정책집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⑤ 재분배정책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집행과 관련한 갈등이나 반대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정책집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 ⑤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므로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며 계층간 갈등이 매우 많고 피해집단의 저항으로 표준운영절차(SOP)수립이 곤란하며 이것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집행되기가 곤란하므로 집행성공 가능성이 낮다. (2010 비타민행정학 360페이지) 답 : ⑤

43. 다음 중 나카무라 & 스몰우드의 정책집행 모형 중에서 정책목표 합의를 토대로 행정적 권한을 주고 집행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적·기술적·협상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유형은? <2008 경북9급>

- ① 고전적 기술자형
- ② 지시적 위임가형
- ③ 정책적 협상자형
- ④ 재량적 실험가형

해설 : 지시적 위임자형에 대한 내용이다. 답 : ②

44. R.T.Nakamura와 F.Smallwood가 분류한 정책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정책결정가는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집행가는 이러한 목표의 바람직성에 동의한다.
- ② 정책결정가와 정책집행가는 정책목표의 바람직성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같이 하지는 않는다.
- ③ 정책결정가가 정책형성에 정통하고 있지 않아 많은 재량권을 정책집행가에게 위임한다.
- ④ 정책집행가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한다.

해설 : ①은 지시적 위임자형, ②는 협상자형, ③은 재량적 실험가형, ④는 관료적 기업가형에 대한

내용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520~521페이지) 답 : ④

* Nakamura와 Smallwood의 정책집행자모형(1980)

구 분	정책수단		정책목표	
	기술적 수단	행정적 수단	구체적 목표	추상적 목표
고전적 기술관료형	집행자 →	← 결정자		
지시적 위임자형	집행자(기술적·행정적·협상적 수단) →		← 결정자	
협상자형	동의×, 합의×, 양자 협상 →		← 결정자 제시	
재량적 실험가형			집행자 결정 →	← 결정자 제시×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득, 협상 →	

45. 정책집단의 규모 및 조직화 정도와 정책집행의 용이성 정도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수혜집단이 희생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 ② 희생집단이 수혜집단보다 크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 ③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가 비슷하고 양 집단의 조직화 정도가 강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다.
- ④ 수혜집단과 희생집단의 규모에 관계없이 각 집단의 조직화정도가 약할 경우 정책집행이 용이하다.

해설 : 희생집단과 수혜집단 모두 조직화 정도가 약할 경우 집행이 곤란하다. 답 : ②

* 정책대상집단의 특성(규모의 조직력)과 집행의 용이성

구 분	규모 및 조직화 정도	
	강	약
수혜집단 > 희생집단	집행용이	집행용이
수혜집단 = 희생집단	집행곤란	집행용이
수혜집단 < 희생집단	집행곤란	집행용이

5.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를 기획하기 위하여 평가를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 ②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실행가능하고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시키도록 도와준다.
- ③ 집행에 있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는 정책집행 및 활동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도움을 준다.
- ④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후에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고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impact)을 추정하는 판단활동이다.

해설 : (복수정답) 본 문제는 새행정학(2009 275페이지)에서 일부 관점을 발췌한 문제로서 지배적 관점과는 다르므로 복수정답임을 천명한다. ① 착수직전분석은 프로그램 개시를 결정하기 직전에 프로그램의 수요, 개념의 적합성, 운영적 측면에서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작업으로서 사전분석이라고도 한다. ①은 평가성사정에 대한 내용이다. ④ 인과경로를 검증·확인하는 것은 총괄평가가 아니라 협의의 과정평가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473페이지) 답 : ①, ④

<1번이 답인 이유>

1. 문제의 제기

1) 출제자는 새행정학에 인용되어 있는 착수직전분석을 내용으로 출제를 한 바, 새행정학에서는 착수직전분석을 본격적인 평가를 하기 전의 평가기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 견해와 다르므로 이의를 제기한다.

2) 새행정학(275페이지)의 내용 : 정책평가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직전에 조망적 차원에서 평가를 기획하는 착수직전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성사정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 및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사정하고 평가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해 합의하며 실행가능하고 효율적인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예비적인 평가기획활동을 의미한다.

3) 그러나 착수직전분석은 평가성사정과 분리하여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사전분석이며 평가성사정은 평가자체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착수직전분석에 대한 개념은 국내문헌에서는 노화준교수의 책(정책학원론, 정책평가론)에 기술되어 있다.

2. 근거 학설

1) 노화준교수의 정책학원론

① 착수직전분석(노화준 정책학원론 459페이지) : 착수직전분석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시를 결정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평가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과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조망적인 평가이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문서, 기록 등 현존자료와 그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발견하였던 사실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수요, 개념의 적합성, 운영적 측면의 실행가능성 등을 재확인하거나 추정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들은 프로그램계획을 다시 정교하게 수정하거나 적절한 집행수준을 결정하거나 좀 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자체를 개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② 평가성사정(노화준 정책학원론 460페이지) : 평가성사정은 이후의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로서...(중략)...일종의 예비평가라고도 할 수 있다. 예비평가적 성격을 띠는 평가성사정이 등장하고 증가하는 사실은 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데 소용되는 비용이 그러한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더 크지는 않은가 하는데 대한 관심의 증가와 프로그램의 성격이 공식적인 평가노력을 증진시킬 것인지 또는 방해하는지의 여부를 식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노화준교수 정책평가론(2008. 37페이지)

① 착수직전분석 :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의 접근방법은 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착수하기 직전에 수행되는 선행적 평가작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과 유사하며 전반적으로 볼 때 조망적인 평가이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문서, 기록 등 현존하는 자료와 아울러 그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발견하였던 사실들을 토대로 평가팀 리더는 착수직전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 리스크와 편익의 사정(assessment)
-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 보고에 대한 요구사항
- 전체로서의 조직의 우선순위 등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들은 프로그램 집행 계획을 다시 정교하게 수정하거나 적절한 집행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 준다.

② 평가성 사정 : 평가성 사정은 여러 가지 가능한 평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수요를 사정하고, 평가의 실행가능성을 사정하며, 실행가능하고 적절하며 유용한 평가설계를 선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평가의 공급과 수요를 합치(match)시키도록 도와주는 시장연구(market research)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③ 미국 정책평가학회의 분류(노화준 정책평가론 37페이지, 주식) : 미국의 정책평가학회(Evaluation Research Society)에 의하여 개발된 표준에서는 모든 분야의 정책평가실무를 망라해서 모두 여섯가지 유형의 일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정책평가의 접근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들 여섯가지 유형의 정책평가에는 착수직전분석(front-end-analysis), 평가성사정(evaluation assessment),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 효율성 또는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 프

로그래밍과 문제의 모니터링(monitoring) 및 메타평가(meta-evaluation)등이 포함되고 있다.

3) **정정길 정책학원론(770페이지)** : 평가성사정은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중략)..그러므로 일종의 예비평가이다.

4) **정정길성규탁이장이윤식 공저 정책평가(44페이지)** :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는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평가의 소망성(desirability)과 가능성(feasibility)을 검토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평가성 검토는 어떠한 사업(program)또는 사업의 어떠한 부분(parts)을 평가하여야 유용한(useful)평가가 될 것이라는 결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사업의 개략적 검토(screening)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예비평가(preevaluation)이다.

3. 유사 기출문제

<문제1>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3 입법고시]

- ① 정책평가는 형성적 평가와 총괄적 평가로 나눌 수 있다.
- ② **사전분석(Front End Analysis)은 사전적 총괄적 평가이다.**
- ③ **평가성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은 사전적 형성적 평가이다.**
- ④ 영향평가(Impact Analysis)는 사후적 총괄적 평가이다.
- ⑤ 사업감시(Program Monitoring)은 사후적 형성적 평가이다.

정답. ⑤

<문제2> 평가성사정(Evaluability Assessment)에 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것은? [2002 입법고시]

- ① 정책의 운용과 그 결과를 밝히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정보의 수집 및 관리활동을 말한다.
- ② **정책에 대한 전면적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평가목적 달성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 유용성 등을 조사하는 일종의 예비평가를 말한다.**
- ③ 결과평가 혹은 총괄평가 라고도 한다.
- ④ 정책이 집행된 후 당초에 의도하였던 정책효과가 발생하였는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 ⑤ 사회에 미친 영향을 추정, 확인하는 사실판단적 활동과 부수적 효과 내지 부작용 등을 포함한 평가를 말한다.

정답 : ②

4) **결론** : 위 기출문제에서 보듯이 사전분석(착수직전분석)은 사전적 총괄적 평가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예비검토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평가자체에 대한 예비평가인 평가성사정과 엄밀히 다른 개념임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위 학설들과 기출문제를 검토해 볼 때 이번 국가직 문제에서 1번지문은 분명 틀린 지문이다.

<4번이 답인 이유>

1. **협의를 과정평가(정정길 정책학원론 763페이지)** : 협의의 과정평가는 정책수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정책효과를 발생시켰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환원하면 정책효과를 결과로 하고 정책수단을 원인으로 하여 인과관계를 파악하되, 도중에 개입되는 매개변수도 확인함으로써 인과관계의 경로를 검증·확인하려는 것이다.

2. **총괄평가와 협의의 과정평가(정정길 정책학원론 764페이지)** : 총괄평가의 핵심이 되는 효과성평가에서는 이 정책이 과연 환원안정의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양자의 중간에 있는 중간목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협의의 과정평가는 정책활동(또는 수단)으로부터 목표에 이르는 도중에 개입되어 있는 중간목표를 포함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확인·검증하려는 것이다.

<최종 결론>

— 위 학자의 견해와 기출문제를 종합분석해볼 때 ①과 ④ 모두 틀린 지문이므로 복수정답이다.

이 있다.

- ② 내적타당성이란 처치와 결과 사이의 관찰된 관계로부터 도달하게 된 인과적 결론의 적합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 ③ 외적타당성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내적타당성을 확보한 정책평가가 다른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내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는 역사적 요소, 성숙효과, 측정요소, 측정도구변화, 통계적 회귀요소 등이 있다.
- ⑤ 외적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에는 실험 조작의 반응효과,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등이 있다.

해설 : ⑤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은 준실험에서 나타나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다르게 구성하므로 양 집단 구성원이 다르게 성숙하므로 내적 타당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563페이지) 답 : ⑤

48. 정책평가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외적 타당성은 조사연구의 결론을 다른 모집단, 상황 및 시점에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 ② 구성적 타당성은 연구설계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평가과정에서 제1종 및 제2종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 ③ 내적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에 관한 것이다.
- ④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추정된 원인과 추정된 결과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통계적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말한다.

해설 : 구성적 타당성은 처리, 결과, 모집단 및 상황들에 대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②는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이다. 답 : ②

49. 진실험적 방법과 준실험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진실험적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해 행하는 실험이다.
- ②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서로 동질적인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들을 이들 두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정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진실험 설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관찰 기간 동안에 동일한 시간과 관련된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 ④ 준실험적 방법에는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등이 있다.

해설 : 실험집단과 통제(비교)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내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대상들을 양 집단에 무작위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를 무작위배정에 의한 통제라고 한다. 답 : ②

50.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선발요소
- ② 역사요소

- ①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제
- ②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
- ③ 성과관리의 강화
- ④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설치
- ⑤ 국무총리실에 의한 상위 평가기능 강화

해설 :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이 기존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에서 대체입법되면서 중점적으로 강조된 사항은 자체평가를 근간으로 한 자체평가 역량의 강화, 각종 평가의 통합,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의 구축,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이다. 국무총리실에 의한 상위평가기능의 강화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제정이유에도 나와 있으며 국무총리실에 의한 상위평가는 이전부터 실시해오고 있었고 대체입법되면서 자체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평가를 강화했다고 볼 수 없다. 답 : ⑤

54. 다음 중 정책변동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 서울7급>

- ① 매몰비용
- ② 정부관료제의 변화
- ③ 위기와 재난
- ④ 참여집단의 역학관계 변화
- ⑤ 정책오류

해설 : 매몰비용(sunk cost)는 회수불가능한 비용으로서 매몰비용이 있게 되면 본전심리로 인하여 창의적·쇄신적 결정을 방해하므로 정책변동이 쉽지 않다. ④의 경우 참여집단중 특정집단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집단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변동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답 : ①

3편 기출문제

1. 조직에 관한 원리를 설명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계층제의 원리는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하계층 간에 지휘와 명령복종관계를 확립하여 구성원의 귀속감과 참여감을 증진시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② 전문화(분업)의 원리는 업무를 종류와 성질별로 구분하여 구성원에게 가급적 한 가지의 주된 업무를 분담시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흥미상실과 비인간화라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③ 조정의 원리는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기하도록 집단적 노력을 질서있게 배열하는 과정이며 전문화에 의한 할거주의, 비협조 등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 ④ 통솔범위의 원리는 1인의 상관 또는 감독자가 효과적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관한 원리로서 계층의 수가 많아지면 통솔범위가 축소된다.

해설 :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에 따라 수직적 계층을 설정한 것으로서 참여감과 귀속감을 감소시키게 되는 역기능을 지닌다.(2010 비타민행정학 607페이지) 답 : ①

2. 원리주의자가 주장하는 조직의 원리는 분화의 원리와 통합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는 바, 다음 중 분화의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008 서울7급>

- ① 부성화의 원리
- ② 동질화의 원리
- ③ 계층제의 원리
- ④ 참모조직의 원리
- ⑤ 분업의 원리

1번해설 :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강조한 조직의 원리들은 분업의 원리(나눈다)와 조정의 원리(묶는다)로 구분된다.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 계층을 설정하고 지위명령체계를 확립한 것으로서 조정의 원리에 해당된다. 답 : ③

(3) 조직원리의 구분

- ① 분업의 원리 : ㉠ 분업의 원리, ㉡ 부처편성의 원리, ㉢ 참모조직의 원리(계선과 참모를 구분하고 참모를 일반계서의 명령계통으로부터 분리), ㉣ 동질성의 원리(동질적 또는 연관된 업무들을 묶어 조직단위를 구성), ㉤ 기능명시의 원리(분화된 모든 기능을 명문으로 규정) 등
- ② 조정의 원리 : ㉦ 조정의 원리(분화된 활동을 통합), ㉧ 계층제의 원리(권한의 하향적 위임은 계층을 따라 이루어져야 함), ㉨ 명령통일의 원리(한 사람의 상관에게 명령을 받아야 함), ㉩ 명령계통의 원리(계층적 통로를 따라 명령이 전달되어야 함), ㉪ 통솔범위의 원리(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능력범위 내로 한정하여야 함), ㉫ 목표의 원리(조직 내 모든 활동은 목표에 기여해야 함), ㉬ 집권화의 원리(권한구조를 집권화하여 능률성을 높여야 함), ㉭ 권한과 책임의 상응의 원리(권한행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책임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재장치가 있어야 함)

3. Peter는 ‘관료제는 궁극적으로 무능화된다’ 는 내용의 피터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관료제의 궁극적 무능화를 유발하는 요인을 설명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2008 서울7급>

- ① 평생고용의 원리
- ② 정치적 중립
- ③ 연공주의
- ④ 폐쇄형 인사
- ⑤ 신분보장

해설 : Perter의 법칙은 승진을 계속 하다보면 감당할 수 없는 직위까지 승진하게 되고 그 직위의 요
청에 대해서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분보장 규정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됨
으로써 모든 계층이 무능력자로 채워진다는 것으로서 계층제의 부작용을 지적한 이론이다. 평생고용
의 원리, 연공주의, 폐쇄형인사, 신분보장은 신분보장과 관련된 것으로서 무능화를 초래하게 된다. 정
치적 중립은 정치적 간섭 배제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관여금지를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업관제 폐
해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관료제의 무능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답 : ②

10. 동기이론 중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연결된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기대이론 - 형평성이론
- ② 욕구계층이론 - X·Y이론
- ③ 자율규제이론 - 사회적 학습이론
- ④ 목표설정이론 - 동기·위생요인이론

해설 : 이 문제는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의 분류 문제이다. ①은 모두 과정이론, ②는 모두 내용이론,
③은 모두 과정이론이다. ④ 목표설정이론은 과정이론인 반면, 동기·위생요인이론은 내용이론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544페이지) 답 : ④

구분	초점	해당 이론
내용이론	욕구의 내용과 욕구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경제적 인간모형(과학적 관리론 : X이론과 관련) • 사회적 인간모형(인간관계론 : Y이론과 관련) • 자아실현적 인간모형(성장이론) : ㉠ Maslow의 욕구계층이론, ㉡ Alderfer의 ERG 이론, ㉢ McGregor의 X·Y이론, ㉣ 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 Herzberg의 동기-위생이론, ㉥ Likert의 관리체제론, ㉦ McClelland의 성취 동기이론, ㉧ Murray의 명시적 욕구이론 • 복잡인 모형 : 복잡인모형(Schein), 직무특성이론(Hackman) • X·Y이론의 수정 : Z이론(Lundsteht, Lawless, Ouchi)
과정이론	동기유발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이론 : ㉠ Vroom의 선호기대이론, ㉡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Georgopoulos의 통로·목표이론, ㉣ Atkinson의 기대모형 • Adams의 공정성이론 • Locke의 목표설정이론 • 학습이론(강화이론)

* 보충설명

1. 사회적 학습이론

1) 김병섭교수 : Skinner의 학습이론이 직접적인 강화요인에 의하여 학습을 한다고 함으로써 인지적 측면을 소홀히 한 반면, 사회적 학습이론은 인간이 관찰을 통하여 대리학습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론이다. 대리학습에서는 타인의 행태와 강화요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가 중요하므로 인지가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적 학습이론은 강화와 인지적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Bandura, 1988).

2) 오석홍교수 : 인간과 그의 행동 그리고 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이론으로서 조작적 조건화에 의한 학습과 인식론적 학습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외적 선행 자극이나 결과로써의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적 욕구·만족·기대 등도 함께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2. 자율규제이론 : 사람들은 자기의 행태가 초래한 결과를 스스로 관찰하고(자율관찰) 평가하며(자율평가) 또 이에 따른 반응(자율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론이다. 즉,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이것이 자기가 설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이론이다(Carver & Scheirer, 1981).

4. 다음에 제시된 동기부여이론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은? <2008 경기9급>

- ①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 ② 브룸의 기대이론
- ③ 로크의 목표설정이론
- ④ 매클리랜드의 성취동기이론

해설 : ④는 성취욕구를 연구한 내용이론이며 나머지는 동기가 유발되는 과정을 연구한 과정이론이다. 답 : ④

5. 다음에 제시된 동기 부여 이론 중 과정이론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2008 경북9급>

- ① ERG이론, 기대이론
- ② 형평성이론, 기대이론
- ③ 목표설정이론, 성취동기이론
- ④ X·Y이론, 목표설정이론

해설 : ERG이론(Alderfer), 성취동기이론(McClelland), X·Y이론(McGregor)은 내용이론인 반면 기대이론(Vroom), 형평성이론(Adams), 목표설정이론(Locke)은 과정이론이다. 답 : ②

6. 다음 동기부여이론 내용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9급>

- ① Theory X는 복종에 대한 통제를 감소하는 전통적인 관리접근법이다.
- ② Maslow는 낮은 순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상위순위의 욕구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 ③ Herzberg의 동기요인은 책임감, 정책과 행정, 업무조건, 인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Alderfer는 Maslow의 5단계 욕구범위를 3가지로 수정하여 요구좌절에 따른 후진적·하향적 퇴행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dams는 형평성의 비교과정을 투입에 대한 만족의 비율로 설명하고 있다.

해설 : ③에서 책임감과 인정은 동기요인(만족을 주는 요인)에 해당되지만, 정책과 행정, 업무조건은 위생요인(불만족을 주는 요인)에 해당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548페이지) 답 : ③

* Herzberg의 동기요인과 위생요인(2009 비타민행정학 548페이지)

- ① 매슬로우는 하위욕구가 충족될 때 상위욕구가 순차적으로 유발된다고 하였다.
- ② 허즈버그는 동기요인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아지리스는 조직목표와 개인목표가 일치하는 조직이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였다.
- ④ 동기이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엘더퍼의 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하고 브룸의 기대이론은 과정이론에 속한다.

해설 : 허즈버그(Herzberg)에 의하면 동기요인은 만족을 주는 요인이고 위생요인이 불만을 주는 요인
이므로 불만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은 위생요인이다. (2009 548페이지) 답 : ②

10. 직무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직무의 분업정도를 전문화라고 한다.
- ② 비숙련 직무일수록 수평적·수직적 전문화가 낮다.
- ③ 지나친 전문화의 문제점은 직무의 포괄성과 복합적 직무설계로 보완할 수 있다.
- ④ 전문화는 수평적 차원에서 직무의 범위를 결정한다.

해설 : 누구나 할 수 있는 비숙련직무는 수평적·수직적 전문화가 모두 높다. 답 : ②

* 전문화와 과제성격(2009 비타민행정학 538페이지)

구 분		수평적 전문화	
		높 음	낮 음
수직적 전문화	높 음	비숙련 직무(생산부서의 일)	일선 관리직무
	낮 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조직의 정책과 전략을 결정)

11. 조직의 집권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대부분의 조직에서 위기는 집권화를 초래하기 쉽다.
- ② 역사가 짧은 조직의 경우 집권화 되기 쉽다.
- ③ 결정사항의 중요도가 높을 경우 집권화 되기 쉽다.
- ④ 조직의 운영이 특정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집권화 되기 쉽다.
-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집권화 되기 쉽다.

해설 : ⑤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통제가 어려워지고 관리층의 업무확대로 인하여 권한위임과 이로 인한 분권화의 필요성이 증가하므로 분권화된다. (2010 비타민행정학 678페이지) 답 : ⑤

㉠ 집권화 촉진요인

- ㉠ 강력한 리더십 필요시 : 위기발생이나 경쟁격화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 집권화된다.
- ㉡ 조정이나 통일성 필요시 : 할거주의를 조정하거나 통일성을 강조할 경우 집권화된다.
- ㉢ 소규모 조직이나 신설조직 : 선례가 없어 최고결정자의 영향력이 크므로 집권화된다.
- ㉣ 교통통신의 발달 : 교통통신이 발달되면 광역행정이 이루어지므로 집권화된다.
- ㉤ 자원의 증대 : 의사결정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상향화를 초래하므로 집권화가 촉진된다.
- ㉥ 권위주의적 문화 : 권위주의적 문화, 권위주의적 권력욕 등도 집권화를 촉진시킨다.
- ㉦ 관심의 증대 : 특정 기능에 대한 조직 내외의 관심이 확대되면 의사결정이 집권화된다. |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직접 챙기겠다.” 고 하면 집권화
- ㉧ 규칙과 절차의 발달 :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가 증가하면 의사결정 기준과 절차가 통일되므로 집권화를 촉진한다.
- ㉨ 분업의 심화 : 사람의 전문화 또는 능력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분업의 심화, 기능분립적 구조설계 등의 경우 조정이나 통일성이 필요하게 되므로 집권화가 요구된다.

㉡ 분권화 촉진요인

- ㉠ 복잡성과 동태성 : 기술 및 환경변화의 복잡성과 동태성은 적응력을 요구하므로 분권화를 촉진한다.
- ㉡ 사회의 민주화 : 조직이 처해 있는 사회가 민주화되면 조직 내의 분권화를 촉진한다.
- ㉢ 내재적 동기유발 전략 :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자율 규제를 강조할 때 분권화된다.
- ㉣ 창의성 발휘의 요청 :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때는 분권화가 촉진된다.
- ㉤ 힘실어주기(empowerment)의 요청 : 권한위임은 분권화를 촉진하여 부하에게는 자율적 관리로 인한 성과극대화를 도모하게 하고, 상관은 전략적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 ㉥ 조직규모의 확대 : 조직규모의 확대로 상층부의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 분권화된다.
- ㉦ 전문화의 촉진 : 기술수준의 고도화와 인적 전문화 및 능력향상은 분권화를 촉진시킨다.
- ㉧ 신속한 서비스 : 고객에게 신속하고 상황적응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분권화가 촉진된다.

12. 조직구조의 설명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공식적 조직은 인위적인 형식적 절차와 제도화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 ② 분권화는 조직의 내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 ③ 집권화는 규모의 경제를 향상하고 간접비용을 줄일 수 있다.
- ④ 계선조직은 조직의 목표성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체이다.
- ⑤ 막료조직은 계선조직의 구성원들에게 특별한 충고와 협력을 제공하는 조직체이다.

해설 : 분권화는 의사결정권한이 하부로 위임되는 것으로서 관리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외부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지만, 중앙의 지휘감독이 약화되므로 조직의 내적 통제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내적 통제력은 집권화를 통하여 가능해진다. 집권화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게 하고 할거주의를 조정하며 통일성을 이루게 해주기 때문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596~597페이지) 답 : ②

7. 조직기술을 과제다양성과 분석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일상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낮고 분석가능성이 높아 표준화 가능성이 크다.
- ② 비밀상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 높고 성공적인 방법을 발견하는 탐색절차가 복잡하여 통제·규격화된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 ③ 장인기술은 발생하는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아 분권화된 의사결정구조가 필요하다.
- ④ 공학기술은 과제다양성이 높지만 분석가능성도 높아 일반적 탐색과정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해설 : 비밀상적 기술(ex. 배아줄기세포연구, 우주항공 등)은 과업의 변화성(다양성)이 높고 문제의 분석가능성

이 낮은 기술로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모두 낮은 유기적 구조에서 적합하다. (2009 비타민행정학 599페이지) 답 : ②

13. C. Perrow는 조직의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7급>

- ① 과제의 다양성이란 과제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외적 사건의 빈도를 말한다.
- ② 일상적 기술의 경우 의사결정이 집권화되며 계획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 ③ 비일상적 기술의 경우 의사결정이 분권화되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 ④ 장인적 기술의 경우 과제의 다양성은 높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은 낮아 문제 해결이 어렵다.
- ⑤ 공학적 기술의 경우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모두 높아 직무수행이 복잡하다.

해설 : 장인적 기술(ex. 도예, 연주, 공예산업)은 과제의 다양성이 낮고(과업이 단순) 문제의 분석가능성도 낮다(해결이 곤란) (2010 비타민행정학 681페이지) 답 : ④

* Perrow의 기술유형론

구 분		과업의 변화성 또는 과제의 다양성(예외발생 빈도)	
		낮 음 (단순성)	높 음 (다양성·복잡성)
문제의 분석가능 성	낮 음 (해결곤 란)	iii) 기예적 기술(craft) • 과업 변화성, 문제 분석가능성 모두 낮음. • 정보불확실성 낮고 정보보호성 높음. • 대체로 유기적 • 지혜, 직관, 경험 등 무형적 요소에 의존 • 소량의 풍성한 정보 • 하이터치(high-touch) : 개인적 관찰, 면접회의 등 ☞ 도예, 연주, 공예산업 등	iv)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 과업 변화성 높고 문제분석가능성 낮음. • 정보불확실성과 정보보호성 모두 높음. • 유기적 구조(낮은 공식화, 높은 분권화) • 다량의 풍성한 정보 • 하이테크 및 하이터치 ☞ 기획, 우주항공 등
	높 음 (해결용 이)	i) 일상적 기술(routine) • 과업 변화성 낮고 문제 분석가능성 높음. • 정보불확실성과 정보보호성 모두 낮음. • 기계적 구조(높은 공식화, 높은 집권화) • 표준화된 통제와 정해진 규정·절차 • 소량의 계량적 정보 • 보고서, 규정집, 계획표, 거래처리 시스템 등 ☞ 민원창구업무, 대량생산기술 등	ii) 공학적 기술(engineering) • 과업 변화성, 문제 분석가능성 모두 높음. • 정보불확실성 높고 정보보호성 낮음. • 대체로 기계적 • 다량의 계량적 정보 • 하이테크(high-tech) : 데이터베이스, 경영정보시스템(MIS), 의사결정 지원시스템(DSS) 등 ☞ 회계, 변론, 주문생산기술 등

14. 조직구조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사업구조(divisional structure)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간의 조정가능성은 증진되지만, 부서내 조정은 어려워진다.
- ② 네트워크구조(network structure) 내의 개인들은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의 확장파 확충에 따라 직무동기가 유발되는 장점이 있다.

- ③ 기능구조(functional structure)에서는 기능적 통합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고할 수 있다.
- ④ 매트릭스구조(matrix structure)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을 부서 간에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해설 : ① 사업구조는 산출물에 기반을 둔 사업부서화 방식으로서 생산에 필요한 기능들이 사업부내에 위치한 자기완결적 구조이다. 따라서 부서내 기능간 조정은 증진되지만 부서간 조정은 더욱 어려워진다(2009 비타민행정학 603). 답 : ①

15. 조직의 구조가 과업, 기능, 지리가 아닌 핵심과정에 기초하고 있어서, 핵심과정에 대한 책임을 각 과정조정자가 지게 되는 조직구조는? <2009 국회8급>

- ① 네트워크 구조 ② 수평구조
- ③ 기능구조 ④ 사업구조 ⑤ 매트릭스 구조

해설 :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대단히 유기적인 조직구조로서 팀(team) 조직을 의미한다. 팀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조직단위이다. 과정 중심이며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과정조정자가 진다. (2010 비타민행정학 687페이지) 답 : ②

㉔ 수평구조의 특성

- ㉔ ① 기존의 과업·기능 중심에서 핵심과정 중심이다.
- ㉔ ② 기본 구성단위는 자율팀으로서 다른 조직구조와 달리 융통성 있는 운영이 허용된다.
- ㉔ ③ 핵심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각 과정 조정자가 진다.
- ㉔ ④ 팀 구성원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 ㉔ ⑤ 조직효과는 핵심과정별 최종성과지표, 고객만족도, 구성원만족도, 재정기여도 등에 의하여 평가받는다.

16. 조직구조의 모형 중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방식은? <2009 서울9급>

- ① 기능구조 ② 수평구조
- ③ 네트워크구조 ④ 사업구조 ⑤ 매트릭스구조

해설 : 네트워크구조는 전략, 계획, 통제, 조정과 같은 핵심기능만을 수행하고 다른 부수적 기능을 다른 조직에게 위탁(outsourcing)하는 형태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688페이지) 답 : ③

17.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9 국가7급>

- ① 수평적, 공개적 의사전달이 강조된다.
- ② 고도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가진 유기적 구조를 가진다.
- ③ 외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리인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
- ④ 의사결정체계는 분권적이며 동시에 집권적이다.

해설 : 네트워크구조는 조직의 자체기능은 전략·계획·통제 등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부수기능들은 외부기관들과의 계약관계(아웃소싱)를 통하여 수행하는 구조로서 계약관계에 있는 외부기관을 직접 통제하기 곤란하므로 주인-대리인문제가 발생하고 조정 및 감시 비용이 증가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689페이지) 답 : ③

18. 네트워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8 경남9급>

ㄹ. 조직은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ㄹ.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이나 형평성도 적절히 고려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ㄹ

해설 : 거래비용경제학은 주인대리인이론과 함께 조직경제학(제도를 연구한 경제학), 신제도론적 경제학으로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성의 관건이며 시장보다는 계서적(階序的) 조직이 거래비용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로서 선택된 것으로 본다. 즉, 거래비용이 클 경우 거래비용을 발생케 하는 외부요소들을 조직 내로 통합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따라서 거래비용이론은 거래의 비용을 줄이고 거래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처방한다. 즉,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거래를 조직 안으로 끌어들이 것인지 또는 외부 공급자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기준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거래비용이론의 중요한 연과과제이다. ㄷ의 경우 거래비용이론 자체보다는 시사점에 해당되는 지문으로서 민영화, 민간위탁, 외부계약 등이 조직내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거래비용을 낮춘다면 채택된다고 보므로 맞는 지문이다. ㄹ 거래비용이론은 조직을 효율적인 장치로 선택된 것으로 보지만, 조직이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는 보지 않고 조직내부화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비능률적일 때는 시장거래가 유리할 수 있다고 보므로 틀린 지문이다. ㄹ 거래비용이론은 제도를 연구한 경제학으로서 거래의 효율성을 관건으로 조직과 환경을 다룬 이론이므로 민주성이나 형평성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0 비타민행정학 642페이지) 답 : ①

22. 참모의 순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조직의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한다.
 ②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장치가 된다.
 ③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대시켜 준다.
 ④ 합리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해설 : 참모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조정과 지원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따라서 조직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부여하고 합리적·창의적·쇄신적 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계선의 통솔범위를 확장시켜 준다. 그러나 조직목표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계선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반면, 참모는 불명확하다(2009 비타민행정학 619). 답 : ②

23.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차관보, 실장, 국장은 보조기관이다.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③ 지방병무청, 경찰서, 보훈지청, 세무서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④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및 자문기관은 부속기관이다.

해설 : 차관보는 장관과 차관을 보좌하는 참모기관이다. 수업때 그림으로 설명하였고 차관-차관-차관보-실장-국장이 아님을 주의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④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등은 소속기관 중 부속기관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619, 621~622페이지) 답 : ①

24.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적인 조직형태인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 ① 직무의 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직무수행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된다.
 ③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④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해설 : 막스 베버(M. Weber)가 제한한 이념형관료제는 비개인성(impersonalism)을 특성으로 한다. 즉, 관료들은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개인적 특성이나 기호의 영향을 주거나 받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정의성(非情誼性)·물주관성(沒主觀性)은 권력자의 인격적 지배를 방지하며 인간의 감정과 편견을 배제하고 업무절차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의의 구현, 즉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가능하게 한다.(2009 비타민행정학 609페이지) 답 : ④

25. 베버(Max Weber)가 주장한 관료제의 기술적 우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관료제는 법적·합리적 권한에 의해 구조화된 조직이므로 보편성에 근거한 객관적 업무수행이 용이하다.
- ② 관료제를 합리적 대규모 조직체로 봄으로써 공식적·비공식적 집단의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형 관료제의 운용이 가능하다.
- ③ 관료제 내의 직위를 계서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조정을 용이하게 한다.
- ④ 전문적 관료들이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므로 업무가 신속·정확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수행의 비용이 적게 든다.

해설 : 고전적 조직이론인 베버(Max Weber)의 관료제론은 공식적 구조를 중심으로 하향식 관리방식을 통하여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추구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기술적 우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비공식적 집단과 같은 비공식적 요인을 소홀히 하였으며 참여형 관리방식을 지향하지 않았다. 비공식적 요인과 참여형 관리방식의 중요성은 신고전적 조직이론인 인간관계론에서 비롯되었다. (2009 비타민행정학 532, 609페이지) 답 : ②

26. 관료제(bureaucrac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합한 것은? <2009 서울7급>

- ① M.Weber에 의하면 관료제는 동양과 서양의 모든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 ② 엄격한 계층적 통제, 분업, 공사(公私)의 구분,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화폐에 의한 임금 지불 등의 특성을 지닌 조직 운영 방식이다.
- ③ 민간 기업에는 관료가 존재할 수 없다.
- ④ 대단히 변화 수용적인 조직이다.
- ⑤ 주어진 임무를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

해설 : ②는 관료제의 특징을 정확히 나열한 지문으로서 맞다. ① 역사적으로 서양이 18C말 시민혁명을 통하여 19C 근대국가를 먼저 이룩하면서 우월한 국력을 가지고 동양을 식민지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대국가 성립과 발달에 기여한 것이 근대관료제이며 이를 연구한 것이 Weber가 제시한 이념형 관료제(1911)이다. 동양의 경우 절대관료제에 머물렀기 때문에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를 적용하기 곤란하다. 동양의 절대관료제는 자의적 권한행사, 관직의 사유화, 인격적 지배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반면 Weber의 이념형 관료제는 합법적·합리적 지배, 비사민주의, 능력주의를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료제라 함은 합법적·합리적 관료제를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관료제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이지만, 서양과 동양의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유사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③은 다소 자의적인 지문이다. 보통 관료라 함은 직업적 관리(官吏) 또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고급공무원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출제교수는 행정과 경영 모두 관료제의 특징을 보유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관료를 관료제의 구성원으로 출제한 듯하다. ④ 관료제는 안정지향적 구조상 보수성을 띠며 변화에 저항적이다. ⑤관료제는 급변하는 환경에는 적응력이 떨어지므로 모든 상황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2010 비타민행정학 690~692페이지) 답 : ②

27. '이음매 없는 행정서비스(seamless ser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린덴(Linden)의 '이음매 없는 조직'과의 관련성이 높다.
- ② 전통적 조직에 비하여 조직내 역할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지 않다.
- ③ BSC(Balanced Score Card)를 비롯한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방식과는 지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④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은 시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해설 : 이음매없는(단절없는, seamless) 행정은 유기적 네트워크를 이루고 시민에게 one-stop service를 해주는 것으로서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는 연성정부의 모습이며 성과와 고객만족이 평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신공공관리적 성과관리방식과 관계가 깊다. 수업때 그림과 경찰서 문제를 예를 들며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615페이지) 답 : ③

28.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면? <2009 지방수탁7급>

- ㄱ. 정부기능의 재검토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을 재정비하였다.
- ㄴ.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확립하였다.
- ㄷ. 기능별 편제를 영역별 편제로 전환하였다.
- ㄹ.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줄이고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 ㅁ. 민간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과 갈등조율기능을 축소하였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해설 : ㄱ. 이명박정부는 기존 지방분권특별법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2008. 2)하면서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자치사무 및 국가사무로의 이분화 규정을 둠으로써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기능의 재정비를 도모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2008. 2)하여 정부조직개편을 한 바, ㄴ. 기존 부총리제를 폐지하고 부처중심의 국정운영체제를 확립하고(위원회 축소) ㄹ. 18부 4처를 15부 2처로 줄이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특임장관을 신설하였다. ㄷ. 기능별 편제를 영역별 편제로 전환하지 않았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ㅁ. 기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으로써 국무총리의 보좌기능(기획·조정)과 사회갈등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714~719페이지) 답 : ②

29.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
-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 ③ 한국전력공사

- ④ 인천국제공항공사
- ⑤ 감사위원회 설치는 임의사항

해설 : 시장형공기업은 전기, 가스, 공항, 항만 4가지 테마의 6개 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으로서 자산규모가 2조원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85% 이상이다. 준정부기관은 감사를 두지만 시장형공기업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준시장형공기업은 임의사항이다.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지만 시장형공기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728페이지) 답 : ⑤

30. 공기업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국가안보기능
- ② 재정적 수요억제기능
- ③ 독과점 억제기능
- ④ 낙후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기능

해설 : 공기업은 대공황기 때 유효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되거나(ex. TVA),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운영되었다. ③ 사업의 성격상 독점성이 강하여 민간의 독과점화(ex. 미국 민영 대륙횡단철도)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633~634페이지) 답 : ②

31. 다음 중 공기업의 설치·운영의 근거와 거리가 먼 것은? <2008 경남9급>

- ① 시장실패의 시정
- ② 신자유주의 경제원리의 도입
- ③ 사회주의적 경제원리 도입
- ④ 경제적 수혜구조 조정

해설 : 공기업은 시장실패 치유, 경기순환에 대응, 공공수요의 충족, 사회적 이데올로기(서구의 경우 국유화조치), 후진국의 국가발전역할 수행 등이 설치운영의 근거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원리를 도입한다면 오히려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633~634페이지) 답 : ②

32.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 7급>

-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②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 ④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해설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통합관리한다. 수업때 조직론과 재무행정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650페이지) 답 :

③

***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2008 비타민행정학 765페이지)**

- ㉠ 특별회계의 설치
 - ㉡ 기업형 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를 둔다.
 - ㉢ 행정형 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일반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계정의 구분 및 운용·관리 : 특별회계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하며 계정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운용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관리한다.

33.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8 군무원9급>

- ① 1990년대 영국 Nest Steps Program에서 처음 추진되었다.
- ② 공기업보다 책임운영기관이 영리(이윤) 추구를 더 중시한다.
- ③ 신공공관리론의 조직원리에 따라 등장한 모형이다.
- ④ 기관장은 공개모집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 책임운영기관은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중시되는 기관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643페이지) 답 : ②

8. 조직 내 의사전달과 의사결정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조직 내 의사전달에는 공식적·비공식적 전달유형이 있다.
- ② 대각선적 의사전달은 공식업무를 촉진하거나 개인적·사회적 욕구충족을 위해 나타난다.
- ③ 의사전달의 과정은 발신자, 코드화, 발송, 통로, 수신자, 해독, 환류로 이루어진다.
- ④ 의사전달 과정에서 환류의 차단은 의사전달의 신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해설 : 의사전달은 조직 내 복수의 행위주체가 정보를 교환해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의사전달의 환류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의사전달은 신속해지지만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09 비타민행정학 685페이지) 답 : ④

34.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9 서울7급>

- 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 ② 공식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 ③ 관리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④ 많은 조직에서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된다.
- ⑤ 공식적 권위를 유지,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해설 : 포도덩굴형 커뮤니케이션은 비공식적 의사전달으로서 상사의 권위를 손상시킨다. 공식적 의사전달이 상사의 권위를 유지,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775페이지) 답 : ⑤

35.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지위부조화(status incongruence)는 행동주체 간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하여 갈등을 감소시킨다.
- ② 과업 상호의존성(mutual task dependence)은 반드시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

- ③ 1970년대 중반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호주의적 견해는 갈등을 긍정적인 갈등과 부정적인 갈등으로 분류하고, 긍정적인 갈등은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계층제는 조직 내 수평적으로 발생한 갈등 해결에 유용하지만 명령과 강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 ⑤ 회피(avoiding)는 갈등 당사자들의 차이점을 감추고 유사성과 공동의 이익을 내세워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이다.

해설 : ③ 상호작용적 관점(1970년대~현재)은 관리적 갈등관으로서 갈등수준이 너무 낮으면 환경에의 적응력 저하, 독재와 획일주의, 무사안일, 의욕상실, 침체 등의 집단행동을 보이므로 조직의 성과가 저하된다. 따라서 적절한 갈등수준을 유지하는 최적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① 지위부조화는 구성원간 지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서 행동주체 간 교호작용을 예측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야기한다. 조직 내 지위가 수시로 변동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동료가 상관이 되거나 고참이 능력이나 기술이 앞선 후임자에게 지시를 받는 등의 경우에 갈등이 야기된다. ② 과업의 상호의존성은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지만, 반드시 갈등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상호의존관계가 모순적일 때는 갈등이 야기되지만 긍정적일 때는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계층제는 부서할거주의 등 수평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권위적으로 해결하는데 유용하며 지휘명령계통에 따라 명령과 강제가 수반된다. ⑤는 협동에 대한 내용이다. 회피는 자신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 무관심한 전략이다.(2010 비타민행정학 779페이지) 답 :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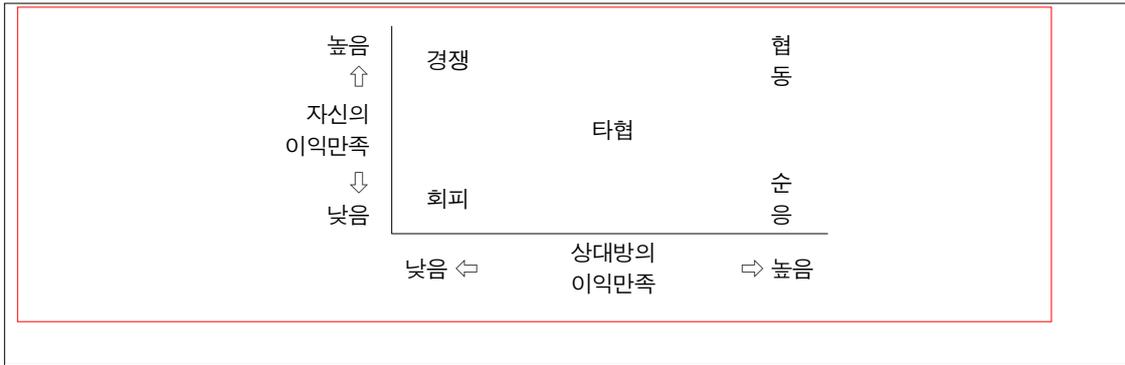
9. 다음은 토머스(Thomas)가 제시한 대인적 갈등관리방안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ㄱ. 상대방의 이익을 희생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 ㄴ. 자신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 모두에 무관심한 경우이다.
- ㄷ. 자신과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 ㄹ.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경우이다.

	ㄱ	ㄴ	ㄷ	ㄹ
① 강제		회피	타협	포기
② 경쟁		회피	타협	순응
③ 위협		순응	타협	양보
④ 경쟁		회피	순응	양보

해설 : Thomas는 자신의 이익만족도와 상대방의 이익만족도를 기준으로 5가지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ㄱ.은 경쟁전략, ㄴ.은 회피전략, ㄷ.은 타협전략, ㄹ.순응전략에 각각 해당된다. 포기는 Thomas의 2차원 갈등해결모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9 비타민행정학 689페이지) 답 : ②

- * Thomas의 2차원 갈등해결모형(1976)
 - ㉠ 의미 : 토마스(K. Thomas)는 자신의 이익만족도와 상대방의 이익만족도를 기준으로 5가지 갈등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 갈등관리방안
 - i) 회피 :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모두 무관심한 갈등전략
 - ii) 경쟁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방의 이익은 희생시키는 갈등전략
 - iii) 순응 : 자신의 이익은 희생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갈등전략
 - iv) 협동 : 자신과 상대방 이익 모두 만족시키는 갈등전략
 - v) 타협 : 자신과 상대방 이익의 중간 정도를 만족시키는 갈등전략
- * Thomas의 2차원 갈등해결모형



36. 갈등관리에 관한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갈등은 조직의 현상유지적 균형을 교란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소전략을 강구해야만 한다.
- ② 회피는 갈등행동의 억압 등에 의하여 단기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③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도달하게 하는 방법이 타협이다.
- ④ 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하여 갈등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문제해결이다.
- ⑤ 업무의 상호의존성이나 업무수행책임의 모호성도 갈등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해설 : ①은 갈등을 역기능적 존재라 인식했던 전통적 관점이며 현대적 관점은 관리적 갈등관으로서 적절한 갈등수준을 유지하는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갈등관리란 역기능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며 억제하는 반면, 순기능적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조장하는 것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686페이지) 답 : ①

37. 리더십 이론과 그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2008 국가7급>

- ① 특성이론 - 리더의 개인적 자질을 강조
- ② 행태이론 - 리더 행동의 상대적 차별성 강조
- ③ 거래이론 - 리더와 부하 간의 사회적 교환관계를 강조
- ④ 변혁이론 - 부하에 대한 지시와 지원을 강조

해설 : ① 특성이론(특성론적 접근)은 리더의 자질과 특성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맞는 지문이다. ② 행태이론(행태론적 접근)은 리더가 부하에게 대하는 리더십행태(권위형과 민주형, 직무중심과 직원중심 등)에 따라서 부서의 효과성이 달라진다고 전제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거래이론(거래적 리더십)은 합리적·타산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교환함으로써 추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으로서 맞는 지문이다. ④ 변혁이론은 변혁적 리더십이론인데, 부하에 대한 지시를 강조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하우스(House)는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부하의 특성과 근무환경의 특성에 따라 지시적 리더십, 지원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성취지향적 리더십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2009 비타민행정학 698페이지) 답 : ④

38. 지식정보 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D.Tapscott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 7급>

- ① 정보화 사회의 리더십은 특정 상관이 아닌 여러 가지 원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체득하여야 한다.
- ② 정보화 사회의 조직구성원은 각자가 복잡한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 조직구성원 전체가 끊임없는 학습의지를 지녀야 한다.
- ③ 정보화 사회의 조직은 상호연계적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 다양한 개인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 ④ 정보화 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중간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 ⑤ 조직구성원 누구나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네트워크화된 지능의 시대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획기적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

해설 : 탭스코트(Tapscott)에 의하면 정보화사회에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이 필수적이다. 상호연계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이 집합적으로 비전을 창출하고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리더십으로서 상호연계적 리더십이 잘 발휘하도록 "지원과 관심"을 가지는 것은 중간관리자가 아니라, 최고관리자의 몫이다. 한편 middle-up-down 모형(이쿠지로 노나카)에 의하면 중간관리자는 전략적 거시정보와 실무적 미시정보를 연결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2010 비타민행정학 808페이지) 답 : ④

*** 탭스코트(D. Tapscott)의 상호연계적 리더십**

1. 의의 : 정보화사회는 단순한 지식 또는 정보사회의 차원을 넘어선 네트워크화된 지능시대이므로 리더나 리더십 또한 상호연계성을 지녀야 한다. 한 명의 총명한 최고관리자만이 리더가 아니라, 파급효과를 지닌 비전과 집합적 행동력을 가진 인간지능의 결합자체가 리더이다.

2. 상호연계적 리더십의 내용

- ① 다양한 원천의 연계와 개인책임 : 정보화사회 처럼 예측불가능한 시대의 리더십은 특정 상관이 아닌, 여러 가지 원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체득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자 기회이다.
- ② 공유된 비전과 학습의지 : 조직 구성원 각자가 복잡한 정보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명백하고 공유된 비전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 전체가 끊임없는 학습의지를 지녀야 한다.
- ③ 개인역량의 결합 : 조직은 상호연계적 리더십의 발휘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들의 역량이 효과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창조적 사고가 충만해지고 바람직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 ④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 : 상호연계적 리더십을 형성하고 발휘하는 데 최고관리자의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다. 최고관리자의 변화에 대한 의지 및 변화를 위한 제스처가 미치는 영향력은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또는 급격한 변화에 따른 전환 및 적응에 추진력을 제공한다.
- ⑤ 누구나 리더로서의 기능수행 : 네트워크화된 지능의 시대에서는 조직구성원 누구나 리더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럴 때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구성원들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자신과 조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등 획기적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

9.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급속히 진행된 정보화가 조직구조 및 조직행태에 미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은 수평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나 가상조직의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다.
- ② 린덴(R.M.Linden)이 정의한 ‘이음매 없는 조직’의 출현이 확산된다.
- ③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의 협력적 행태가 저해된다.
- ④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조직구조의 신축성과 유연성을 보다 강조한다.

해설 : 지식정보사회에서는 네트워크(수평적 협력관계)가 강조되므로 협력적 행태가 강화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712페이지) 답 : ③

39. 전자정부의 미래 모습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모두 고르면? <2009 국가7급>

- ㄱ. Zero-Stop 서비스
- ㄴ. 전자정부 대표 포털
- ㄷ. 접근수단의 단일화
- ㄹ. 조직구조·프로세스 혁신
- ㅁ. 부처별·기관별 업무처리
- ㅂ. e - Governance 구현
- ㅅ. 정부중심의 전자정부
- ㅇ. 백오피스와 프론티오피스 간격 확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ㄹ, ㅂ
- ③ ㄴ, ㄹ, ㅂ, ㅅ
- ④ ㄴ, ㄹ, ㅂ, ㅇ

해설 : ㄱ. Zero-Stop 서비스(non-stop service)는 기관방문없이 1회 신청으로 민원을 전자적으로 완전히 처리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부의 주요 요소이다. ㄴ. 전자정부 대표포털(www.egov.go.kr)은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와 서비스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통합 사이트로서 전자정부의 얼굴이다. ㄷ. 접근수단은 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인터넷, PDA, 휴대폰 등으로 다양화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ㄹ. 전자정부는 조직구조·프로세스 혁신을 촉진시킨다. ㅁ. 부처별·기관별 업무처리로 해서 는 안 되며 통합된 업무처리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단절없는 행정) 틀린 지문이다. ㅂ. 전자정부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e-Governance(전자 거버넌스)를 구현한다. ㅅ. 정부중심의 전자정부가 아니라 시민중심의 전자정부이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ㅇ. 백오피스와 프론티오피스 간격 확대가 아니라 축소이다. 백오피스(back office)는 후방지원체제로서 내부행정업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프론티오피스(front office)는 실질적으로 고객과 만나는 전방지원체제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시스템이다. 양자의 간격은 좁혀져야 실질적인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815~828페이지) 답 : ②

40. 전자정부법에서 천명된 운영 원칙이 아닌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②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④ 행정정보안 준수의 원칙
- ⑤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해설 : ①②③⑤와 국민편익중심의 원칙,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원칙이 이에 해당된다. ④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0 비타민행정학 818~819페이지) 답 : ④

41. 지식정보사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09 지방수탁7급>

- ㄱ. 사회적 지식의 활용에 있어 사회적 학습보다 개인과 집단의 활동이 강조된다.
- ㄴ.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선호되고 정부는 기획, 조정, 통제, 감독 등 핵심적 기능으로

⑤ 정보사회의 역기능 (2009 비타민행정학 713페이지)

- ㉠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정보에 관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가 개인에 대한 감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정보오용에 따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 ㉡ 문화지체(cultural lag) : 정보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은 비약적으로 발달하는 반면, 인간의 사고와 규범은 이에 적응할 수 없게 되어 문화적 지체현상이 나타난다.
- ㉢ 비인간화 : 관리통제의 집중화로 근무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인간의 뇌처럼 정보를 병렬처리하는 제5세대 컴퓨터가 현실화되어 감에 따라 점점 인간 자신에 대한 신뢰성과 실존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 ㉣ 정보불평등과 정보격차(digital divide)
 - ㉤ 정보불평등의 개념 : 각종 정보기술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사회에서 중심적인 정보자원의 이용과 점유기회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성, 세대, 계층, 지역 간 불평등을 의미한다.
 - ㉥ 정보불평등의 악순환 : 더욱이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화 과정은 기존의 정보격차가 줄어들기 전에 다시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미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새로운 정보기술에 접근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44. 다음 중 지식관리의 효과가 아닌 것은? <2008 서울9급>

- ① 조직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
- ② 지식공유를 통한 지식가치의 확대 재생산
- ③ 지식 조직의 공동재산화 촉진
- ④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 촉진
- ⑤ 학습조직의 기반 구축

해설 : 지식관리란 정책목표달성과 행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창출, 축적, 공유, 학습,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으로서 조직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과정 또는 절차 재설계) 촉진은 무관하다. 리엔지니어링은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지, 지식관리의 직접적 효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724페이지) 답 : ④

* 기존 행정관리와 지식행정관리(2009 비타민행정학 724페이지)

구 분	관료제하의 기존 행정관리	지식정부하의 지식행정관리
조직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이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 공유	조직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파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재생산
지식 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공동재산화
지식 활용	정보, 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능력 향상
조직 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45.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되고 중단 없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정부이다.

- ② 개인의 관심사, 선호도 등에 따른 실시간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시민참여도가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투명한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가 가능해진다.
- ③ 행정 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는 고객지향성, 지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으로 요약된다.
- ④ 인터넷 기반 온라인 서비스의 강화에 초점을 맞춘 웹(web) 2.0 시대의 미래형 전자정부이다.

해설 : 유비쿼터스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서 휴대전화나 PDA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국민이 원하는 개인화, 지능화된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부로서 전자정부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존재방식이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 기술이 기반인 반면, 유비쿼터스정부는 무선과 모바일 네트워크, 센싱기술, 칩 기반기술이다. ④는 전자정부에 대한 내용이다. 웹(web : world wide web의 약자)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을 말한다. 웹2.0은 기존 웹1.0이 진화된 형태로서 전자정부에 해당되며 웹3.0이 유비쿼터스정부에 해당되는 웹기술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828페이지) 답 : ④

□ 전자정부(e-Government)와 유비쿼터스정부(u-Government)(김선경)

개념의 구성 요소	e-Government	u-Government(전자정부의 최종목표)
기술기반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 인터넷 기반	브로드밴드와 무선&모바일 네트워크, 센싱, 칩 기술기반
행정서비스	정부간, 정부와 시민·기업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여 신속·투명한 서비스를 제공	-지능적인 업무수행과 개개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세스, 기능 등의 back-office의 통합이 확대되고 front-office의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고객지향적으로 변화
행정지향	신속성, 투명성, 효율성, 민주성	실질적인 고객지향성, 지능성, 형평성, 실시간성
정보의 성격	종이로 된 자료·문서를 디지털화	공간속의 환경, 사물, 사람과 이들 간의 연계에 관한 상황인식정보
정보처리	문서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정보기관 및 정부와 민간이 공유하고 전자민원을 통하여 행정업무 처리	센서나 태그를 통해 수집된 상황인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공유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필요한 의사결정과 행동조치

* broad band : 하나의 전송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

□ 인터넷 패러다임의 변화(웹1.0 ⇨ 웹2.0 ⇨ 웹3.0)

1. 웹 : 웹(web : world wide web의 약자)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정보 공간
2. 웹3.0 시대는 다른 자원의 정보를 통합,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모든 서비스의 개인화 지능화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정부서비스 구현

구분	방향	내용
웹1.0 (1995~2000)	-일방향 정보 접근 -정부 중심	-정보를 제공하는 웹포털 구축, 이용자는 정보소비자
웹2.0 (2005~2010)	-쌍방향 정보 교환 -시민 중심	-정보 생산·공유·협동·참여가 가능, 이용자는 정보소비자·생산자·유통자
웹3.0 (2015~2020)	-지능적인 정보인식(인터넷의 지능화) -개인 중심 -u-Government	-인터넷을 더욱 지능화시키며 개인화에 맞출 뿐만 아니라, 기기 및 서비스 통합으로 경계가 소멸되는 유비쿼터스환경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이 가능,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검색·제공 가능(개인이 서비스의 중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멘틱 웹 기반의 지능

		형 웹(intelligent web) 서비스 * 시맨틱 웹(semantic web) : 인간의 두뇌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웹(사용자 맞춤형 검색 가능)
--	--	---

46.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행정정보공개는 행정비용과 업무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② 행정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 ④ 행정정보공개는 행정책임과 관련하여 정보의 조작 또는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설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개대상 정보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729~730). 답 : ③

(5) 비공개대상정보 - 2009 비타민행정학 729~730페이지

우리나라는 아래 ①~⑥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한정 비공개원칙은 아니며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⑤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⑥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⑧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정보공개에의 문제점 - 2009 비타민행정학 731페이지

- (1)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왜곡되거나 조작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2)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태가 견지될 수 있다.
- (3) 정보공개 수혜에 있어서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
- (4)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증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 (5) 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6) 행정비용의 증가와 정상적 업무의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

* 정보공개제로 인하여 부수업무 및 공개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므로 행정비용은 증가되나 통제를 용이하게 하므로 통제비용은 감소된다.

(2) 정보공개에의 필요성 - 2009 비타민행정학 727페이지

- ① 알 권리와 정보민주주의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는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정보공개제도는 정보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② 국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통제 : 정보공개제도에 의하여 국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관료에 의한 권력남

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신뢰가 확립될 수 있다.

- ③ 행정참여의 신장 : 정보공개는 국정참여의 대전제로서, “정보공개 없이는 참여 없다.” 는 말처럼 정보공개 없이 실질적인 국정참여는 이루어질 수 없다.

47.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주민투표는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 ③ 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설 : 주민투표는 자치단체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이와 별도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자치단체의 주요사항 결정, 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에 대의제를 대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주민들의 투표참여율이 높아야 주민투표제가 정착될 수 있으며 이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먼저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737~738페이지) 답 : ①

48.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주민소환의 방식은 해당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2007년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최초로 실시되었다.
- ④ 주민소환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지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해설 : ① 주민소환에 소환대상, 소환청구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주민소환법 및 주민소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한다. ③ 주민소환법 시행(2007. 5)이후 2007년 하반기에 경기도 하남시에서 광역화장장 건으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바 있으며 수업때 사례로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④ 비례대표는 선출직 의원이 아니므로 제외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740~741페이지) 답 : ①

49. 우리나라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8 경기9급>

- ① 주민이 승소해도 주민감사청구 관련 실비 등을 돌려받을 수 없다.
- ②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③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제는 아직 도입 되지 않았다.
- ④ 위법한 재무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 주민소송에서 주민이 승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절차의 진행 등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에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소송의 선행요건으로서 주민감사청구를 먼저 해야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민소송의 대상은 재무행정 분야에 한정되므로 주민감사청구 대상보다 좁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739페이지) 답 : ①

- ⑥ **꽃송이 조직** : 꽃송이처럼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팀이 프로젝트별로 서로 중첩되어 고객요구에 맞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는 조직형태로서 교차다기능조직이다. 이 조직에서는 팀워크가 중요하며 구성원은 여러 프로젝트를 오가며 업무를 보게 되므로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꽃봉오리의 가운데 기능은 그 조직의 핵심부서 또는 모든 연결망을 진두지휘하는 팀이 맡게 되며 각각의 꽃잎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른 곳에 붙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ex. 은행에서 프로젝트별로 예금, 대출, 외환, 신용정보 등 다기능 서비스를 제공>.
- ⑦ **홀로그램형 조직** : 홀로그램(hologram)은 여러 개의 레이저 광선이 만나 형성하는 삼차원 입체영상이다. 홀로그램형 조직은 홀로그램을 닮은 조직으로서 각 구성부분은 영상전체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홀로그램이 깨지면 그 어떤 구성부분이라도 전체영상을 재건해 낸다. 홀로그램형 조직에서는 모든 조직단위들이 하나의 전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급속히 변동하는 환경 하에서 활동의 신속성, 융통성, 통합성을 발휘할 수 있다.
- ⑧ **재즈밴드형 조직(zazz combos)** : 캄보(combo)는 3 ~ 8명으로 구성된 소편성의 기악그룹이다. 재즈밴드형 조직은 격동하는 환경 하에서 필요한 즉각적 대응성, 융통성, 적응성을 갖춘 조직으로서 리더십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의사전달은 수평적이다. 이조직은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며 구성원들은 새로운 진로의 모색에 있어서 공감대를 잘 형성한다.
- ⑨ **군살없는 조직(lean production)** : 일본의 도요다자동차에서 개발한 모형으로 단순화 및 낭비배제가 핵심요소이다. 특징은 짧은 생산순기, 제품모형의 빈번한 변경, 공급자들과의 긴밀한 관계, 문제예측과 체계적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작업팀,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적시공급 등이다.

52. 학습조직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기본단위는 통합 기능팀이며 구성원의 권한 강화를 강조한다.
- ② 부서간 경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
- ③ 선발된 조직구성원이 문제인지와 해결에 관여하는 실험조직이다.
- ④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트워크조직과 가상조직을 활용한다.

해설 : 학습조직은 정보지식사회의 대표적인 유기적 조직모형으로서, 조직 전체 차원에서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함께 배워 나가는 자기변혁적 조직을 의미한다. 지식의 창출·이전·공유 및 활용이 구성원들의 창조욕구와 주인의식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조직의 총체적인 경쟁역량이 증폭되며 구성원들의 강한 공동체의식과 연대 하에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열린 조직이다. 따라서 선발된 구성원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공동의 노력 하에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769~771페이지) 답 : ③

- ㉠ **대두배경 (2009 비타민행정학 770페이지)**
 - ㉠ **지식자원의 전략적 중요성** : 급변하는 정보지식사회에서 지식의 획득과 이로 인한 가치창출이 조직의 경쟁력 우위와 조직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조직 전체에 확산시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 ㉡ **전체 구성원의 참여** : 조직혁신은 모든 구성원이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있어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
 - ㉢ **경영혁신기법의 한계** : 벤치마킹, 리엔지니어링 등의 경영혁신기법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1회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학습조직에 초점이 모아지게 되었다.

53. 학습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 태도조사환류(survey feedback method) : 가장 오래된 OD기법으로서,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모든 계층의 개인과 집단에 환류시켜 그들이 환류된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개입기법이다.
- * 실험실 훈련(laboratory training) : 10~20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외부환경과 격리된 상황에서 실시하는 대표적인 조직발전기법이다. 참여자의 경험과 감성을 중시하므로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소규모의 훈련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소집단 훈련(T-Group, training group)이라고도 한다.
- * 관리망 훈련(managerial grid training) : Blake와 Mouton(1964)이 개발한 관리자대상기법으로서 관리망(managerial grid)을 기초로 하여 개인-집단-집단 간, 조직 전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세미나를 통하여 스스로의 관리방식을 평가하고 단합형의 관리방식을 배우게 하며 이를 작업집단 내 관계개선, 집단 간 관계개선, 조직 전체의 개선목표의 설정과 전략적 계획수립에 활용하게 한다.

56. MBO(목표관리)와 TQM(총체적 품질관리)의 내용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MBO는 인간의 자율능력을 믿는 자기실현적 인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 ② TQM의 시간관은 장기적이며, 통제유형은 예방적·사전적 통제이다.
- ③ MBO는 역할보호성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수준을 높인다.
- ④ TQM의 기본 구성요소는 목표설정, 참여, 환류이다.
- ⑤ MBO는 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운영절차가 번잡하다.

해설 : 목표설정, 참여, 환류를 기본요소로 하는 것은 MBO이다. 즉, MBO는 상하간 참여하에 목표를 협의설정하고 이를 사후적 관리(평가 및 환류)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TQM은 사전적 관리(예방적 통제)를 중시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778, 1263페이지) 답 : ④

- (1) MBO의 개념 - 2009 비타민행정학 778페이지
- ①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s)는 기존의 일방적·지시적인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의 상하구성원들이 공동참여하여 조직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한 후 성과를 측정·평가·환류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관리기법이다.
 - ② 구성원 간의 팀워크를 강조하고 또한 상하급자가 공동으로 목표달성의 책임을 지게하고 Y이론과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입각한 참여지향적 관리철학인 점이 특징이다.

* MBO와 TQM - 2009 비타민행정학 1266페이지

구분	MBO	TQM
시계(視界)	단기적·미시적	장기적·거시적
지향	대내적 관리지향	대외적 고객지향(고객만족도 중시)
초점	결과(수량적 목표의 달성도)	과정(행정서비스의 품질개선)
성격	관리전략	관리철학
관리의 중점	사후적 관리(평가 및 환류 중시)	사전적 관리(예방적 통제 중시)
계량화	중시	중시하지 않음
보상방법	개별적 보상	팀 보상 및 구성원 보상

57. 목표관리제(MBO)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개별 또는 팀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시적인 또는 비가시적인 성취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 ② 구체적인 목표는 대부분 사업 자체로 나타나며, 목표 달성이후에 얻어지는 기대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③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조직의 하부층과 상부층이 다같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업적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목표 성취를 위해 조직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입장에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활동한다.
- ④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교통과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목표관리제는 그 도로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진다.

해설 : ③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s)는 기존의 일방적·지시적 관리방식을 탈피하여, 조직의 상하구성원들이 공동참여하여 조직단위와 구성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에 따라 생산활동을 수행한 후 성과를 측정·평가·환류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와 조직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관리기법이다. 구성원 간의 팀워크를 강조하고 또한 상하급자가 공동으로 목표달성의 책임을 지게하고 Y이론과 자아실현적 인간관에 입각한 참여지향적 관리철학인 점이 특징이다. 단, 결과에 대한 구체적 검증과 확인을 중시하는 기법이므로 단기적·계량적·유형적 목표를 추구하며 장기적 무형적 목표를 소홀히 한다는 문제가 있어 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갖기 어렵고 비가시적인 성취여부를 보여주기 곤란하며 ② 목표달성 이후 기대효과까지 평가하기 곤란하며 ④ 궁극적인 목표인 주민의 교통편의성을 높이는 것까지 평가하기 곤란하다. (2009 비타민행정학 778~782페이지) 답 : ③

4편 기출문제

1. 인사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엽관제는 관료집단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 ② 영국의 실적주의는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 ③ 대표관료제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을 강조한다.
- ④ 펜들턴법과 4년임기법으로 미국의 실적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 ⑤ 계급제는 탄력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일반행정가 육성에 기여 할 수 있다.

해설 : 미국의 경우 1883년 펜들턴(Pendleton)법으로 실적제가 확립되었지만, 1820년에 제정된 공직 임기4년법(Four Years Law)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엽관제의 기반을 닦은 제도이다. ③ 대표관료제는 소외계층을 우대하는 인사제도로써 수직적 형평성(결과로서의 평등)을 제고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917페이지) 답 : ④

2. 공무원채용제도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므로 행정의 전문화에 도움이 된다.
- ② 펜들턴법(Pendleton Act)은 영국의 공무원체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실적제의 영향을 받았다.
- ③ 엽관제는 대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집단에 대한 정치적 사회화에 도움을 주었다.
- ④ 대표관료제는 정부관료제 내에 민주적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 ⑤ 실적제는 공직 취임의 기회균등이라는 민주적 요청을 충족시킨다.

해설 :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해서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는 인사제도로써 개방형인 직위분류제는 직업공무원에 기여하지 못하는 반면, 폐쇄형 실적제인 계급제가 직업공무원제에 기여한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은 맞지만, 공무원임용기준을 당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두지 않고 장기적 발전 가능성 내지 잠재력에 두므로 일반행정가 중심이며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804페이지) 답 : ①

3.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직업공무원제란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②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 ③ 엽관주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소멸되고 있다.
- ④ 우리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기본적으로 계급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설 :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전리품(spoils)처럼 획득하고 선거에서의 충성도에 따라 공직을 정당원들에게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정치적 인사제도로써 시민의 의사가 선거를 통하여 정부관료제에 투입되는 등 Jackson Democracy란 용어가 나올 정도로 민주적인 특성을 지닌다.(2010 비타민행정학 918페이지) 답 : ③

11. 공무원인사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ㄱ.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는 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조화될 수 없어서 양 제도의 혼합 운용이 어렵다.

비타민행정학 801페이지) 답 : ②

6. 실적주의의 발전이 인사행정에 초래한 현상과 관련이 없는 것은? <2008 경북9급>

- ① 분권화
- ② 소극화
- ③ 형식화
- ④ 집권화

해설 : 실적주의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는 소극적 성격을 띠고 중앙 인사기관의 설립과 이를 통한 인사행정의 집권화가 이루어 졌고 인사절차의 합법성에 주력하게 됨으로써 인사행정의 경직화와 형식화를 초래하였다. (2009 비타민행정학 801페이지) 답 : ①

7. 다음 중 1883년 미국에서 제정된 Pendleton법의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2009 서울7급>

ㄱ. 공무원의	중립성
ㄴ. Merit Pay System	
ㄷ. 공무원의 교육·훈련	의무
ㄹ. 인사위원회 설치	
ㅁ. 공개경쟁시험 실시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ㄴ, ㅁ
- ④ ㄱ, ㄷ, ㄹ
- ⑤ ㄱ, ㄹ, ㅁ

해설 : 엽관주의를 버리고 실적주의를 채택한 Pendleton법(1883)의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 설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채용, 제대군인에 대한 특혜인정, 공무원의 정치헌금 및 정치활동금지(정치적 중립성), 시보기간 설정 등이다. 이외에도 개방형인사제도(공직과 사기업의 교류인정)를 인정하였다. Merit Pay System(성과급)과 공무원의 교육·훈련 의무는 해당되지 않는다. (2010 비타민행정학 920페이지) 답 : ⑤

8.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된다.
-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해설 : 채용당시의 직무수행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전문행정을 중시하는 직위분류제이다.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과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일반행정을 중시하며 장기적 능력발전을 중시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804페이지) 답 : ②

(1) 직업공무원제의 성립요건(2009 비타미행정학 804페이지)

- ① 계급제 : 계급제는 사람 중심적 제도로서 특정한 직무가 폐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조직에서 퇴출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특성을 가진다(유민봉).
- ② 폐쇄형 충원 : 결원 발생시 내부승진이나 인사이동으로 채우고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을 생업으로 삼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③ 일반행정가 중심 : 공무원 임용기준을 당장의 직무수행능력에 두지 않고 장기적 발전가능성 내지 잠재력에 두는 것으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혼합직도 수행할 수 있으며 폭넓은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공직에 대한 매력을 높인다.
- ④ 신분보장 : 공직을 평생의 본업으로 삼아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의 안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직에 계속해서 남아 있을 유인을 제공한다.

9.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경북9급>

- ① 채용시험제도의 확립
- ② 재직자 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 ③ 학력 제한의 철폐
- ④ 보수수준의 적정화

해설 : 직업공무원제는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로써 학력, 경력의 엄격한 제한이 따르게 된다. (2009 비타미행정학 804페이지) 답 : ③

② 직업공무원제의 단점(2009 비타미행정학 804페이지)

- ㉠ 민주통제의 곤란 :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과 국민 간의 친화적 관계보다는, 공무원과 정부 간의 의존적·온정적 관계를 강화시킴으로써 무사안일 등 병리현상이 만연해지고 공무원에 대한 민주통제를 어렵게 한다. ⇨ 특권집단화
- ㉡ 환경에의 적응력 부족 :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상유지적·보수적 성향을 심어 줌으로써 동태적 환경에의 적응력을 약화시키고 개혁에 저항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 기회균등의 제약 : 학력·경력의 엄격한 제한 등 직업공무원제의 높은 담은 공직에의 기회균등을 제약시킴으로써 민주주의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 승진적체 : 직업공무원제하의 공무원은 계급 간 승진을 중시하기 때문에 승진지망의 과열화가 초래되어 승진적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 ㉤ 외부전문가의 임용 곤란 : 일반적으로 외부인사의 임용을 금지하는 폐쇄형을 채택하므로 특정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기가 곤란하다.
- ㉥ 행정의 전문화 저해 : 일반행정가 중심으로 하위직에서 상위직으로 승진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행정을 육성하기 어려워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를 저해한다.

10.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09 서울9급>

-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 ② 공무원 인력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 ③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 하며, 보수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⑤ 승진·진보·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해설 :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선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젊은 사람의 채용을 강조하고 모집시 연령제한을 둔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시하므로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의 채용을 중시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926페이지) 답 : ③

11.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모집방법의 다양화
- ② 인사의 분권화
- ③ 정년보장식 신분보장
- ④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 ⑤ 실적주의의 비융통성 보완

해설 :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만을 고집하지 않고 업과주의적 요소(정치적 임용), 개방형 확대, 특채 등을 신축성있게 도입하므로 신분보장의 약화를 초래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928, 1057페이지). 답 : ③

12.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3급 이상 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 ② 고위공무원단의 직위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 부처자율직위 등의 형태로 운영된다.
-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모두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에 의하여 구분된다.
-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도와 다른 제도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

해설 : 고위공무원단제는 공무원들의 경쟁력과 정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고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이다. ① 일반직뿐만 아니라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외무공무원만 해당)도 해당되며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고위직도 해당된다. ② 개방형직위 20% 이내, 공모직위 30% 이내, 부처자율인사 50% 이상으로 운영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이며 외부임용시 계약직도 가능하다. ④ 고위공무원단은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며 정년과 신분보장은 유지된다(2009 비타민행정학 809). 답 : ②

<고위공무원단 대상 및 신분관리> - 2008 비타민행정학 808, 809

- ① 대상 : 행정부 실국장 등 1,582여명(다른 헌법기관과 자치단체는 현행대로 1~3급이 유지)
 - ㉠ 행정부 :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일반직·별정직·계약직, 특정직(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만 한함, ex. 외무공무원)>
 - *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음
 - ㉡ 자치단체 : 국가고위직(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기획업무담당실장, 도의 농업기술원장)
 - ㉢ 지방교육행정기관 : 국가고위직<부교육감, 교육지원국장(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부산광역시 교육청)>

④ 신분관리

㉠ 실적제와 신분보장 : 실적주의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며 정년 및 신분보장제도도 존치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의 근간 유지

13. 고위공무원단체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각종 성과급과 장려급에 의해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
- ② 고위공무원단의 인사관리는 계급 또는 신분보다는 업무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③ 고위공무원단체도는 직업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 ④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체도는 직업공무원제도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

해설 :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체도는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전체 직위의 20% 범위내 개방형직위제의 도입, 적격심사를 통한 부적격자 배제 등으로 직업공무원제를 강화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809페이지) 답 : ④

14. 우리나라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모든 직급과 계급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② 개방형 직위의 규모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다.
- ③ 개방형 직위는 업무 수행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정하고 있다.
- ④ 개방형 직위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적격자를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해설 : ①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되,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정급직위 총수의 20%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자치단체는 광역의 경우 5급 이상 10%이내에서, 기초의 경우 6급 이상에서 지정한다. ③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다.(2010 비타민행정학 933~934페이지) 답 : ④

15.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사이의 생산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공무원의 자기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② 단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반하는 제도이나 장기적으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③ 민간전문가가 공직 경험이 많은 공무원들을 지휘해야 할 직위에 임용되었을 경우에 조직장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④ 공직사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특정 직무에 필요한 우수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해설 : 개방형직위제는 공직 내외부에서 경쟁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개방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하지 못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812페이지) 답 : ②

16. 다음 중 개방형 인사관리제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2008 서울9급>

- ① 행정조직의 관료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④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 ⑤ 정원관리가 용이하다.

해설 : 직위분류제는 각 직위가 가지고 있는 직무내용에 따라 직위를 분류한 후 이에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엄격한 전문화로 인하여 계급제에 비하여 할거주의가 높고 조정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횡적 의사소통이 곤란하다. ⑤ 직위분류제는 직무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고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원이 산출되기 쉬우므로 정원관리가 용이한 반면, 계급제는 사람의 신분 등을 기준으로 특정 계급에 임용하므로 정원관리가 곤란하다. (2009 비타민행정학 826~829페이지)답 : ②

23. 직위분류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2008 경남9급>

- ① 직위는 한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 ②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의미한다.
- ③ 직렬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 ④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가 상이한 직급의 계열을 의미한다.

해설 :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으로서 직군을 세분화한 것이며 전문화와 관련된다. 따라서 직렬은 보수의 지급기준이 아니며 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직급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826~827페이지) 답 : ③

24. 공직의 분류 혹은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계급제는 직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며, 규모가 크고 복잡한 조직에 적합하다.
- ② 직위분류제에서 각 계층의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이익의 옹호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 ③ 직위분류제는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 유용하다.
- ④ 계급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으나 수직적 융통성은 낮은 편이다.

해설 : ④ 계급제는 일반행정가 중심이므로 인적자원 활용의 수평적 융통성은 높은 반면, 계급간 엄격한 구분으로 수직적 융통성은 낮다. ①은 직위분류제의 내용이다. 조직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하며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할 때에는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가 적합한 반면, 조직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할 때는 계급제가 적합하다. ②는 계급제의 내용이다. 계급제는 폐쇄형이므로 응집력이 강하고 집단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하다. ③ 직위분류제는 직무와 직위를 세분화하고 전직과 전보를 제한하는 구조적 경직성을 띠므로 잠정적·비정형적 업무로 구성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824~831페이지) 답 : ④

25. 대표관료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8 서울9급>

- ① 소수집단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② 실적주의의 폐단을 시정하는데 기여한다
- ③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 ④ 역차별 문제를 유발한다
- ⑤ 관료제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로서 기능한다.

해설 : 사회 각 계층에서 고르게 선발함으로써 소회계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대표관료제는 민주성·대응성·책임성·수직적 형평성은 향상시키는 반면, 실적과 자격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선발이 아니므로 수평적 형평성·합리성·객관성·능률성·전문성을 저해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838페이지) 답 : ③

26. 대표관료제의 한계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2009 선관위9급>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 ㄴ. 구성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ㄷ. 역할론적 대표성 확보의 어려움 ㄹ. 채용 전과 후의 이해 관계 변화 |
|--|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해설 :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을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소극적 대표, 구성론적 대표)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적극적 대표, 역할론적 대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관료제는 ㄴ. 구성론적 대표(인구비례충원)와 ㄷ. 역할론적 대표(각 사회계층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를 정확히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ㄹ. 채용전과 후의 이해관계의 변화(공직 임용후 재사회화되고 새로운 준거집단을 추구)로 출신사회계층의 이해를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문제는 ㄱ. 국민주권의 원리 위반이 대표관료제의 한계에 해당되는가이다. 공직에 대한 통제 역시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아직 민주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며 공직 내부의 인적 대표성에 의한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민주적일 수 있다는 견해(유민봉, 임도빈)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대표관료제는 소수 지배엘리트의 이익이 반영되기 쉬운 실적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써 관료제에 대한 외부통제가 곤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된 것이지, 외부통제의 약화를 의도하거나 외부통제를 곤란하게 하는 폐쇄적인 제도가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대표관료제 자체가 국민주권 원리를 저해하거나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835~839페이지)답 : ④

27. 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 ①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 ②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 ③ 대우공무원제도
-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설 : 대우공무원제도는 승진을 포기하는 대가로 수당을 더 주는 제도로써 승진적체의 해소책이다. 따라서 소회계층을 공직에 고르게 임용하는 대표관료제와는 무관하다. (2009 비타민행정학 895페이지) 답 : ③

28. 다음 각 제도와 제도가 추구하는 취지와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시민헌장(citizen's charter) -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② 시장성 테스트(market testing) - 공공서비스 공급 주체 간 경쟁 유도
- ③ 공동생산(co-production) - 시민사회의 적극적 행정참여 유도
- ④ 대표 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 - 다양한 계층의 충원
- 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행정기능강화로 효율성 증대

해설 : 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우대정책으로서 기회보다는 결과를 평등하게 하는 것이며 대표관료제의 핵심내용이다. 차별철폐조치라고도 하고 임용할당제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민주성·대응성·책임성·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반면, 능률성(효율성)·전문성·객관성·합리성·수평적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행정기능 자체는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968페이지) 답 : ⑤

29. 공무원 선발시험과목 중 행정학 시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행정학교수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문항들을 검증하는 방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2008 지방수탁 7급>

- ① 기준타당성(criterion-related validity)
- ② 예측적 타당성(predictive validity)
- ③ 내용 타당성(content validity)
- ④ 구성개념 타당성(construct validity)

해설 : 내용타당도는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직무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험의 각 문항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내용타당도를 측정할 수 있다. ex) 회계담당관 선발시험에서 시험문항들이 회계지식과 관련없는 것들이 있다면 내용타당도가 낮음. (2009 비타민행정학 875페이지) 답 : ③

30. 채용시험이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중요한 능력요소나 지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와 연관된 것은? <2008 경북9급>

- ① 구성타당도
- ② 내용타당도
- ③ 기준타당도
- ④ 내적타당도

해설 : 특정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내용타당도에 대한 설명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875페이지) 답 : ②

31. 채용시험의 구성타당성(construct valid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채용시험이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
- ② 채용시험이 장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 ③ 채용시험이 특정한 직위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가.
- ④ 채용시험이 개인 간의 능력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식별할 수 있는가.

해설 : ① 이론적으로 추정된 능력요소(ex. 리더십측정에서 직무요소와 부하요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

도는 구성타당도에 대한 내용이며 이론단과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이다. ② 장래의 직무수행능력을 제대로 측정한 정도는 기준타당도에 대한 내용이다. ③ 특정 직무를 수행할 능력요소(ex. 타자의 경우 타자속도, 오자율 등)를 제대로 측정한 정도는 내용타당도에 대한 내용이며 시험문항을 분석함으로써 검증한다. 기준타당도가 장래의 업무실적을 예측하는 것인 반면, 내용타당도는 능력요소를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④는 난이도에 대한 내용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875~876페이지)답 : ①

32. 우리 정부의 경력개발제도 도입의 목적과 가장 관련이 없는 사항은? <2008 경남9급>

- ① 다양한 경력의 순환 경험과 경력 관리
- ② 조직 차원의 경력개발 경로 설정
- ③ 개인적 경력을 적용한 연계교육
- ④ 경력적인 적성 개발과 조직설계에의 반영

해설 : 경력개발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은 교육훈련을 보직관리와 연계·운영하는 경력관리프로그램으로서 전공,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보직경로를 설정하게 하며 분야별 전문행정이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경력을 순환하게 하는 것은 순환보직제로서 경력개발과 무관하며 전문성을 저해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893페이지) 답 : ①

12. 교육훈련은 실시되는 장소가 직장 내인가, 외인가에 따라 직장훈련(On-the-Job Training)과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으로 나뉜다. 다음 중 직장훈련의 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 ② 상사나 동료간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강화·촉진시킨다.
- ③ 피훈련자의 습득도와 능력에 맞게 훈련할 수 있다.
- ④ 훈련으로 구체적인 학습 및 기술향상의 정도를 알 수 있으므로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해설 :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은 현장훈련이라고 하며 평상시 근무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훈련으로서 직장훈련이라고도 한다. 즉, 특별한 계획없이 일을 평소에 하면서 배워가기 때문에 사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곤란하며 교육원훈련(Off-the-Job Training)이 계획에 따라 실시하기가 용이하다. 현장훈련의 기본개념인 “하면서 배운다”를 생각한다면 나머지 지문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888페이지) 답 : ①

33. 공무원 교육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강의(lecture)는 교육내용을 다수의 피교육자에게 단시간에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② 역할연기(role playing)는 실제 직무상황과 같은 상황을 실연시킴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이해시키고 참여자들의 태도변화와 민감한 반응을 촉진시킨다.
- ③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은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이다.
- ④ 시뮬레이션(simulation)은 업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피교육자가 그 상황에 대처해보도록 하는 방법이다.

해설 : ③ 감수성훈련(실험실훈련)은 조직발전의 대표적 기법으로서 10명 내외의 소집단에서 허심탄

회한 발표와 타인의 의견에 대한 경청을 통하여 집단 내에서의 감수성을 높이고 태도와 행동을 변화 시킴으로써 대인관계기술을 향상시키는 기법이다. 어떤 사건의 윤곽을 피교육자에게 알려주고 그 해결책을 찾게 하는 방법은 사건처리연습(incident method)의 내용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885~886, 1027페이지) 답 : ③

34.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2009 선관위9급>

-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하여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과업분야를 선정한다.
- 각 과업분야에 대하여는 가장 이상적인 과업행태에서부터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까지를 몇 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 각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점수를 할당한다.

- ①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 ② 도표식평정척도법
- ③ 행태관찰척도법
- ④ 체크리스트

해설 :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에 대한 내용이다. 강의시 도표와 예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답 : ①

* 행태기준 평정척도법(BARS ; Behavioral Anchored Rating Scale) – 2009 비타민행정학 879페이지

① 의의 : 도표식 평정척도법에 중요사건기록법을 결합한 방식으로서,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평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로 발생한 행태(중요 사건)를 가지고 평정척도로 삼는다.

② 특징과 장단점 : 이 방법은 관리자와 직무수행자가 공동으로 주요 업무를 정하고 업무마다 기준행동을 서술하며 척도의 계량수치도 배정한다. 따라서 신뢰와 참여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동일직무이더라도 과업마다 별도의 행태기준을 작성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예

구 분	행태유형
() 7	부하직원과 상세하게 대화를 나누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 6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상관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한다.
() 5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나 가끔 잘못된 문제를 초래한다.
() 4	일시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여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 3	부하직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 2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 1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인데 결정을 회피하거나 계속 미룬다.

11.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지도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 ③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 ④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목록

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해설 : 복수정답이다. ①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유사성의 착오이다. 유형화의 착오(stereotyping error)는 피평정자에 대해서 그가 속한 집단이나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부정확하게 평정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 집단화의 오류, 선입견에 의한 착오, 상동(相同)적 착오라고도 한다. ② 5급이상의 연구직은 연구원이 아니라 연구관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881페이지) 답 : ①. ②

35. 근무성적 평정과정에서 평정자의 평정기준이 일정하지 않아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는? <2009 국회8급>

- ① 총계적 오류 ② 규칙적 오류
③ 시간적 오류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 ⑤ 연쇄효과

해설 : ① 총계적 오류는 일관성이 없는 착오로서 특정 평정자의 평점기준이 불규칙하게 위아래로 움직임으로써 관대화 경향과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오류이다. 위아래로 벌어진 평점의 합이 클수록 총계적 오류는 크다. 반면 규칙적 오류는 다른 평정자에 비하여 항상 관대화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항상 엄격화 경향을 보이는 오류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018페이지) 답 : ①

36.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으로 옳은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 ① 연쇄효과(halo effect)
②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③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해설 : 집중화경향은 우열을 구분하지 않고 평균에 가깝게 평정하는 것으로서 무사인일주의나 책임회피수단으로 발생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881페이지) 답 : ③

37. 평정자인 A팀장은 B팀원이 성실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청렴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평정하였다. 이는 인사평정의 오류 중에 어떤 오류에 해당하는가? <2008 경기9급>

- ① 선입견
② 집중화
③ 관대화
④ 후광효과

해설 :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서 연쇄적 착오 또는 후광효과(halo effect)에 대한 설명이다. 연쇄적 착오는 주관적 영향을 받는 것인 반면, 논리적 착오는 논리적 상관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영향을 받는 것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880페이지) 답 : ④

38.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평정의 착오에 있어 상동적 오차(stereotyping)는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이다.
②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에 있어 성과계약평가의 대상은 4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원·지도

관이다. 다만, 소속장관이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급이하도 가능하다.

③ 쌍쌍 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은 피평정자를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하여 평정하는 방법이다.

④ 체크리스트(check list) 평정법은 공무원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표준행동 목록을 미리 작성해 두고, 이 목록(list)에 가부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해설 : 평정자가 자기 자신과 성향이 유사한 부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차는 유사성의 착오이다. 유형화의 착오(stereotyping error)는 피평정자에 대해서 그가 속한 집단이나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에 비추어 부정확하게 평정하는 현상을 말한다.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 집단화의 오류, 선입견에 의한 착오, 상동(相同)적 착오라고도 한다.(2010 비타민행정학 1018페이지) 답 : ①

12. 다음은 공무원 평정제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ㄱ	ㄴ	ㄷ	ㄹ
①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다면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② 다면평가제	역량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근무성적평정제
③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④ 다면평가제	직무성과관리제	역량평가제	근무성적평정제

해설 : ㄱ.은 고위공무원단의 역량평가제, ㄴ.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인 직무성과관리제(성과계약 등 평가제), ㄷ. 복수가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ㄹ. 은 일반적인 근무성적평정제의 내용이다.(2009 비타민행정학 809, 883, 879, 877페이지) 답 : ①

39.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공정성과 객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당사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는 어렵다.
-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다.
- ③ 기존의 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시민 중심적 충성심을 강화할 수 있다.
- ④ 계층제 문화가 강한 경우에 조직의 화합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해설 : 다면평가제는 상사, 동료, 부하, 고객(민원인) 모두가 참여하여 복수평정하는 제도로서 ① 당사자의 수용을 얻어내고 동기를 부여하기 용이하며 ② 고객도 참여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용이하며 ④ 행정분권화와 힘실어주기(empowerment)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하므로 수평적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동태적 조직에 적합한 반면, 계층제 문화가 강한 조직은 적합하지 않다.(2010 비타민행정학 1015, 1016페이지) 답 : ③

40. 근무성적평정제도 가운데 다면평가제의 효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8 서울7급>

- ① 관료적 병폐 시정
- ② 자기계발 동기 유발
- ③ 의사전달의 촉진
- ④ 관리업무의 용이성
- ⑤ 공정한 평정

해설 : 다면평가제는 상사만 평가하는 전통적 평가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공무원 개인을 평

가할 때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등 다수의 평가자가 여러 방면에서 입체적 평가를 하는 평가제도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 방식에 비하여 운영절차가 복잡하여 평가관리 업무가 곤란하며 상관에 대한 여론몰이식 비판으로 통제권의 흐름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조직관리 업무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880페이지) 답 : ④

41. 공무원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계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수당의 종류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 ② 한국, 영국, 미국에서의 공무원 보수수준 결정은 주로 대내적 상대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
- ③ 우리나라에서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제로 활용하여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성과급제도는 개인 및 집단이 수행한 작업성과에 기초하여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다.

해설 : 보수수준의 결정원칙으로서 대외적 비교성(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보수를 지급)과 대내적 상대성(상·하위 직급 간 보수 격차를 통하여 근무의욕의 유도를 가능)이 있는데 미국, 영국, 우리나라는 주로 대외적 비교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계획(2000~2004)에 의거하여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보수예비비를 활용하여 봉급조정수당을 하반기에 지급해왔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064, 1068페이지) 답 : ②

42. 공공부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8 경기9급>

- ① 공무원 보수 중에서 기본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더 큰 기형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 ② J자 모양의 보수곡선이 초래하는 공무원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 ③ 적극적으로 성과급 제도를 보급하기 위해서이다.
- ④ 부족한 공무원 보수를 민간부문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해설 : 임금피크제(salary peak)란 일정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면서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써 워크셰어링(work sharing : 일자리를 나누어 가짐)의 한 형태이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 50대 이상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의 활용 및 실업방지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악용하는 단점도 있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2009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에 따라 모퉁형(J자형) 보수곡선을 토대로 하는 정부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부담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단과수업에서 그림으로 기존 보수곡선과 비교설명 하였다.(2009 비타민행정학 924페이지) 답 : ②

43.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 ②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 ③ 보수후불설(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 ④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에게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설 : ③ 거치보수설(현재의 통설)은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적립하였다가 퇴직 이후에 거치된 보수로서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이때의 연금은 광의의 보수이다. 이렇게 본다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이 받게 될 당연한 보수이며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로 볼 수 있다. ④ 선거직 공무원은 장기간 근속의 담보가 없으므로 제외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074~1075페이지) 답 : ④

4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행정의 안정성 확보 ② 행정의 공평성 확보
- ③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공무원의 대표성 확보
- ⑤ 실적주의 확립

해설 : 정치적 중립성은 엽관제 폐해 때문에 대두되었으므로 실적주의와 정치행정이원론과 맥을 같이 한다. ④는 대표관료제의 내용으로서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난 제도이며 각 사회계층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조화시킨다는 점에서 적극적 정치적 중립성이라 하며 일반적인 정치적 중립성(소극적 정치적 중립성)과는 상충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938~939페이지) 답 : ④

45. 우리나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음 중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2009 서울7급>

- ① 타인에게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 ② 특정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나타냄
- ③ 타인이 어떤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말하도록 유도
- ④ 집권 정당에 대한 비판
- ⑤ 야당에 대한 지지 의사 표현

해설 : 지방공무원법(제57조)과 국가공무원법(제65조)에는 타인에게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2010 비타민행정학 1085페이지) 답 : ①

③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 2010 비타민행정학 1085페이지

- ㉠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 ㉡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 ㉡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 ㉢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과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와 내용이 동일**

46. 행정윤리의 개념 및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서울9급>

- ①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 ② 행정윤리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 ③ 공무원은 국민일부나 특수계층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 ④ 행정윤리의 개념은 이를 넓게 해석하여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 ⑤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해설 : 행정윤리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부정부패와 연결시키는 것은 소극적 관점이며 행정목적

의 실현과 공익을 위한 봉사로 보는 것이 적극적 관점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941페이지) 답 : ④

*** 행정윤리의 차원(2009 비타민행정학 941페이지)**

- ① 직업윤리적 관점 : 담당하는 구체적 행정업무와 관련해 요구되는 직업윤리(오석홍)
- ② 소극적 관점 : 소극적으로 좁게 파악하여 부정행위 금지 등 직무수행과 관련,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 ③ 적극적 관점 : 행정목적의 실현과 공익을 위한 봉사 등 적극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
- ④ 행정이념적 관점 : 행정이념과 관련시켜 행정윤리를 능률성과 민주성이라는 행정이념의 문제로 파악 (Wilson 이래 미국 행정학의 주류)

47.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09 국가7급>

- ㄱ.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 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은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윤리를 강조한다.
- ㄷ.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재산등록 대상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의 임원은 제외된다.
- ㄹ. 공무원의 개인적 윤리기준은 공공의 신탁(public trust)과 관련된다.
- ㅁ. 행정윤리는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ㅁ
- ④ ㄷ, ㄷ, ㅁ

해설 : ㄱ.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 행정의 정치오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윤리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ex. 업관제).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은 윤리의 성격상 추상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극적 측면보다도 공직자의 특정한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인 측면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ㄷ. 재산등록대상에는 공기업의 임원 및 정부출연기관과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임원도 포함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087~1094페이지) 답 : ②

48. 공직윤리의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1981년의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였으며, 등록사항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 ② 공무원윤리헌장에서는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의무를 첫 번째 신조로 규정하고 있다.
- ③ 1963년에 제정·공포된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내부고발자가 비윤리적 사실을 폭로하여 시정을 촉구했다면 그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 ⑤ 우리 공무원의 행동규범인 정치적 중립은 정당적 정실이나 당파적 정쟁에 대한 중립을 뜻한다.

해설 : 1980년 대통령훈령으로 도입된 공무원윤리헌장은 내부구성원들의 윤리지침으로서 추상적 공직

윤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에는 충성과 헌신을'을 첫 번째 신조로 하고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944~945페이지) ①은 주의를 요한다. 4급 이상이 대상인 재산등록은 비공개이지만, 1급 이상이 대상인 재산공개는 말 그대로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고 있다. 답 : ②

49. 공무원 부패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 중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요인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②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부패관리기구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또는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들이 공무원 부패를 조장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③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공무원 부패가 발생한다고 보는 접근방법이다.
- ④ 개인의 성격 및 독특한 습성과 윤리문제를 공무원 부패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해설 : 체제론적 접근은 부패는 하나의 변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으로서 ③이 여기에 해당된다. ①은 사회문화적 접근, ②는 제도적 접근, ④는 도덕적 접근에 해당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096페이지) 답 : ③

13. 부패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 ② 과도한 선물의 수수와 같이 공무원 윤리강령에 규정될 수는 있지만,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는 회색부패에 해당된다.
-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백색부패에 해당된다.
- ④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에 해당된다.

해설 : ③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시민과의 거래와 관계없이 직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사기형부패이자, 다수가 비난하는 흑색부패에 대한 내용이다(ex. 공금횡령). 백색부패는 다수가 용인하는 부패이다(ex. 공무원출퇴근카드 허위체크). (2009 비타민행정학 949페이지) 답 : ③

50. 부패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일탈형 부패는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구분으로서 개인부패에서 많이 발생한다.
- ② 공금횡령, 개인적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등은 사기형 부패에 해당한다.
- ③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부패를 회색부패(gray corruption)라고 한다.
- ④ 뇌물을 주고받음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보는 사람과 이를 대가로 특혜를 제공받은 사람 간에 발생하는 부패를 거래형 부패라고 한다.
- ⑤ 생계형 부패를 작은 부패(petty corru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해설 : ③ 백색부패는 다수가 용인하는 부패이며(ex. 공무원출퇴근카드 허위체크) 선의의 목적으로 행해지기도 한다.(ex. 금융위기사 "한국경제의 기초는 튼튼하다"라고 발언한 경제관료) 회색부패는 비난과 용인 사이에서 일치점을 찾기 어려운 부패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097페이지) 답 : ③

51.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009 서울9급>

- ① 퇴직 후의 고발은 내부고발이 아니다.
- ② 조직 내의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③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내부고발은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 ⑤ 내부적인 이의제기 형식과는 다르다.

해설 : ① 현직 공무원을 주로 대상으로 하지만, 누구든지 부패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퇴직한 공무원이 내부부패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는다. ② 신고대상은 비정치적 행위 또는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내부 비리나 부패행위이다. ③ 반드시 인적 사항을 기재한 기명으로 해야 하며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내부 구성원 간 불신을 초래하므로 구성원 간 단결과 응집력을 저해시킨다. ⑤ 내부고발자보호제도는 단순히 이의제기와는 다르며 조직 내부의 부패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03~1104페이지) 답 : ⑤

1.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급성 희소성(acute scarcity)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 ② 완화된 희소성(relaxed scarcity)의 상태는 정부가 현존 사업을 계속하고 새로운 예산 공약을 떠맡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③ 만성적 희소성(chronic scarcity) 하에서 예산은 주로 지출통제보다는 관리의 개선에 역점을 두게 된다.
- ④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양면적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은 항상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해설 : ①은 급성 희소성이 아니라, 총체적 희소성에 대한 내용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24페이지) 답 : ①

* 예산과 희소성(Schick, 운영진)

- ① **완화된 희소성(relaxed scarcity)** : 자원이 충분한 상태로서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의 정상비용 및 업무량 증가분, 그리고 주요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충분한 자원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의 예산과정에서는 사업개발에 초점을 두며 통제(관리)기능에서 계획기능에 초점을 두고 사업분석과 다년도예산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196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잉여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용도를 탐구하였으며 이것이 계획예산(PPBS)의 도입배경이었다.
- ② **만성적 희소성(chronic scarcity)** : 일상적인 예산부족 상태로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이 충분하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때의 예산과정은 지출통제보다는 관리개선에 역점을 두며 사업의 분석과 평가는 소홀해지며 사업개발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특징을 보여주며 정부는 영기준 예산결정에 관심을 갖게 된다. 완화된 희소성에서 만성적 희소성으로 전환되기는 쉽지만, 만성적 희소성에서 완화된 희소성으로 전환되기는 곤란하다. 이는 자원의 여유가 생기면 증가된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 ③ **급성 희소성(acute scarcity)** : 가용재원이 점증적 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예산관련 기획은 거의 없으며 관리상의 효율성을 새롭게 재강조하고 최소한의 평가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정부 역할의 전반적인 재평가보다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요청된다.
- ④ **총체적 희소성(total scarcity)** :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미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정부가 매우 빈곤하거나 서비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경우에 발생하며 정부는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정부의 재정수단을 초과하여 지출하게 된다. 따라서 통제와 관리기능은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 비현실적인 계획과 부정확한 예산을 꾸며 내도록 만드는 회피형 예산편성을 하게 되며 예산의 실질은 무시되고 장부상 균형을 취하는 겉치레 예산이 된다. 자본예산도 회피형 예산편성에 희생물로 이용된다. 총체적 희소성은 저개발국가의 재정적 운명으로서 그들은 불가능한 곤경상태를 해결하기를 바라면서 일 년 중 여러 번 반복해서 편성되고(반복적 예산편성) 현금흐름의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

2. 각국의 경제력, 재정적 예측능력, 정치제도, 엘리트의 가치체계 및 지출규모 등에 따라 예산운영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총체적 희소성 상황에 처한 저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예산운영 유형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보충적 예산운영
- ② 점증적 예산운영
- ③ 반복적 예산운영
- ④ 세입 예산운영

해설 : 총체적 희소성이란 가용자원이 정부의 계속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미 존재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 총체적 희소성 하에 놓인 후진국은 국가경제력도

빈곤하고 재정에측력도 낮으므로 반복적 예산결정형태가 나타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24, 1207 페이지) 답 : ③

3. 2009. 1. 1. 시행예정인 국가회계법에 명시된 재무회계의 원칙에 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높다.
- ②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③ 외형상 수지균형의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 ④ 자산·부채의 변동을 비망기록으로 한다.
- ⑤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및 유동부채와 장기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해설 : 국가회계법(2007. 10 제정, 2009. 1 시행)은 국가회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2009년부터 중앙 정부도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로 회계처리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문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대한 문제이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① 자산이나 부채평가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므로 회계처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②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은 주의를 요하는 지문이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정확히 표현하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는 용이하지만,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킴으로써 '외형적'으로 수지균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금주의 회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키는 회계방식이다. ④ 비망(備忘)기록은 잊지 않기 위하여 별도 기록하는 것으로서 현금주의와 단식부기는 현금의 유입(수입)과 유출(지출)시에 세입부와 세출부에 기록하고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비망기록으로 별도 관리한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용이 각기 다르게 기록되더라도 확인이 어려운 난점이 있다. ⑤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성 순서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2009비타민행정학 982~984페이지) 답 : ⑤

4.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2009 국회8급>

- ①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불가능하여 통제가 용이하다.
- ②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산출물에 대한 정확한 원가산정을 통해 부문별 성과측정이 가능하다.
- ④ 대차평균의 원리를 통해 거래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기록과 계산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의 기능을 지닌다.

해설 : ①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현금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사실이 발생했을 때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기록하고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키는 방식이므로 현금의 흐름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자산이나 부채 평가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이에 대한 통제가 곤란하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40~1141페이지) 답 : ①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거래의 해석과 분류	현금 유입·유출시점	거래사실 발생시점
수익·비용의 인식	현금의 유입(수익)과 유출(비용)	채권(수익)과 채무(비용)의 발생
선급수익·선급비용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자산과 부채로 인식
미수수익·미지급비용	인식 안 됨.	자산과 부채로 인식
감가상각, 대손상각, 제품보증비, 퇴직급여충당금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절 차	간편	복잡
비목별 통제	용이	곤란
비용편익분석	곤란	용이
자산부채 평가	평가하지 않음(객관적).	평가함(주관적).
자산부채 변동	비망(備忘)기록으로 관리	공식적 표기
경영성과 파악	곤란	용이
거래오류 파악	곤란	용이
원가산정	곤란	용이
무상거래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정보활용원	개별자료 우선	통합자료 우선
추가정보 요구	별도작업 필요	기본시스템에 존재
적용례	가계부	민간기업, 정부부처, 정부기업

5. 정부회계 기장방식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009 국가7급>

- ①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거래의 인과관계를 기록한다.
- ② 감가상각과 대손상각은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 ③ 기장 내용에 대한 자기검증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 ④ 종합적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으나 자동 이월기능이 있다.

해설 :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이중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부채·자본을 인식하며 자동이월(rolling-over) 기능과 자동산출 기능이 있어 매일의 종합적 재정상태를 즉시 알 수 있으므로 정보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42페이지) 답 : ④

6. 복식부기 제도 하에서 정부보유 현금자산이 200조, 고정자산이 300조, 유동부채가 100조, 재정수익이 300조, 비용이 200조라면, 회계기간 중 특정 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상에 순자산으로 보고될 액수는? <2009 국가9급>

- ① 400조 ② 100조
- ③ 500조 ④ 200조

해설 : 특정시점에서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대차대조표로서 자산 = 부채+자본(순자산) 또는 자산-부채 = 자본(순자산)의 등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산 500억(현금자산 200조+고정자산 300조)에서 부채 100조를 빼면 400조가 순자산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42~1143페이지) 답 : ①

14. 전통적 예산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예산단일의 원칙은 특정한 세입과 특정한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 ② 예산공개 원칙은 예산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③ 예산사전의결 원칙은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 ④ 예산완전성 원칙은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해설 : ① 예산단일의 원칙은 정부의 재정활동을 알아보기 쉽게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한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은 통일성원칙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990페이지) 답 : ①

*** 예산의 원칙과 예외**

전통적 예산원칙 (통제성-입법부 우위)			현대적 예산원칙 (신축성-행정부 우위)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에게 공개	신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의 원칙 • 책임의 원칙 • 보고의 원칙 (각종 보고에 기초) • 적절한 수단의 원칙 • 다원적 절차의 원칙 (사업성격에 따라 예산 절차를 다르게 운영) • 재량의 원칙 • 시기신축성의 원칙 •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상호협력)
명료성의 원칙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편성	총액예산(총괄예산)	
정확성의 원칙	예산=결산(수지균형)	적자예산, 흑자예산	
명세성의 원칙	구체적으로 항목화	총액예산(총괄예산)	
완전성의 원칙	모두 예산에 계상(포괄성의 원칙)	순계예산, 기금, 세입세출 외,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통일성의 원칙	국고로 통합, 국고에서 지출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지역개발세 등), 수입대체경비, 수입금마련지출	
사전의결 원칙	의회가 사전 심의 및 의결	준예산, 예비비, 전용, 사고이월, 재정상 긴급명령, 선결처분	
한정성의 원칙	• 목적외 사용금지(질적 한정성)	이용, 전용	
	• 초과지출 금지(양적 한정성)	예비비	
	• 연도경과 금지(시간적 한정성)	이월, 계속비, 과년도수입 및 지출, 국고채무부담행위, 조상총용	
단일성의 원칙	재정활동을 단일예산으로 편성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공기업 예산	

7.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 ①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긴급재정명령, 선결처분
- ② 예산 한정성의 원칙 - 계속비,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월
- ③ 예산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목적세
- ④ 예산 공개의 원칙 - 국가 기밀에 속하는 국방비·외교활동비

1번해설 : 특별회계와 추가경정예산은 단일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므로 단일성원칙의 예외에 해당되나, 목적세는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특정세출로 바로 지출되므로 단일성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통일성원칙의 예외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989~990페이지) 답 : ③

8.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서울7급>

- ① 완전성 원칙 - 순계예산, 기금, 특별회계
- ② 단일성원칙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
- ③ 한정성 원칙 - 예비비, 계속비, 목적세
- ④ 사전의결 원칙 - 준예산, 계속비, 예비비
- ⑤ 통일성 원칙 - 준예산, 기금, 목적세

해설 : ① 완전성원칙은 모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계상하지 않고 빠뜨린 것이 예외이다. 순계예산은 중복된 부분을 빼뜨렸으므로 예외에 해당되고 기금은 예산외로서 빠뜨렸으므로 예외에 해당되지만, 특별회계는 예산이므로 완전성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단일성원칙은 하나의 단일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원칙으로서 별도로 편성한 것이 예외이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기금은 모두 일반회계와 별도로 편성하였으므로 예외에 해당된다. ③ 한정성원칙은 한정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서 목적외 사용 금지, 초과지출 금지, 연도경과 금지가 내용이며 이것을 위반한 것이 예외이다. 목적 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통일성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④ 계속비는 국회의 의결을 받으므로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준예산은 통일성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사전의결원칙의 예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60~1161페이지) 답 : ②

10. 예산과정에서 점증주의 모형에 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2008 서울9급>

- ① 점증주의는 결정자의 인식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다.
- ② 총체주의와 달리 결정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기존의 예산과 조금 차이가 나는 대안을 검토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 ④ 결정상황을 제약하는 비용, 시간 등의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시키자는 것이다.
- ⑤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법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해설 : 비용편익분석, 선형계획 등 계량적 모형을 이용하여 자원을 최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모형에 해당된다. 점증주의모형은 정치적 합리성에 입각한 참여자간의 동의와 합의를 중시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30~1031페이지) 답 : ⑤

11.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집행의 유연성이 높아 환경변화가 심할 때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중점을 두며 예산운용에서 능률성과 효과성은 중시되지 않는다.
-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고 있으나 예산과정의 객관성보다 주관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 ④ 영기준예산제도(ZBB)는 1970년대 미국 카터(Carter) 대통령 당시 긴축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 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에, 영기준예산제도는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주된 관심을 둔다.

해설 : ① 품목별예산은 지출대상 및 금액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 예산운영의 신속성이 제약되고 신속적 상황에 적응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②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을 기능별(사업별, 활동별)로 편성하되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통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이므로 예산운영의 능률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다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 효과성의 개념(목표달성도 또는 효과/산출)을 명확히 다루지 않는 입장에서는 성과주의예산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강조한다고 본다(이중수외). 반면 효과나 효과성의 개념을 명확히 다루는 입장에서는 성과주의예산은 효과 파악이 어려우므로 효과성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본다(박영희, 신무섭). 즉, "효과는 질적 측면이므로 성과주의예산은 능률을 측정하는 장치로는 훌륭하지만, 효과를 측정하는데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박영희)라든가 "계획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큰 이유는 효과성에 있다. 정부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데 2절약과 능률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산사업을 수행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능률성과 함께 효과성을 중시하는 것은 계획예산이다"(신무섭)라고 보는 견해가 여기에 해당된다. ③ 계획예산은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1년 단위의 예산을 연계시킨 제도로서 경제적 합리성과 과학적 객관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④ 영기준예산은 감축관리기인 1979년 카터대통령에 의하여 도입된 감축지향적 예산제도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⑤ 성과주의예산은 능률적 관리에 초점을 두는 점증주의예산으로서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how to do)'에 초점을 두는 반면, 계획예산은 계획지향의 합리주의예산으로서 장기계획 수립시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평가작업, 즉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을 거치므로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에 주된 관심을 둔다. 영기준예산도 사업대안패키지 작성시 대안에 대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감축지향에 초점을 두므로 '무엇을 할 것인지(What to do)'

에 초점을 둔다고 보기 어렵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16페이지) 답 : ④

12.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대상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원가와 양을 계산해서 사업별, 활동별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계획예산제이란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예산제도이다.
- ④ 영기준 예산제이란 점증주의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과거의 관행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④ 영기준예산은 점증주의적 편성을 탈피하고 매년 0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점증주의예산이 아니라, 합리주의예산에 해당된다. 기존사업도 다시 분석한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예산 중에서도 완전합리주의에 해당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15페이지) 답 : ④

13. 예산제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품목별 예산은 사업대안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② 계획예산은 정보들을 의사결정 패키지별로 조직한다.
- ③ 영기준예산은 장기적 계획과 단기적 예산을 영(zero)수준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연계한다.
- ④ 성과예산은 업무량 또는 활동별 지출을 단위비용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해설 : ①과 ②는 영기준예산, ③은 계획예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다만, 0기준 수준으로 연계하지는 않음). ④ 성과주의예산은 예산을 기능별(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A업무 : 업무량 × 단위원가 = 예산). 예산의 통제보다는 성과에 초점을 두며,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통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리지향적 예산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09페이지) 답 : ④

14.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 운영되기 위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행정부제출예산제도
- ② 합법성 위주의 예산심의
- ③ 회계검사 기관의 기능 강화
- ④ 사업원가의 도출

해설 : 성과주의예산(PBS)은 업무량×단위원가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ex. 도로건설업무 : 10km × 100억 = 1,000억). 여기서의 핵심은 업무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를 도출하는 것이다. 성과주의예산은 활동별 단위원가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단위원가가 현저히 상승한 활동에 대해서 능률적 관리를 촉구함으로써 관리상 능률성을 제고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무단위의 설정과 단위원가의 계산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10페이지) 답 : ④

15.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008 서울7급>

- ①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킨다.
- ② 재정사용의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 ③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시킨다.
- ④ 관리자의 조직관리능력을 향상시킨다.
- ⑤ 예산절감의 효과를 유발한다.

해설 : 다소 논란이 되는 문제이다. 성과주의예산(PBS)은 예산을 기능별(사업별·활동별)로 분류하여 편성하되, 업무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①은 주의를 요한다. 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것은 계획예산(PPBS)이지만, 성과주의예산도 사업계획별·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편성하는(박영희) 사업중심 예산이므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시킨다고 할 수 있다. ② 사업중심이므로 사업 내에서 자율적 변경이 가능한데다가 단위원가를 사용함으로써 의회의 회계적 통제가 곤란하므로 품목별예산제도(LIBS)에 비하여 재정사용의 투명성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다. ③의 경우 성과주의예산은 점증주의(분권적·상향적 예산결정방식)이므로 집권적인 계획예산에 비하여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시키므로 맞는 지문이다. ④, ⑤ 성과주의 예산은 활동별 단가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단가가 현저히 상승한 활동에 대해서는 능률적 관리를 촉구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유발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34페이지) 답 : ②

16.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은? <2008 서울7급>

- ① PPBS가 하향적일 때에 ZBB는 상향적이다.
- ② PPBS가 미시적 분석을 좋아할 때에 ZBB는 거시적 분석을 좋아한다.
- ③ PPBS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존의 프로그램 간의 예산변동액에 주요 관심을 가질 때에 ZBB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주요 관심을 기울인다.
- ④ PPBS가 개방체제의 성격을 띠 때에 ZBB는 폐쇄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⑤ PPBS가 정책정향적이고 계획정향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을 때에 ZBB는 사업정향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해설 : 계획예산(PPBS)은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실시계획을 짜며 이를 연차적으로 단기적 예산에 반영하는 거시적·하향적·집권적 예산인 반면, 영기준예산(ZBB)은 각 사업단위 부서에서 매년 0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미시적·상향적·분권적 예산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41페이지) 답 : ②

*** 계획예산과 영기준예산(2009 비타민행정학 1041페이지)**

구분	계획예산	영기준예산	
공통점	합리주의적 예산제도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중시		
차이점	예산의 중점	정책·계획의 수립이나 목표에 중점	목표달성과 사업평가에 중점
	참여범위	집권적(최고결정자와 참모 중심)	분권적(모든 관리자가 참여)
	결정의 흐름	하향적(top-down)	상향적(bottom-up), 하의상달
	기간	장기적(보통 5년)	단기적(1년)
	대내·외 개방성	개방적(체제적 접근), 조직 간 장벽 타파	폐쇄적(내부관리적 접근), 조직내 결정
	점증·합리주의	중간형	완전 합리주의
	B/C 분석의 적용	신규사업만 적용	신규 및 기존 사업에 적용
관리적 측면	최고관리층의 관리도구 (일선관리자에게 관리수단 미제공)	일선관리자의 관리도구 (일선관리자의 참여로 관리수단 제공)	

17. 영기준 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의 단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시간과 노력의 낭비
- ②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
- ③ 사업구조 작성의 곤란
- ④ 장기적인 목표의 경시
- ⑤ 소규모 조직의 희생

해설 : 영기준예산이란 매년 제로(0) 기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査定)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로써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른 감축관리를 맞아 1979년 카터행정부가 도입하였다. 영기준예산은 ① 패키지 작성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었고, ② 시간상 부족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으며 ④ 매년 재편성하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소홀히 하여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며 ⑤ 감축지향이므로 힘없는 소규모조직이 감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③ 사업구조의 작성이 곤란한 것은 계획예산에 대한 내용이다. 계획예산은 사업구조(category ⇨ sub-category ⇨ element)를 작성하여 이를 연차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예산제도인데 공행정의 모든 사업들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2009 비타민행정학 1036, 1040페이지) 답 : ③

18. 다음 중 영기준예산(ZBB)의 특징이 아닌 것은? <2008 경남9급>

- ① 의사결정패키지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부서에서 3가지 결정패키지를 분석해야 한다.
- ② 의사결정의 최종판단은 주관적이다.
- ③ 기대되는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대안과 지출을 묶어 모든 활동들을 평가한다.
- ④ 적용시 계획과 예산을 분리한다.

해설 : 영기준예산은 매년 0기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사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이다. 영기준예산의 기본전제는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어도 한번쯤은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며(윤영진) 예산의 계획기능과 감축기능을 조화시키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박영희). 따라서 영기준예산은 매년 기존사업도 신규사업 처럼 분석하므로 목표설정기능과 계획기능이 위축되기는 하지만, 적용시 계획과 예산을 분리하지는 않는다. ①에서 의사결정패키지는 구체적으로 증액대안패키지를 의미한 출제이며 각 부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저수준, 현행수준, 증액수준 3가지 금액수준의 대안을 작성하게 된다. ② 영기준예산은 우선순위 선정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시간상 부족으로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③ 사업대안패키지 작성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체제분석을 거치게 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38~1040) 답 : ④

19.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성과주의예산제도는 미국의 후버(Hoover)위원회가 미국대통령에게 건의한 제도이다.
- ②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정책당국자는 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등한시할 수 있다.
- ③ 영기준예산제도의 경우 예산의 운영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예산 운영의 능률성과 효과성이 좌우된다.
- ④ 계획예산제도의 핵심은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있으며, 정치적 협상

을 중시한다.

해설 : 계획예산(PPBS)은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합리주의 예산으로서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체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을 평가하며 장기적 계획을 예산에 반영한다. 따라서 정치적 협상을 중시하지 않으며 이를 중시하는 것은 점증주의 예산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30페이지) 답 : ④

20. 예산결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계획예산은 영기준예산과는 달리 결정의 흐름이 하향적이다.
- ② 영기준예산에서는 업무부담이 과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③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합리모형의 적용이 곤란하다.
- ④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은 경제적 합리성에 더해 정치적 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해설 : 점증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합리성을 고려한다. 답 : ④

21. 자본예산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자본적 지출의 경우 장기적 재정계획에 따라 일시적인 적자재정이 정당화된다.
- ②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을 분리·계리함으로써 재정의 기본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세출규모의 변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데 기여한다.
- ④ 경상적 지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유리하다.

해설 : 자본예산은 정부예산을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적 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수지균형을 이루게 하는 반면, 자본적 지출은 공채발행과 적자재정으로 충당하게 하는 예산 제도로서 자본적 지출을 통한 투자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상황을 분석하자는 취지에서 대두되었다. 따라서 ④는 틀린 지문이다.(2010 비타민행정학 1221~1222 페이지) 답 : ④

2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 서울9급>

- ① 국가의 자산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② 자본적 지출에 대한 특별한 사정과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③ 인플레이션 시기에 적절한 예산제도로 경제안정에 도움을 준다.
- ④ 수익자의 부담을 균등화시킬 수 있다.
- ⑤ 정부는 자본예산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조달하여 유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경기 회복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설 : 자본예산은 공채발행을 통한 공공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제도로서 불황일 때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탄생되었다. 자본예산은 적자재정을 정당화하므로 통화량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44~1045페이지) 답 : ③

23. 성인지예산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2008 경기9급>

- ①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② 예산집행 후 그 결과가 양성에 평등하게 나타나야 한다.
- ③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예산안 및 결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 성인지예산(GSB, gender-sensitive budget)은 일반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성격차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로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4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6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2009 비타민 행정학 1047페이지) 답 : ①

24.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
- ② 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 ③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
- ④ 영국(Spending Review), 스웨덴(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Coalition Agreement)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해설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는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제시하면 각 부처가 편성을 자율적으로 하는 예산제도로서 재정당국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 부문별 지출한도가 결정되므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강조하는 거시적 재원배분방식(총량적 재정규율)이며 하향적(top-down)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009 비타민 행정학 1055페이지) 답 : ②

*** 기존예산제도와 총액배분자율편성제(2009 비타민행정학 1055페이지)**

기존 예산제도	총액배분자율편성제
단년도 예산편성 중심(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경기대응 및 조절)
Bottom-up (각 부처 예산요구 ⇨ 예산기관 대폭삭감 ⇨ 편성)	Top-down (지출한도 설정 ⇨ 각 부처 자율편성 ⇨ 종합편성)
각 부처 과다요구 관행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예산요구 증가율 25%)	과다요구 관행의 축소 및 예산사정기관과의 마찰감소(예산요구 증가율 5%)
예산투입에 치중	성과관리에 중점(성과관리제와의 연계)

25.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는 동시에 진행된다.
- ②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없다.
- ④ 예산과정에 있어 본회의는 형식적 성격이 강하다.

⑤ 예산주기는 3년이다.

해설 : 국정감사는 예산안이 제출(10월 2일)되기 전인 9월 10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 수업때 그림으로 강조한 바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85페이지)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되었으므로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다른 특별위원회와 달리 별도의 활동기한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답 : ①

26.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정부는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기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67페이지) 답 : ①

27.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예산심의를 사업 및 사업수준에 대한 것과 예산총액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②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상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 ④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설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73페이지) 답 : ③

28.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추세이다.
- ② 총액예산제도가 실시되면서 총액의 한도내에서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예산사업을 소규모화하거나 우선순위를 낮게 설정하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 ③ 대통령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성격이 국회예산심의의 기본 특징을 규정한다.
- ④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예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다.

해설 :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정적 계수인 예산과 다르다. ② 출제교수는 총액예산제도를 총액배분자율편성제란 의미로 사용한 듯하다. (2010 비타민행정학 1122페이지) 답 : ④

29.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 간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 ②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③ 예산의 이월은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유롭게 이월 및 재이월할 수 있다.
- ④ 계속비는 원칙상 5년 이내로 국한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해설 : ②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예산도 이에 따라 변경하는 제도로서 국회승인이 불필요하다. ③ 명시이월의 경우 국회의결을 얻어야 하며 사고이월의 경우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④ 계속비는 국회의결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78~1281페이지) 답 : ①

30.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 ②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제도로, 이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하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拂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④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 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설 : ② 명시이월은 지출하지 못할 것을 사전에 예측하여 미리 국회의결을 받고 이월하는 제도로 이월 이후에 국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⑤ 국가재정법은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성인지예산서는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되므로 2009년 10월 2일에 제출한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79페이지) 답 : ②

31. 우리나라의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비와 함께 예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 ②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
- ③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이내로 한정한다.

해설 : 국고채무부담행위란 국가가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금전급부 의무)를 지는 행위로서 채무행위의 책임은 다음 연도 이후에 부담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국고부담을 야기시키는 채무를 체결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지출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다(ex. 2년 이상의 기간으로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건조용 기자재 조달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2007년에 부담하는 내용으로 2006년에 미리 지출원인행위를 함). (2009 비타민행정학 1092~1093페이지) 답 : ④

32. 예산의 신축적 집행을 위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이체(移替):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 그 변동내용에 따라 예산을 이동하여 집행하는 것
- ② 이월(移越): 회계연도 단년도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집행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③ 전용(轉用): 예산의 입법과목에 대해서 그 집행용도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
- ④ 사고이월(事故移越):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것

해설 : 전용은 행정과목인 세항과 목에 대한 항목변경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89~1090페이지) 답 : ③

33. 예산집행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리가 먼 것은? <2008 경북9급>

- ① 이용
- ② 전용
- ③ 명세예산
- ④ 총괄예산

해설 : 명세예산은 세부항목별로 자세히 분류하여 편성하는 예산인 반면, 총액(총괄)예산은 구체적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큰 항목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따라서 명세예산은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므로 신축성이 저해되는 반면, 총괄예산의 경우 신축성이 제고된다. (2000 비타민행정학 1093페이지) 답 : ③

34. 예비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8 경북9급>

- 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충당을 위한 경비이다.
- ② 정부는 예비비를 책정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예비비는 각 중앙 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 ④ 예비비는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방안이다.

해설 : 예비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한다.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용한 후에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여 예비비 관리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091~1092페이지) 답 : ③

35. 현재 우리나라 예산·결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경북9급>

- ① 세계잉여금은 세입수납액에서 세출지출액을 공제한 것이다.
- ② 정부가 제출한 결산서는 예산서와는 달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예결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③ 세입·세출 결산의 검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다.
- ④ 결산결과 위법·부당한 지출이 확인된 경우 예산 집행을 무효화 할 수 있다.

해설 : ① 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이라 한다. 따라서 맞는 지문이다. ② 결산안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및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③ 결산서에 대한 검사는 감사원이 실시한다. ④ 결산은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지적되어도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법적 권한이 없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00페이지) 답 : ①

36. 우리나라 세계잉여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7급>

- 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④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00페이지) 답 : ④

(3) 세계잉여금의 처리(2009 비타민행정학 1099~1100페이지)

① 의 의

-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이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부터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이라 한다.
- ㉡ 세계잉여금은 건전재정원리상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입에서는 초과액이, 세출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므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 ㉢ 일반적으로 세계잉여금은 새로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원을 의미하므로 사용목적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제외시키며 이것을 세계순잉여금이라 하며 법적으로 처분 가능한 순잉여금이다.

❖ 세계잉여금과 세계순잉여금 등

1. 세계잉여금 = 세입액 - 세출액 = 초과세입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2. 세계순잉여금 = 세계잉여금 - 다음 연도 이월액 = 초과세입액 + 불용액
3. 불용액 = 세출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 연도 이월액)
4. 세출예산현액 : 당해 연도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세출금액

- ② 처리 : 기존 예산회계법에서는 추경요소 발생시 세계잉여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었으나,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채무 상황에 세계잉여금을 우선 사용한 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 상황 ⇨ 국채상황 ⇨ 추경재원으로 사용 ⇨ 다음 연도 세입 이입)하고 있다.

❖ 세계잉여금 처리용도(국가재정법 제90조)

- ①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0/10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항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30/100 이상을 다음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 ④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 ⑦ 세계잉여금 중 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37. 공공서비스의 공급방식 중에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을 의미하는 용어는? <2009 국가9급>

- ① BTL
- ② BTO
- ③ Voucher
- ④ Contracting Out

해설 : BTL(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면 정부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가로 민간에게 수익권을 보장해주고 민간에게 임대료를 지급(lease)해주는 민간투자방식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민간이 시설을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BOT(Build-Own-Operate-Transfer)는 민간사업자가 시설 완공 후 일정기간 시설을 소유·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기부하는 방식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07페이지) 답 : ①

38.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의 효과가 아닌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재정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미래세대가 금전적 부담 없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 ②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③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민간부문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유인할 수 있다.
- ⑤ 정부가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건설하기에는 소요시간이 많이 드는 긴요한 공공시설

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해설 : ① BTL사업은 정부가 시설을 건설하여(Build) 시설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한(Transfer) 민간 사업자에게 적정 수익률이 보장된 임대료를 장기적으로 지불함으로써(Lease)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서 재정부담을 세대 간 이전하는 것이 아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299페이지) 답 : ①

6편 기출문제

1. 다음 중 지방화의 동력을 설명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2008 서울7급>

- ① 중앙정부의 과부하
- ② 참여욕구의 증대
- ③ 지방시민사회의 활성화
- ④ 정부실패
- ⑤ 지방경쟁력 강조

해설 : 상대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다. ④ 1980년대 정부실패의 발생으로 나타난 신공공관리론에서는 지방에의 권한위임을 강조하고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인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세계화와 시장화가 강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지방화 현상인 신지방분권화가 대두하지만, 다른 지문과 같이 직접적인 지방화 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답 : ④

2. 다음 중 지방분권의 효용을 설명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2008 서울7급>

- ① 혁신적 정책의 채택빈도를 높임
- ② 행정의 반응성을 증대시킴
- ③ 생산적 능률(productive efficiency)의 증대에 기여함
- ④ 시민참여를 확대시킴
- ⑤ 주민선호의 충족도를 높임

해설 : ③ 생산적 능률성(기계적 능률성 : 산출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음)을 제고시키는 것은 중앙집권의 장점이다. 지방분권은 사회적 능률성을 제고시킨다. 일반적으로 능률성이라 하면 기계적 능률성을 의미한다. ① 지방분권은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통하여 검증된 정책을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맞는 지문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26페이지) 답 : ③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2008 선관위9급>

- ①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 ②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비율
- ③ 지방자치단체 중요 직위의 선임방식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사무 처리의 비율

해설 :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중 국가의 간섭과 통제가 많은 것은 기관위임사무이므로 양 사무의 비율로써도 지방분권 정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비율로써 지방분권을 측정하는 지표로 삼는 경향이 있고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위임한 것도 있지만,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에게 위임한 사무도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답은 ②로 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된다. 답 : ②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최창호)

- 1. 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의 수 : 중앙정부 직속의 특별지방행정관서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수록 중앙집권적이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직위의 선임방식 : 자치단체의 중요직위가 중앙정부에 의해서 많이 임명될수록

중앙집권적이다.

3.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수의 대비 : 자치단체 안에 국가공무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적이다.
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규모의 대비 : 국가재정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적이다.
5. 국세와 지방세 수입의 대비 : 국세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적이다.
6. 국가의 지방예산통제 정도 : 예산편성지침, 보조금의 가정적 내부시달, 예산성립 보고, 지방비부담금 지출강제, 지방채발행승인 등 국가의 통제가 많을수록 중앙집권적이다.
7. 자치단체의 사무구성비율 : 고유사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분권적이고 위임사무 특히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을수록 중앙집권적이다.
8. 민원사무의 배분비율 : 민원사무 특히 인허가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가 관장할수록 중앙집권적이다.
9. 감사 및 보고의 회수 : 국가의 감사 및 국가에 대한 보고가 많을수록 중앙집권적이다.

4.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서울9급>

-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관할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하급행정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니다.
-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 ⑤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기능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이므로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국가가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므로 자치단체와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기도 하며 시도가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인 보건소의 경우 지역건강 프로그램과 같은 자치단체의 소관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염병 통제와 같은 중앙정부의 소관사무도 처리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③은 일반구, 읍·면·동을 의미하며 일반지방행정기관이다. ④, ⑤ 자치단체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수한 전문분야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것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32 페이지) 답 : ①

5.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이고 광역적인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목적과 부처이기주의적 목적이 결합되어 설치되었다.
- ②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문제는 보조금의 교부, 자금의 대부 등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는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급증했다.
- ④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제도적 연결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해설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특수한 전문분야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광역권에서 업무가 수행되고 부처의 할거주의와 직할주의로 경쟁적으로 많이 설치되었다. 국가 소속기관이므로 주민의사가 반영되기 곤란하고 주민통제가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경

우 지방자치 논의가 활발했던 1980년대 후반에 지방자치로 인한 국가감독 곤란을 우려하여 급증하였다. (2010 비타민행정학 1327페이지) 답 : ③

6. 광역행정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지방수탁7급>

- ① 흡수통합은 자치단체를 몇 개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 ② 공동처리방식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광역적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③ 연합은 기존의 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인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광역행정을 전담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 ④ 자치단체 간 계약은 한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 ①은 흡수통합방식이 아니라, 합병방식이다. 흡수통합방식은 하나의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332페이지) 답 : ①

7.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가. 사무위탁 합	나. 지방자치단체조 합
다. 분쟁조정위원회 연합	라. 지방자치단체 연합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다, 라

해설 :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광역행정방식은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이다. 지문 중 사무위탁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수평적 협력방식이다. 사무위탁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식이고 지방자치단체조합은 2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하는 법인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수평적 협력방식이 아니라, 자치단체 간 분쟁에 관한 조정을 하는 기구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36~1138페이지) 답 : ①

8.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본 중앙-지방정부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재분배정책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익은 그들의 조세부담과는 역으로 결정되며, 주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 ② 개발정책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원칙적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는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④ 배당정책(allocational policy)은 치안, 소방, 쓰레기 수거, 공공매립지 제공 등이며, 주

로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해설 : 재분배정책은 응익주의(지방재정)가 아니라 응능주의(국가재정) 원리가 적용되므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재분배정책의 일환인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징수하여 자치단체에게 부동산교부세로 교부하고 있다(2009 비타민행정학 1141페이지). 답 :

①

② 신우파론 - 2009 비타민행정학 1141페이지

- ㉠ 합리적 인간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자유와 지방분권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정부 간 기능배분도 개인후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ex. 티보가설 - 발로 하는 투표>과 세입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공무원 개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 ㉡ 신우파론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앙-지방 간 기능배분을 보면, 재분배정책은 중앙정부가, 개발정책은 편익의 범위와 내후화 여부에 따라 지방 혹은 중앙정부가, 배당정책은 해당지역 주민의 선호가 중시되므로 지방정부가 각각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 배당정책 : 일반재원으로 모든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 치안, 환경보호시설 설치 등>

19.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및 시-도의 지도, 감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다.
-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 ㄹ.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ㄷ, ㄹ

해설 : ㄴ.과 ㄷ.이 틀리고 ㄱ.과 ㄹ.이 옳다. ㄴ. 국가와 자치단체 간 사무처리시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하에 협의조정기구(행정 협의조정위원회)를 두므로 틀린 지문이다. ㄷ.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은 경우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43페이지) 답 : ②

9. '○○광역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바꾸려고 한다. 이를 위한 현행법령의 절차로서 옳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정한다.
- ② ○○광역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한다.
- ③ ○○광역시시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법원에서 재결한다.

- ④ ○○광역시 주민투표로 확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 광역자치단체의 명칭변경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법률로 정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 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2010 비타민행정학 1366 페이지) 답 : ②

*** 우리나라의 구역개편**

구 분	관할구역 경계변경	구역변경	명칭변경	폐지·분합
광역자치단체	대통령령	법률	법률	법률
기초자치단체	대통령령	법률	법률	법률
구 분	구역변경		명칭변경	폐지분합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조례		조례	조례
일반구 및 읍·면·동	조례 (사·도지사에게 보고)		조례 (사·도지사에게 보고)	조례 (행안부 장관의 사전승인요)
리	조례		조례	조례

- 자치단체의 구역 또는 명칭변경, 폐지분합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함 (주민투표 사항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자치단체의 명칭변경 중 한자명칭은 대통령령으로 변경

10. 우리나라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조기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아닌 것은? <2009 서울9급>

- ①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될 경우 선결처분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이며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
- ⑤ 특별시의 부시장의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 지방공무원의 정원,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 등은 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2010 비타민행정학 1342페이지) 답 : ①

11. 다음 중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통제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서울7급>

- ① 감사원은 지방공무원에 대해 직무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중앙정부는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④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해설 : ② 행정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이다.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구의 경우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는 법령위반에 한하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독기관은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자치단체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 역시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342페이지) 답 : ②

1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 ①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할 수 있다.
- ③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에 대해서는 법률로써 정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자치권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자치입법권, 자치사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라 할 수 있다.

해설 : 사법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가처리사무이므로 자치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자치권에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이중 자치재정권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58페이지) 답 : ④

13. 다음 중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여 취소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국가사무를 수행한다.
- ④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⑤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공익에 부합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해설 : 본 문제는 문제의 핵심이 명확하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다. 만약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 당연히 ①이 정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부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지가 전제가 된 경우 법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아닌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할 필요도 없으며 감독기관이 직접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라는 문제이므로 모든 지문이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주민자체와 단체자체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찾아내는 문제로 봐야 한다. ①은 입법적 통제를 의미하므로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인 반면, ②는 행정적 통제로서 단체자치의 성격, ③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체자치의 성격, ④는 법률적 측면에서 자치권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단체자치의 성격, ⑤는 행정적 통제라는 점에서 단체자치의 성격을 지닌다. (2010 비타민행정학 1354~1355) 답 : ①

1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중 기관통합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2008 국가9급>

- ① 견제와 균형에 유리하다.

- ② 기관통합형 중 특히 위원회형은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하다.
- ③ 지방행정의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된다.
- ④ 정책결정과 집행의 유기적 관련성을 제고시킨다.

해설 :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있다(2009 비타민행정학 1164페이지). 답 : ①

***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 2009 비타민행정학 1164페이지**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이 대의기관(의회)에 집중 ⇨ 민주정치와 책임정치 구현에 적합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반목이 없음. ⇨ 행정의 안전성 확보 • 집행기관이 다수의 의원이나 위원으로 구성 ⇨ 자치행정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 • 결정과 집행 간의 유기적 관계 ⇨ 정책효과의 극대화 도모 • 소수의 위원 ⇨ 소규모 자치단체에 적합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의 총괄책임자 부재 ⇨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곤란 • 견제와 균형원리 미작동 ⇨ 권력 남용의 우려 • 한 기관이 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수행 ⇨ 행정의 전문성 경시 및 저하 • 소수의 위원 ⇨ 대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

15.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의 하나인 기관분립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 ②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보다 용이하다.
- ④ 기관통합형에 비해 행정부서 간 분과주의를 배제하는 데 유리하다.

해설 : ①은 기관통합형에 대한 설명이다.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된 형태로서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위원회나 의회가 집행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과정에 다양한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성 확보에 기여하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므로 전문성이 저하된다. ④ 기관분립형은 집행기관의 장에게 행정권이 통합적으로 주어짐으로써 부처할거주의를 막을 수 있다. (2009비타민행정학 1164~1165페이지) 답 : ①

16.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아닌 것은? <2008 서울9급>

- ① 시·도, 시·군 간 협력 행정이 미흡하여 갈등을 증대시킨다.
- ② 도와 시·군 간 엄격한 기능분리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 ③ 시·군·구에 대한 시·도의 통제기능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한다.
- ④ 동일지역 내 행정기관의 난립으로 인해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
- ⑤ 다층구조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의사전달 왜곡이 발생한다.

해설 : 우리나라의 경우 절충적 수권방식(포괄적 예시주의 : 사무를 예시하고 이를 포괄적용)을 채택하고 있어 예시규정이 모호하고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므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기

- ① 개인 및 지역 간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급 공동체는 필요한 최소수준을 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개인 및 지역의 삶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된 상태에서 상향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 ③ 개인이나 하급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 공동체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④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국가(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전통을 말한다.

해설 : ① 적극적 보충성원칙은 상급정부는 기초정부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재정적 여건 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은 소극적 보충성원칙에 해당된다. (2010 비타민 행정학 1379페이지) 답 : ①

18. 지방세원칙 중 하나인 부담분임의 원칙을 가장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주민세(개인균등할)
- ② 재산세
- ③ 레저세
- ④ 담배소비세

해설 : 부담분임(負擔分任)의 원칙은 분담성원칙으로서 모든 주민이 고르게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① 주민세는 균등할(개인균등할과 법인균등할)과 소득할로 나누어지는데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분담성원칙에 충실하다. 소득할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의 일정비율을 부과정수하므로 누진세와 부가세(附加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나머지는 모든 주민에게 균등하게 부담하는 조세가 아니며 해당되는 주민에게만 부과하는 조세이다. ②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는 주민에게 그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며 ③ 레저세는 경륜, 경마 등에서 발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이며 ④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소비할 때 부과하는 조세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79, 1180페이지) 답 : ①

23. 지방세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2009 서울7급>

- ① 부담보편의 원칙 :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는 동등하게 과세하고 조세감면의 폭이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 ② 국지성(지역성)의 원칙 : 지방세의 과세 객체는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동이 적고 그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국지화·지역화 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안정성의 원칙 : 지방세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관련이 깊으므로 지방세는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④ 응익성의 원칙 :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주민의 담세액이라는 반대급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 ⑤ 부담분임의 원칙 : 지방세의 세원은 특정한 자치단체에만 편재되어서는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없도록 가능한 한 모든 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해설 : ⑤ 부담분임의 원칙은 모든 주민이 고르게 부담하여야 하는 원칙이다. 모든 자치단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는 것은 보편성의 원칙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384페이지) 답 : ⑤

24. 지방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2009 국가7급>

- ㄱ. 지방세의 중요한 원칙으로는 응징성, 안정성, 보편성 등이 있다.
- ㄴ.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주행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 ㄷ.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 ㄹ.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 ㅁ.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ㅂ.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ㄹ
- ③ ㄴ, ㅁ ④ ㄷ, ㅂ

해설 : ㄴ. 목적세는 도공지지사(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이며 주행세는 보통세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ㅁ. 외채인 경우 발행한도 내이라도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385, 1391페이지) 답 : ③

i) 지방채 발행의 통제 - 비타민행정학 1390~1391페이지 : 차입의 자유가 남용되면 재정적 위기가 초래되므로(재정건전성의 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며 발행한도액을 초과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의 발행조건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하에 발행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다만, 발행한도액 범위 이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 다음 지방세 세목 중 시·군세가 아닌 것은? <2008 경남9급>

- ① 재산세
- ② 담배세
- ③ 면허세
- ④ 사업소세

해설 : 면허세는 도세이다. 사업소세는 2010년부터 폐지되었다. (2009 비타민행정학 1180페이지) 답 : ③

26. 최근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환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조세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 ② 지역 간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 ③ 지방교부세 총액이 감소될 수 있다.
- ④ 중앙과 지방과의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설 : 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세입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이므로 조세저항과는 무관하다. 조세저항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세율을 인상할 때 발생한다. ② 지역별로 세원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재정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ex. 국세인 특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면 고소득층이 밀집된 도시지역과 그렇지 않은 농촌지역의 격차는 더

2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재정지출의 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출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 ② 대규모 사업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재정규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 ④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지원을 의존재원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형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해설 : 재정자립도는 세입측면에서 총재원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의 총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지 못하므로 의존재원이 대부분인 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정도는 재정기준도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399페이지) 답 : ③

30. 지방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지방채는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 ② 기준재정수요액이 높을수록 재정력지수가 높다.
- ③ 국고보조금의 배정은 중앙정부에 재량권이 없다.
- ④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방재정이 건전하다.
- ⑤ 지방세의 종목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해설 : ① 지방채는 편익을 보는 미래세대가 부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이 제고되므로 맞는 지문이다. ② 재정력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이므로 기준재정수요액이 높을수록 재정력지수는 낮다. ③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시책상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서 국가의 감독통제가 많고 국가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한다. ④ 재정건전성은 재정자립도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경상수지 비율, 투자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측정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비례적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우리나라는 조세법정주의로서 법정외세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세율 등을 지방의회가 정할 수 없다. 답 : ①

31.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09 지방수탁7급>

- ㄱ.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의 제도가 있다.
- 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이 일치하고 있다.
- ㄷ.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 방식은 포괄적 예시 원칙을 폐지하고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ㄹ.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 ㅁ. 지방자치권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사법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해설 : 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2개의 행정시(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전환되어 자치계층은 1계층인 반면, 행정계층은 3~4계층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ㄷ.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보충성원칙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능배분방식은 포괄적 예시주의(절충형 수권)에 해당되므로 틀린 지문이다. ㄹ. 사법은 국가존립에 관련된 국가사무로서 자치사법권은 지방자치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답 : ③

7편 기출문제

20. 다음 중 민중통제의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
- ② 정당에 의한 통제
- ③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
- ④ 선거권에 의한 통제

해설 : 직업윤리에 의한 통제는 내부비공식통제로서 외부통제인 민중통제가 아니다. 나머지는 민중통제에 해당된다. (2009 1234페이지) 답 : ③

1. 우리나라에서 행정통제를 수행하는 내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2008 지방수탁9급>

ㄱ. 감사원	ㄴ. 국회
ㄷ. 헌법재판소 위원회	ㄹ. 국민권익 위원회
ㅁ. 행정안전부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ㄹ, ㅁ

해설 :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외부통제이다. 감사원(대통령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행정안전부(행정부 소속)는 내부통제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34페이지) 답 : ③

2.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국회8급>

- ①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로, 사후 통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 ② 전통적인 통제방식으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 ③ 옴부즈만은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⑤ 선거제도는 외부통제에 속한다.

해설 : 전통적 통제방식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며 외부통제이다. 현대로 올수록 외부통제에서 내부통제로 중심점이 옮겨오고 있다. (2010 비타민행정학 1452페이지) 답 : ②

3. 아래의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한 것은? <2008 서울9급>

ㄱ. 입법부에 의한 통제
ㄴ. 사법부에 의한 통제
ㄷ. 감사원에 의한 통제
ㄹ. 청와대에 의한 통제
ㅁ.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ㅂ. 시민에 의한 통제

ㄱ. 여론과 마스크
 ㉠. 옴부즈만 제도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ㄱ, ㄴ, ㄷ, ㉠
- ⑤ ㄱ, ㄴ, ㄹ, ㄱ, ㉠

해설 : 감사원은 대통령소속이므로 내부통제임을 주의하여야 하며 청와대,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도 내부통제이다. 나머지는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이라 하면 외국의 옴부즈만을 의미하며 이는 입법부소속으로서 외부통제에 해당된다. 단,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이므로 내부통제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34페이지) 답 : ⑤

4.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 서울9급>

-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② 행정통제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자유보전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③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 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행정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설 : ④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소속이므로 내부공식통제 수단에 해당된다. (2010 비타민 행정학 1293, 1454페이지) 답 : ④

5.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7급>

- ①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다.
- ②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 ③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최근 5년간의 소득세 · 재산세 · 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④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해설 : 인사청문회법에서 깊게 출제가 되었다. ④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는 주체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①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455페이지) 답 : ④

*** 인사위원회법 주요 내용**

제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①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의장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주의)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지만,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마쳐야 함.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의장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9 국회8급>

- ① 1809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어 실시된 제도로 입법부의 행정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 ② 전형적인 내부 행정통제의 하나로 행정권의 남용이나 부당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한다.
- ③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취소하는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융통성과 신속성이 높은 제도로 기존의 경직된 관료제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며 국가마다 동일한 형태를 지닌다.
- ⑤ 국민의 고발에 의해 임무수행이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직권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과 불평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①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 채택되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② 옴부즈만은 입법부소속으로서 내부통제가 아니고 외부통제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단,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므로 내부통제임을 주의해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로서 '이빨없는 감찰견(watchdog without teeth)'이라 하며 시정조치를 강제하고 행정결정을 취소하는 권한을 갖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④ 나라마다 다른 형태를 지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권이 인정되므로 맞는 지문이다. (2010 비타민 행정학 1455~1456페이지) 답 : ⑤

7.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지방수탁7급>

- ①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법원·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감독권

을 갖고 있다.

- ② 입법부에 속해 있지만 직무 수행시는 정치적 독립성을 지닌다.
- ③ 국민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어도 언론내용 등을 토대로 옴부즈만 자신의 발의에 의해 조사할 수 있다.
- ④ 옴부즈만이 조사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해설 : 옴부즈만은 사실의 조사 및 인정이 중요한 기능이며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 ③ 옴부즈만은 직권조사권과 사전심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35페이지) 답 : ①

* 옴부즈만의 특 징 - 2008 비타민행정학 1440페이지

- ㉠ 입법부 소속공무원 : 옴부즈만은 입법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입법부에서 선출되고 조사활동에 관하여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다만, 프랑스는 행정부 소속형).
- ㉡ 직무수행상의 독립성 :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며 업무에 대해서 의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 비당파성 : 옴부즈만은 당파성이나 정치성이 없는 조사직이다.
- ㉣ 사실조사와 간접통제 : 옴부즈만은 사실의 조사·인정이 중요한 기능이며 행정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이 없다. 따라서 관계기관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없으며 의회에 대한 보고나 신문을 통한 공표 등 간접적인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 이빨 없는 감찰견(watchdog without teeth)
- ㉤ 직권(職權)에 의한 조사 : 옴부즈만은 시민에 의한 민원제기가 없더라도 신문기사 등을 근거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 법원의 경우와는 달리 비공식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이루어진다.
- ㉦ 합목적성에 대한 조사·처리 :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해서도 조사·처리할 수 있다.

19. 현행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 국가9급>

- ① 사전심사청구제도
- ② 민원후견인제도
- ③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 ④ 복합민원 부서별 분리처리제도

해설 : 복합민원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민원으로서 부서별 분리되어서 처리되면 안 되며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해야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당해 내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게 하는 제도로써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37~1238페이지) 답 : ④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 ①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관계법령 등에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하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등의 미납을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③ 행정기관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사무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민원의 신청 :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민원의 접수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4.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초의 민원사항의 내용 변경 또는 갱신을 신청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제출되어 있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다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5.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교부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지역농협, 농협중앙회)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6. 민원서류의 이송 :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7.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사무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복합민원의 처리 :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에 대하여 처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일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복합민원 :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인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9. 처리결과의 통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0.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처리한 결과(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를 교부할 수 있다.

11.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사전심사의 청구

①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청구된 민원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미리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14. 민원사무심사관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5.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6. 민원후견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 안내 및 민원인과의 상담에 응하도록 할 수 있다.

17. 정보보호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 민원사무의 정기조사·검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기관이 관장하는 민원사무의 처리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9. 확인·점검·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효과적인 민원사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개선상황과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평가할 수 있다.

8.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008 서울9급>

- ① 기능중복의 제거
- ②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 ③ 관리과학의 활용
- ④ 책임의 재규정
- ⑤ 분권화의 확대

해설 : 구조적 접근은 조직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분권화의 확대, 통솔범위의 조정, 의사결정권한의 수정, 의사전달체계의 수정, 명령계통의 효율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③은 기술적 쇄신을 통하여 조직 내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하는 기술적 접근에 해당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53페이지) 답 : ③

* 조직개혁의 접근방법(2009 비타민행정학 1253페이지)

구분	초점	내용 또는 장단점
구조적 접근방법 (전통적 접근방법)	조직의 구조적 설계를 개선 〈예〉 분권화의 확대, 통솔범위의 조정, 의사결정 권한의 수정, 의사전달 체계의 수정, 명령체통의 효율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리전략(최적 구조의 설계) : 기능중복의 제거, 책임의 재규정, 조정 및 통제 절차의 개선, 표준적 절차의 간소화 등 • 분권화전략 : 구조의 분권화(공식적 조직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행태와 의사결정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성격)
기술적 접근방법 (과정적 접근방법)	기술적 쇄신을 통하여 조직 내 운영과정이나 일의 흐름을 개선 〈예〉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관리과학·체계분석·전산화 등 계량화 기법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 쇄신을 통하여 표준적 절차와 조직의 과업수행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행태와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술과 인간성 간의 갈등을 소홀
행태적 접근방법 (인간중심적 접근방법)	구성원에게 초점을 두고 인간행태의 변혁을 추구 - 조직발전기법〈예〉 감수성 훈련·태도조사, MBO 등을 통하여 자율적 행태변화를 유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권위주의적 행정문화에서는 성공하기 곤란하며 정부조직의 경우 법적 제약이 존재한다.
통합적 접근방법	통합적·총체적인 개선 (구조+기술+행태)	개혁추진자들의 실천적 작업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줌

20. 행정서비스현장제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2009 지방수탁9급>

- ① Charter Mark
- ② 시장성평가 (Market Testing)
- ③ 정보공개
- ④ 고객선택의 강조

해설 : ② 시장성평가는 단계별 민영화전략으로서 행정서비스현장제와는 무관하다. ① Charter Mark는 서비스개선의 보상으로 수상기관에게 부여하는 현장마크이므로 해당된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61, 235페이지) 답 : ②

* 시민현장제도(citizen's charter) : 1991년 메이저 행정부에서 실시	
㉠ 의의 : 모든 시민이 고객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의무조항과 일반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한 제도이다.	
㉡ 시민현장의 6가지 원칙	
서비스 기준설정	고객인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분명한 서비스 기준이 설정·공표
정보와 공개	서비스의 운영방법, 비용, 성과, 담당책임자 등에 관한 완전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 공개
선택과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에게 가능한 한 다양한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 • 이용자의 의견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기준설정에 수렴·반영
친절과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은 명찰을 달고 친절하고 도움이 되도록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는 이용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공평하게 제공되고, 이용자 편의의 관점에서 제공
시정조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충분한 해명과 함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
돈의 가치 (value for mo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는 가용자원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 • 이를 위해 서비스 운영성과에 대한 별도 평가를 실시

<p>㉔ 내용</p> <p>㉑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민의 권리로 인정</p> <p>㉒ 시민만족도의 조사와 기관 간 경쟁으로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p> <p>㉓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제기권에 대한 보장과 이에 대한 보상장치를 마련</p> <p>㉔ 서비스 개선의 보상으로 수상(受賞)기관에게 <u>헌장 마크(charter mark)</u>를 부여</p> <p>㉕ 한국의 행정서비스 헌장</p> <p>㉑ 의의 : 1998년 김대중 정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과 자치단체 등에게 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포하도록 명시</p> <p>㉒ 7가지 원칙 : i) 고객중심원칙, ii) 고객의 편에서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체적 서비스를 제시하는 원칙, iii) 최고수준의 서비스 원칙, iv) 편익/비용을 감안한 서비스 이행기준 제시, v) 신속한 정보자료 제공, vi)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보상의 명확화, vii) 고객참여를 통한 서비스 개선 등</p>
--

9. 균형성과평가(BSC)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2008 서울7급>

- ① 내부업무과정 관점
- ② 학습과 성장 관점
- ③ 재정적 관점
- ④ 환경적 관점
- ⑤ 고객의 관점

해설 : 균형성과표는 기존의 재무적 관점에서 의존하지 않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균형있게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프로세스(과정) 관점, 학습과 성장관점 4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 환경적 관점은 해당되지 않는다. (2009 비타민행정학 1259페이지) 답 : ④

10.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SC(balance score-card)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08 국가9급>

- ① MBO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성과평가
- ② NGO가 개발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 ③ PPBS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성과평가
- ④ ZBB를 대체하여 적용하는 성과평가

해설 :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수단에 의존했던 전통적 성과평가기법을 비판하고 대두된 성과측정기법으로서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내부과정관점, 학습 및 성장관점에서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구성하고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목표관리제(MBO)와 연계하여 성과를 측정하게 된다(2009 비타민행정학 1259). 답 : ①

11. 총체적 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2009 국회8급>

- ㄱ. 생산성 제고의 국민에 대한 대응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방식이다.
- ㄴ. TQM은 상하간의 참여적 관리를 의미하며 조직의 목표설정에서 책임의 확정, 실적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관과 부하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 ㄷ. 공공부문의 비시장성과 비경쟁성은 TQM의 필요성 인식을 약화시킨다.
- ㄹ. 조직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투입 및 과정보다 결과가 중시된다.
- ㅁ.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행태를 고객중심적으로 전환 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해설 : 총체적 품질관리란 고객만족을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원칙이다. ㄱ 맞는 지문이다. ㄴ은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내용(상하 간 참여, 목표 협의설정, 환류, 결과 중시)이다. ㄷ 총체적 품질관리는 민간부문과 달리 행정부문은 비시장성, 독점성, 비저정성, 최고관리자의 빈번한 교체, 유동적인 정치적 환경 등의 이유로 적용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있어 필요성인식을 약화시키므로 맞는 지문이다. ㄹ 과정을 중시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ㅁ 고객만족을 1차 목표로 삼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다. (2010 비타민행정학 1487~1490페이지) 답 : ③